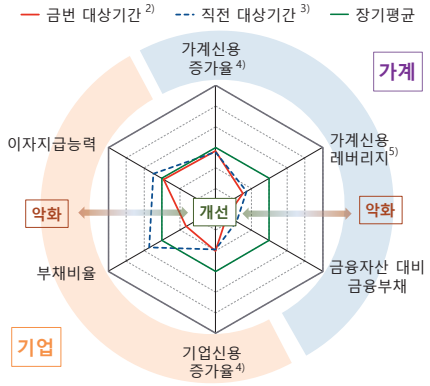
Ⅰ. 금융안정 상황

1. 가계 및 기업 신용 11
2. 금융 및 자산 시장 28
3. 금융기관 47
4. 대외부문 68
5. 금융제도 및 정책 79

1. 가계 및 기업 신용

- **가계신용**[1]은 1/4분기중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전 주택매매 및 주식 관련 대출 증가 등 영향으로 5월 이후 대출 증가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가계의 채무상환부담 완화로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으며, 취약차주 비중은 상승하였다.
- **기업신용**은 기업대출 증가율이 1/4분기중 은행과 대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회사채는 순상환되었다.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일부 개선되었으나 연체율은 올해 들어 다시 상승하여 장기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을 보였다.
- **민간신용 레버리지**(민간신용/명목GDP 비율)는 2025년말 197.9%로 가계와 기업 모두 2025년 2/4분기말 대비 하락하였으며, 명목GDP 성장에 힘입어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신용부문 평가) 가계신용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고 있으며 가계 및 기업의 채무상환능력 개선에도 불구하고 가계 취약차주와 일부 업종 기업의 신용위험이 여전히 높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Ⅰ-1-1. 가계 및 기업 신용 상황 변화 지도[1)]



주: 1) 각 지표별 최근 5년 평균을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금번 대상기간과 직전 대상기간 지표의 상대적 수준을 지도에 도시
2) 2025년 4/4분기말[부채비율과 이자지급능력은 25년말(중)]
3) 2025년 3/4분기말[부채비율과 이자지급능력은 24년말(중)]
4) 명목GDP 대비 가계 및 기업 신용 비율의 증가율
5) 명목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
자료: 한국은행 시산

(1) 가계신용

가계신용 증가세 확대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2] 기준) 규모는 2026년 1/4분기말 1,993.1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5% 증가하였다(그림 Ⅰ-1-2). 항목별로는, 가계대출이 1,865.8조원(가계부채 중 93.6%)이며, 판매신용(재화나 서비스 판매자가 제공하는 외상거래)은 127.3조원(6.4%)이다. 가계대출은 1/4분기중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를 앞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늘어난 주택매매[3]가 시차를 두고 대출에 반영된 데다 기타대출도 늘어나면서 5월 이후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다.[4]

[1] 가계가 보유한 채무는 금융기관의 자산 측면에서는 가계신용으로, 차주인 가계의 부채 측면에서는 가계부채로 지칭된다.
[2] 가계신용통계는 자금순환통계상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와 포괄범위에 차이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계신용의 가계는 일반가계를 의미하나 자금순환통계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를 포괄한다.
[3]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만호): 25년 11월 2.1 → 12월 2.1 → 26년 1월 2.3 → 2월 2.2 → 3월 2.7 → 4월 2.8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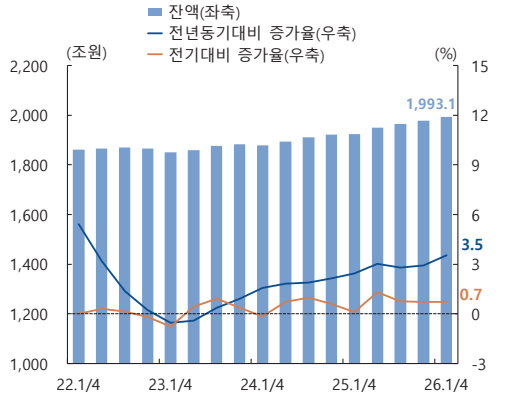
가계대출 월별 증가폭

(조원)

구분	25.7~9월[1)]	10~12월[1)]	26.1~3월[1)]	1월	2월	3월	4월	5월
전체	2.7	2.7	3.0	1.4	2.9	3.5	3.5	9.3
주택관련대출	4.3	3.2	3.4	3.0	4.1	3.0	5.5	4.0
기타대출	-1.6	-0.5	-0.8	-1.6	-1.2	0.5	-2.0	5.3

주: 1) 월평균
자료: 금융위원회

그림 Ⅰ-1-2. 가계신용[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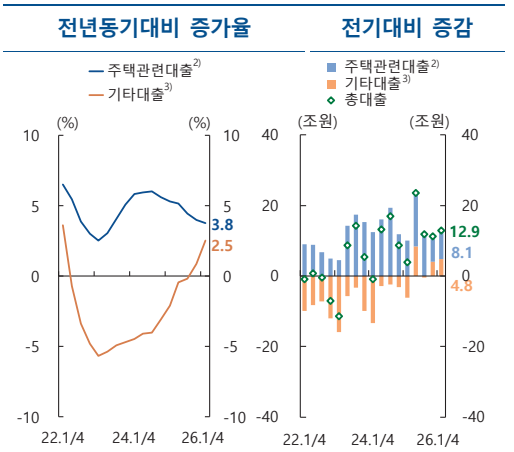


주: 1) 가계신용통계 기준
자료: 한국은행

대출유형별로 보면, 주택관련대출은 증가세 둔화가 이어진 반면 기타대출은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주택관련대출은 2026년 1/4분기말 1,178.6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8% 늘어나면서 2024년 4/4분기 이후 증가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다만, 금년 4월 이후에는 수도권 중심의 주택거래 확대 및 분양 증가[5]에 따른 중도금 납입수요 등으로 증가폭이 다시 커지는 모습이다. 기타대출은 신용융자 등 주식관련 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전년동기대비 2.5% 증가한 687.2조원을 나타냈다. 한편, 전기대비 증감액으로 보면, 2026년 1/4분기중 주택관련대출 및 기타대출은 각각 8.1조원 및 4.8조원 늘어났다(그림 I-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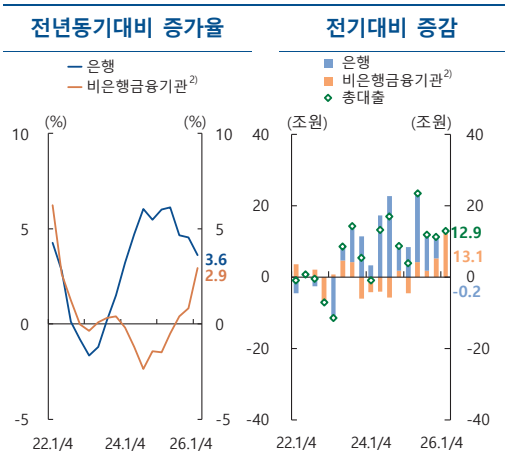
금융업권별로 보면, 은행 가계대출(1,009.6조원)은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비은행금융기관[6] 가계대출(856.2조원)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이다. 한편, 전기대비 증감액으로 보면, 2026년 1/4분기중 은행은 0.2조원 감소한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은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13.1조원 증가하였다(그림 I-1-4).

그림 Ⅰ-1-3. 대출유형별 가계대출[1] 변동



주: 1) 가계신용통계 기준
2)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3) 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보증대출 등
자료: 한국은행

그림 Ⅰ-1-4. 금융업권별 가계대출[1] 변동



주: 1) 가계신용통계 기준
2)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및 기타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 등 포함)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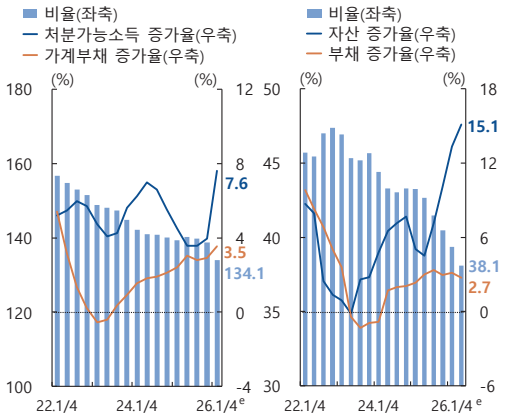
[5] 2026년 3월 누계(1~3월) 기준 전국 주택 분양 물량은 37,224호로 전년동기대비 73.4% 증가하였다.
[6] 가계신용통계 중 기존에 공표되었던「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기금의 주택담보대출」통계가 예금취급기관의 주택금융공사 미양도분과 금융기관 재원 대출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이차보전을 포함하는「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기금의 정책대출」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주택금융공사 양도분 및 주택도시기금의 자체 재원 대출이 비은행금융기관 업권에 포함되도록 전체 시계열을 수정하였다.

소득 및 자산 대비 채무상환부담은 큰 폭 완화[7]

소득 측면에서 본 가계 전반의 채무상환부담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6년 1/4분기말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계신용통계 기준)은 2025년 3/4분기말(139.7%) 대비 큰 폭 하락한 134.1%로 추정된다. 이는 가계부채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간 데 비해, 경제성장세 확대에 힘입어 처분가능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 기인한다(그림 I-1-5).

한편, 자산 측면에서의 채무상환부담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1/4분기말 기준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자금순환통계 기준)은 2025년 3/4분기말(40.5%)보다 큰 폭 하락한 38.1%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내주가 상승 등에 힘입어 가계의 금융자산이 크게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한다[8](그림 I-1-5).

그림 Ⅰ-1-5. 가계 채무상환부담 변동[1]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2) 2026년 1/4분기 처분가능소득은 동 분기 국민총소득에 직전 3년간(23~25년) 국민총소득 대비 처분가능소득 비율의 연평균을 곱하여 추정한 후 최근 4분기(25년 2/4분기~26년 1/4분기)를 합산
3) 가계신용통계 기준
4) 자금순환통계 기준(26년 1/4분기는 추정치)
자료: 한국은행

[7]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부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가계의 부채 및 소득, 자산 간 비율로, 일반적으로 부채 보유 가구 또는 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의 움직임과는 다를 수 있다.

[8] 가계의 금융자산은 주식시장 호황 등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금융부채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등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취약차주 비중 상승

전체 가계부채 보유 차주 중에서 채무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취약차주의 비중은 상승하였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9]인 취약차주가 전체 차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차주 수 기준)은 2026년 1/4분기말 6.7%로 2025년 3/4분기말(6.4%)보다 상승하였으며, 이들 취약차주가 보유한 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5.2%)도 3/4분기(4.9%)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표 I-1-1).

한편 차주의 신용도 및 소득수준별 분포를 보면, 고신용 및 고소득 차주의 대출 비중이 대체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Ⅰ-1-1. 취약차주 비중[1] 및 차주 특성별 가계대출 구성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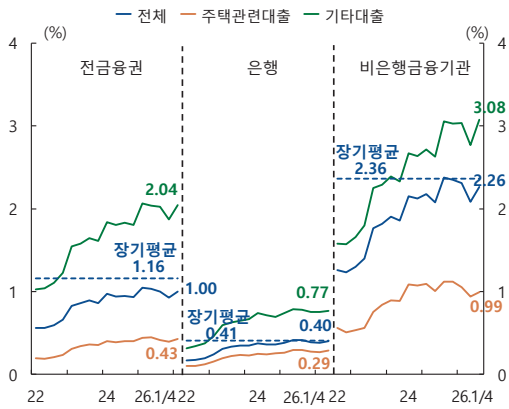
(%)		23년 평균	24년 평균	25년 1/4	25년 2/4	25년 3/4	25년 4/4	26년 1/4
취약차주	차주 수	6.7	6.7	6.9	6.8	6.4	6.7	6.7
	대출금액	5.5	5.3	5.4	5.3	4.9	5.1	5.2
신용등급[3]	저	3.8	3.8	4.2	4.2	3.7	3.9	4.1
	중	18.5	17.7	17.6	17.5	16.7	16.7	16.6
	고	77.7	78.4	78.2	78.3	79.5	79.3	79.3
소득수준[4]	저	11.0	11.0	10.9	11.0	11.0	10.9	11.0
	중	26.5	26.2	25.8	25.5	25.2	25.0	24.8
	고	62.5	62.8	63.3	63.6	63.8	64.1	64.2

주: 1) 시점별 가계대출 전체 차주 수 및 대출금액 대비
2) 대출금액 기준
3) 고신용(신용점수 840점~), 중신용(665~839점), 저신용(~664점)
4) 고소득(상위 30%), 중소득(상위 30~70%), 저소득(하위 30%)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가계대출 연체율 낮은 수준에서 소폭 상승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6년 1/4분기말 1.00%로 장기평균을 하회하고 있으나 금년 들어 소폭 상승하였다. 대출유형별로 보면, 주택관련대출 및 기타대출 연체율은 각각 0.43% 및 2.04%로 모두 전분기 대비 상승하였다. 업권별로는 은행 연체율이 소폭 상승(25년 4/4분기말 0.38% → 26년 1/4분기말 0.40%)한 데 비해, 비은행금융기관은 2026년 1/4분기 들어 다소 큰 폭으로 상승(2.08% → 2.26%)하였다(그림 I-1-6).

그림 Ⅰ-1-6.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1] 가계대출 연체율[2][3]



주: 1)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회사(보험계약대출 제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2)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은 1일 이상 원금 또는 1개월 이상 이자 연체 기준)
3) 장기평균은 2010년 1/4분기~2026년 1/4분기중 평균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9] 2021년부터 개인의 신용평가제도가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전환됨에 따라 고신용을 신용점수 840점 이상(NICE신용정보 신용점수 기준, 이하 동일), 중신용을 신용점수 665점 이상 839점 이하, 저신용을 신용점수 664점 이하로 각각 설정하였다. 취약차주 특성에 근접해 있는 잠재 취약차주(다중채무자이면서 중소득 또는 중신용, 이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차주)의 비중은 2026년 1/4분기말 18.0%이다(25년 4/4분기말은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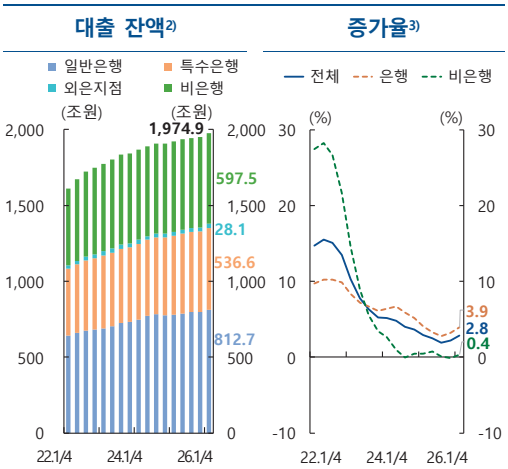
(2) 기업신용

기업대출 증가율 소폭 상승

금융기관의 기업대출은 2026년 1/4분기말 기준 1,974.9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8% 증가하여 2025년 3/4분기(1.9%)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대출태도 완화 등으로 은행을 중심으로 기업대출 증가율이 상승하였으며, 대기업 대출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금융업권별로 보면, 은행 기업대출은 2026년 1/4분기말 1,377.4조원(일반은행 812.7조원, 특수은행 536.6조원, 외은지점 28.1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9%(일반은행 4.2%, 특수은행 3.0%) 증가하였으며, 대출태도 완화[10] 등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소폭 상승하였다. 비은행금융기관[11]의 기업대출은 597.5조원[12]으로 전년동기대비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신용위험 경계감 확대, 대출건전성 관리 지속 등으로 비은행금융기관들이 대출태도 강화 기조[13]를 이어가는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I-1-7).

그림 Ⅰ-1-7. 금융기관[1] 기업대출



주: 1) 은행은 일반은행, 특수은행 및 외은지점, 비은행금융기관은 저축은행, 상호금융(새마을금고 포함), 보험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합계 기준
2) 기말 기준, 금융 및 보험업 제외 기준
3) 전년동기대비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기업규모별[14]로 보면, 대기업대출(328.8조원, 전년동기대비 6.5%)의 증가폭이 커졌고, 중소기업대출(1,643.7조원, 2.2%)의 경우 중소법인(924.2조원, 2.7%)의 대출 증가율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개인사업자(719.5조원, 1.6%)는 이전 수준을 유지하였다(그림 I-1-8). 한편, 개인사업자대출 차주의 가계대출을 포함한 자영업자대출[15]은 2026년 1/4분기말 1,095.5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7% 증가하였다.

[10]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 국내은행의 기업 대출태도(대기업: 25년 4/4분기 3 → 26년 1/4분기 11 → 2/4분기<전망> 3, 중소기업: -3 → 3 → 0)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분기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대기업에 대해서는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한국은행 보도자료, 26년 4월 21일)를 참조하기 바란다.

[11] 비은행금융기관 기업대출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및 새마을금고), 보험회사(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합계 기준이다. 다만 자료 제약으로 인해 일부 업권은 기업대출에 금융보험업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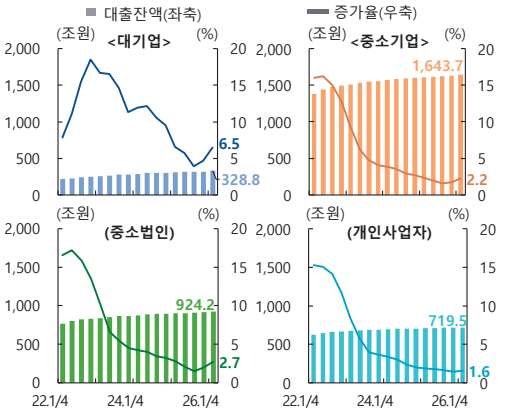
[12] 업권별 기업대출 규모는 상호금융 399.9조원(비은행 기업대출 중 66.9%), 보험회사 91.0조원(15.2%), 여신전문금융회사 67.9조원(11.4%), 저축은행 38.7조원(6.5%)이다.

[13]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 상호저축은행(25년 4/4분기 -13 → 26년 1/4분기 -12 → 2/4분기<전망> -10), 상호금융(-29 → -34 → -32), 신용카드회사(7 → 0 → -7), 생명보험회사(-13 → -13 → -11) 등 조사대상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모든 업권에서 강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한국은행 보도자료, 26년 4월 21일)를 참조하기 바란다.

[14] 자료 제약으로 기업규모별 대출 분석 시 기업규모가 구분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 일부는 제외하였다.

[15] 자영업자대출 현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Ⅲ. 자영업 구조 변화에 따른 리스크 점검 및 대응방향」을 참조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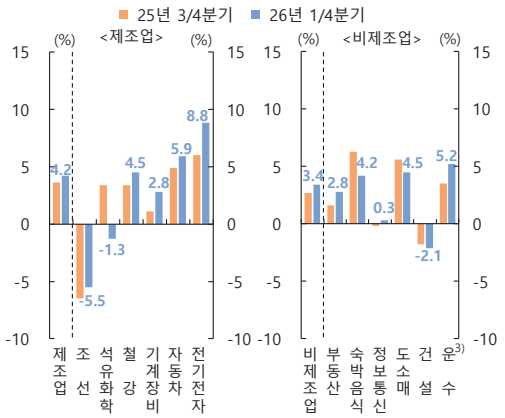
그림 Ⅰ-1-8. 기업규모별 기업대출[1)2)3)]



주: 1)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합산 기준(비은행금융기관은 자료 제약으로 일부 업권 및 기간에 금융보험업 대출을 포함)
2) 대출잔액은 기말,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3) 중소법인은 중소기업 중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기업을 의미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업종별[16]로 보면, 제조업 대출(전년동기대비 증가율 4.2%)의 경우 조선과 석유화학 업종에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를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율이 소폭 상승하였다. 비제조업 대출(3.4%)은 부동산업과 운수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그림 I-1-9).

그림 Ⅰ-1-9. 주요 업종별 금융기관 기업대출[1)] 증가율[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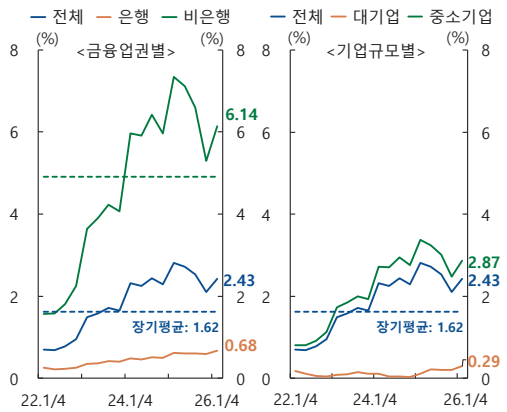


주: 1) 업종별 분류가 가능한 은행 및 일부 비은행금융기관 합산 기준
2) 전년동기대비
3) 해운, 항공 제외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기업대출 연체율 재상승

기업대출 연체율은 2025년 4/4분기말(2.11%)까지 하락세가 이어지다 다시 상승하여 2026년 1/4분기말 기준 2.43%를 기록하였으며, 장기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금융업권별로 보면,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0.68%로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한 가운데, 비은행금융기관(6.14%)은 상호금융 등의 연체채권 매·상각 규모 확대로 2025년 4/4분기말(5.30%) 하락하였다가 2026년 1/4분기 들어 다시 상승하였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2026년 들어 대기업대출 연체율(0.29%)은 소폭 상승하였으며 중소기업대출 연체율(2.87%)은 전년말까지의 하락세에서 상승 전환하였다(그림 I-1-10).

그림 Ⅰ-1-10. 금융업권[1)] 및 기업규모[2)]별 기업대출 연체율[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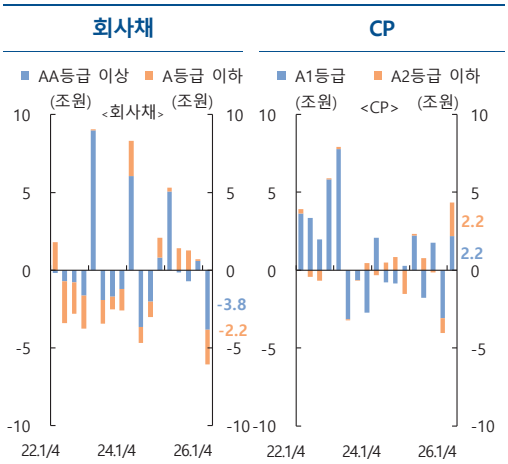
주: 1) 은행은 국내은행, 비은행은 저축은행, 상호금융(새마을금고 포함), 보험회사(보험계약대출 제외)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합산 기준
2) 규모별 분류가 가능한 은행 및 일부 비은행금융기관 합산 기준
3)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은 1일 이상 원금 또는 1개월 이상 이자 연체 기준)
4) 장기평균은 2010년 1/4분기~2026년 1/4분기중 평균, 전체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16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기업대출은 세부 업종별 분류가 되지 않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회사채 순상환

직접금융시장에서의 기업자금 조달 현황을 살펴보면, 회사채는 만기도래 규모가 커진 가운데 금리 변동성 확대에 따른 발행 부담 및 투자수요 약화 등으로 우량물과 비우량물 모두 2026년 1/4분기중 상당폭 순상환되었다.[17] CP는 연말 일시상환분의 재발행 및 회사채 상환목적 발행 확대 등으로 2026년 1/4분기중 순발행되었다[18](그림 Ⅰ-1-11).

그림 Ⅰ-1-11. 기업의 직접금융시장 조달[1]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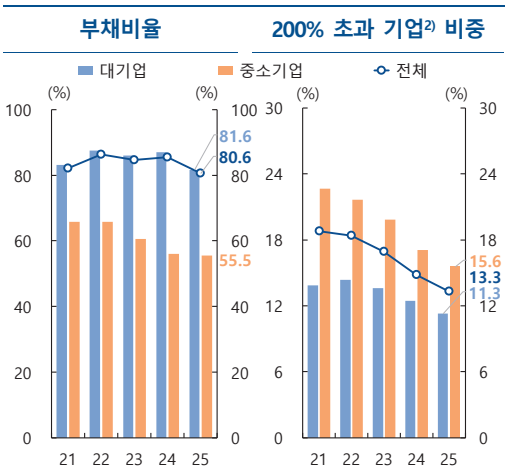
주: 1) 금융지주회사, 유동화회사(SPC) 발행분 제외, 순발행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연합인포맥스

부채비율 하락

기업[19]의 재무구조 안정성을 나타내는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은 2025년말 80.6%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2024년말(85.5%) 대비 하락하였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24년말 56.1% → 25년말 55.5%)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대기업(87.0% → 81.6%)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의 하락과 함께 200%를 초과하는 기업(과다부채기업)의 비중도 2025년말 13.3%로 전년말(14.8%)에 비해 낮아졌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24년말 12.5% → 25년말 11.3%)과 중소기업(17.1% → 15.6%) 모두 하락하였다(그림 Ⅰ-1-12).

그림 Ⅰ-1-12. 기업규모별 부채비율[1]



주: 1) 부채/자기자본, 기말 기준
2) 완전자본잠식 기업 포함
자료: VALUE 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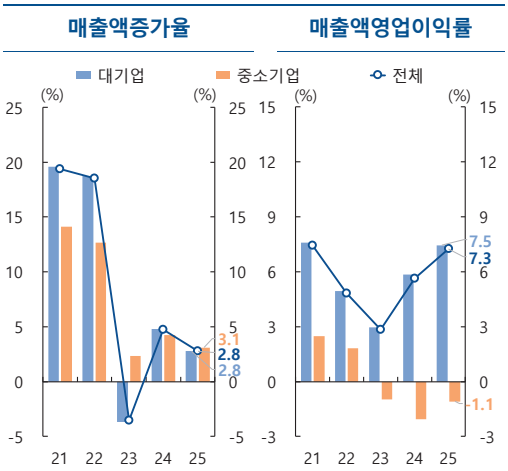
[17] 2026년 4~5월중 회사채는 우량물(3.6조원)과 비우량물(1.4조원) 모두 순상환되었다.
[18] 2026년 4~5월중 CP는 우량물(1.8조원)과 비우량물(0.3조원) 모두 순발행되었다.
[19] 이하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5년 4/4분기말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상장기업 및 일부 비상장기업 중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총 2,854개 기업(대기업 1,523개, 중소기업 1,331개)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속보성 있는 분석을 위해 주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분석 결과가 외감기업 등 더 큰 표본을 활용한 분석 결과와 차이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성장성 둔화 및 수익성 개선

기업의 성장성을 보여주는 매출액증가율(전년 동기대비)은 2025년 2.8%로, 부동산, 숙박음식, 운수 등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2024년(4.8%) 대비 하락하였다.[20]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24년 4.8%→25년 2.8%)과 중소기업(4.2%→3.1%) 모두에서 성장성이 둔화하였다.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은 2025년 7.3%를 기록하며 전년(5.6%)에 비해 상승하였다.[21]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상승(24년 5.8% → 25년 7.5%)한 가운데 중소기업도 마이너스 폭이 축소(-2.1% → -1.1%)되었다(그림 Ⅰ-1-13).

그림 Ⅰ-1-13. 기업규모별 매출액증가율[1] 및 매출액영업이익률[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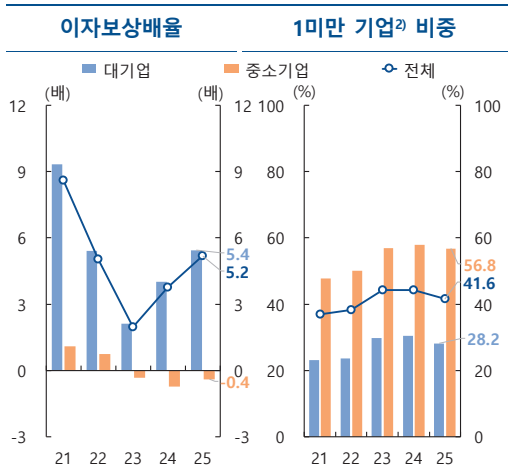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2) 영업이익/매출액
자료: VALUE Search

이자지급능력 소폭 개선

기업의 이자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22](영업이익/총이자비용)은 2025년 5.2배로 2024년(3.8배) 대비 상승하였다.[23]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24년 4.0배 → 25년 5.4배)과 중소기업(-0.7배 → -0.4배) 모두 수익성이 개선됨에 따라 이자보상배율이 2024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중소기업은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를 지속하였다.

이자보상배율이 1을 하회하는 취약기업의 비중은 41.6%로 2024년(44.3%)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그림 Ⅰ-1-14).

그림 Ⅰ-1-14. 기업규모별 이자보상배율[1]



주: 1) 영업이익/총이자비용
2) 영업손실 기업 포함
자료: VALUE 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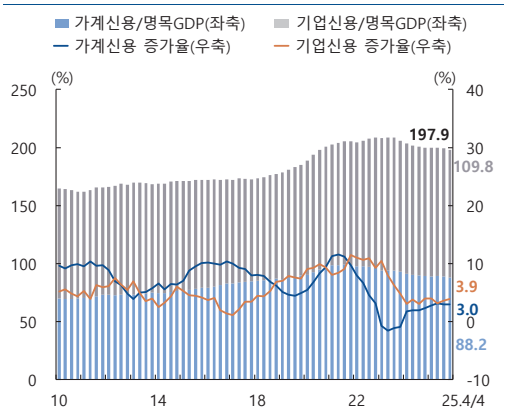
[20] 부동산(24년 17.2% → 25년 -28.5%), 숙박음식(3.9% → -9.6%), 운수(11.7% → -0.1%) 등 업종의 매출액증가율 저하가 두드러졌다.
[21] 업종별로 보면, 운수(24년 10.2% → 25년 6.8%), 자동차(7.6% → 5.2%) 등 업종에서 전년대비 하락하였으나, 운송장비(6.8% → 12.7%) 등을 중심으로 개선되었다.
[22] 이자보상배율 계산 시 분자는 영업이익을, 분모는 회사채 이자 등을 포함한 총이자비용을 활용하였다.
[23] 이자보상배율의 장기평균(10년~25년)은 전체 5.1배, 대기업 5.4배, 중소기업 0.7배이다.

(3) 신용 레버리지

민간신용 레버리지 하락세 지속

민간신용[24] 레버리지(민간신용/명목GDP 비율[25])는 2025년 4/4분기말 197.9%[26]로 2/4분기말(199.6%) 대비 1.7%포인트 하락하였다. 부문별로 보면, 2025년 4/4분기말 가계신용/명목GDP 비율은 88.2%로 2/4분기말(89.3%) 대비 1.2%포인트 낮아졌으며, 기업신용/명목GDP 비율도 109.8%로 2/4분기말(110.3%)보다 0.5%포인트 하락하였다[27](그림 Ⅰ-1-15). 향후에도 명목GDP 성장에 힘입어 이러한 하락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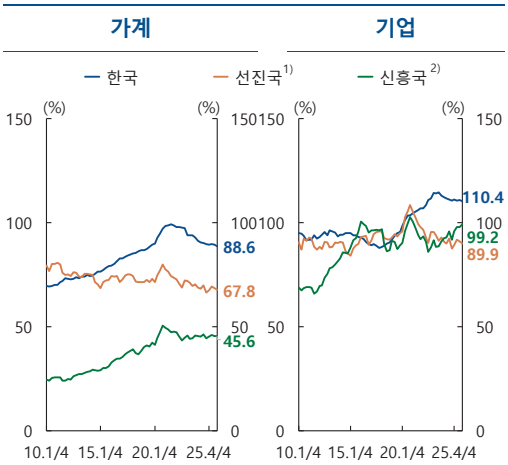
그림 Ⅰ-1-15. 부문별 민간신용[1] 레버리지 및 증가율[2]



주: 1) 자금순환통계 기준
2)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민간신용 레버리지를 BIS 기준 선진국 및 신흥국 평균과 비교해 보면, 2025년 4/4분기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가계신용 레버리지(88.6%)와 기업신용 레버리지(110.4%)는 모두 선진국 및 신흥국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그림 Ⅰ-1-16).

그림 Ⅰ-1-16. 글로벌 민간신용 레버리지 추이와 비교



주: 1) 선진국은 한국, 호주, 캐나다, 미국, 스위스 등 16개국(홍콩은 분포에서 제외)
2) 신흥국은 중국, 러시아, 튀르키예, 브라질 등 16개국
자료: BIS(6월 15일 발표 기준)

24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이하 'BCBS', 2010)는 민간신용을 '가계 및 비금융기업에 공급하는 모든 형태의 채무(debt funds)'로 넓게 정의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민간신용 지표는 자금순환통계 기준 가계(대출금, 정부융자) 및 기업(대출금, 채권, 정부융자) 부채의 합을 이용하였다.

25 민간부문의 레버리지 수준 평가 시 민간신용 부문별 증가율, 가계 및 기업의 채무상환부담, 주택가격 수준, 은행 레버리지 등 다양한 금융·실물지표가 활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BCBS(2010)가 권고한 공통 참고지표(common reference guide)인 민간신용/명목GDP 비율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26 민간신용 레버리지를 발표하는 BIS 44개국 중 우리나라의 민간신용 레버리지는 룩셈부르크(420.2%), 네덜란드(260.0%), 스위스(251.9%) 등에 이어 11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25년 4/4분기말 기준).

27 민간신용 레버리지의 부문별 장기평균(10년 1/4분기~25년 4/4분기)을 살펴보면, 가계부문은 84.0%, 기업부문은 98.8%로, 2025년말 기준 가계(88.2%) 및 기업(109.8%) 신용 레버리지는 모두 장기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참고 1.

주택소유 유형별 가계의 재무건전성 평가[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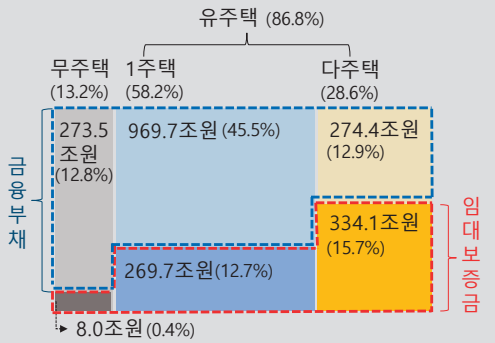
우리나라 가계는 전체 자산 중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아 주택소유 유형에 따라 자산-부채 구성이 크게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보다 면밀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주택소유 유형별로 구분하여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가계 단위 미시자료(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부채DB)[29]를 활용하여 주택소유 유형별로 부채보유 가구의 상황을 분석하였다.

주택소유 유형별 가구 및 부채 현황

주택소유 유형에 따라 부채 구성이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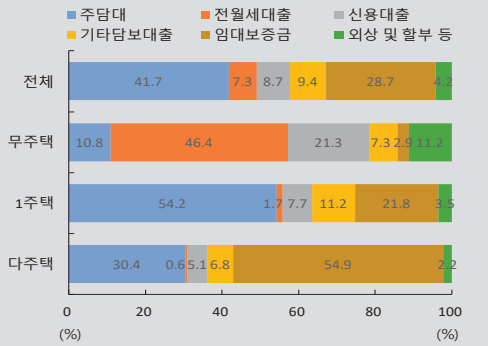
2025년 3월말 기준 우리나라 가구(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30]) 중 부채(임대보증금 포함)[31]를 보유한 가구는 1,316만 가구로 이들은 총 2,129.5조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 이들 중 유주택 가구(938.3만 가구)의 부채는 전체의 86.8%인 1,847.9조원이며, 무주택 가구(377.7만 가구)의 부채는 281.5조원이다. 유주택 가구의 경우 보유주택 수에 따라 부채의 유형이 상이한 모습으로, 부채보유 가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1주택 가구는 주로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매입을 위한 금융부채가 많은 데 비해 2주택 이상 다주택 가구의 경우 부채의 절반 이상이 임대보증금으로 나타났다(참고 1-1). 이는 그동안 1주택자가 추가적으로 주택을 매입할 때 금융기관 대출보다는 상당부분 임대보증금을 활용해 왔음을 시사한다. 한편 무주택 가구의 경우 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한 전세대출이나 생활비 용도의 신용대출 등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참고 1-2).

참고 1-1. 주택소유 유형별 부채 현황[1)2)]



주: 1) 2025년 3월말 기준
2) 부채보유 가구 전체 환산 기준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금융복지조사)

참고 1-2. 부채 유형별 비중[1)2)]



주: 1) 2025년 3월말 기준
2) 부채보유 가구 기준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금융복지조사)

---

[28] 본고는 고은아 · 이정혁(안정총괄팀)이 작성, 이정연(금융안정기획부장) · 김정호(안정총괄팀장)가 검토하였다.
[29] 본고에서는 보유주택 수에 따른 가계의 재무 현황, 채무상환능력 및 부실위험 등을 점검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25년 3월 기준 1.87만 가구)와 가계부채DB(26년 1/4분기말 기준 235만 차주)를 활용하였다.
[30]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표에서 가구의 자산 및 부채 항목은 매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소득, 지출, 원리금상환액 항목은 직전연도 연간(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다.
[31] 전세제도가 임대인이 주택을 담보로 임차인에게 자금을 차입하는 일종의 레포거래('Housing repo')인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 부채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른 금융부채에 임대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가계신용통계 기준에 따른 가계부채와는 차이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택소유 유형별 재무건전성 점검

보유주택 수가 많을수록 순자산 측면에서 양호하지만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상승

가구의 평균 자산 및 부채 모두 보유주택 수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부채보다 보유 부동산 자산가치가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순자산 측면에서 유주택 가구가 무주택 가구에 비해 재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택가격 조정에 따른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다. 금융자산을 통한 부채 대응능력을 살펴보면, 부채는 보유주택 수가 늘어날수록 상당폭 증가하는 데 비해 금융자산 규모는 큰 차이가 없어 유주택 가구의 유동성 조달 능력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무주택 가구의 경우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유주택 가구보다 크게 낮은 편이지만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현금화가 어려운 임차보증금이 금융자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참고 1-3).

참고 1-3. 주택소유 유형별 가구의 재무상황[1] 비교

(억원,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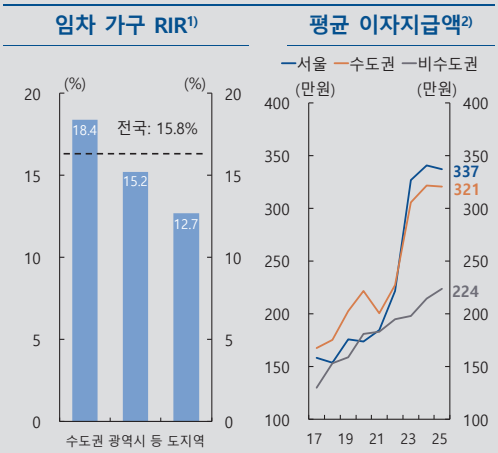
		무주택	유주택	1주택	다주택
자산·부채	총자산	2.20	8.23	7.06	13.50
	부동산	0.62	6.55	5.53	11.16
	금융자산(①+②)	1.37	1.24	1.12	1.79
	① 임차보증금	0.91	0.17	0.18	0.15
	② 예금, 주식 등	0.46	1.07	0.94	1.64
	부채(①+②)	0.75	2.02	1.71	3.43
	① 금융부채	0.73	1.58	1.50	1.93
	② 임대보증금	0.01	0.44	0.20	1.50
	부채/금융자산	0.55	1.63	1.53	1.92
	순자산	1.45	6.21	5.36	10.07

주: 1) 2025년 3월 기준, 금융부채보유 가구당 평균 금액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금융복지조사)

무주택 가구의 부채상환부담은 낮은 편이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월세 부담이 상존

무주택 가구는 가구당 금융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데다 대체로 임차보증금 범위 내에서 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레버리지 측면에서의 재무위험은 제한적인 편이다. 하지만 최근 전월세가격 상승[32] 등으로 임차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일부 무주택 가구의 재무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33] 특히 수도권의 경우 높은 주택가격 등으로 임차료도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됨에 따라 임차 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18.4%, RIR, Rent-Income-Ratio)이 비수도권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의 전세가격이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수도권 거주 무주택 가구의 평균 이자지급액도 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 확대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비수도권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참고 1-4).

참고 1-4.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및 이자 부담 현황



주: 1) 2024년 기준, 월임대료/월소득
2) 금융부채보유 무주택 가구, 연간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2024년 주거실태조사), 한국은행 시산(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32] 2023~2025년 중 평균 월세가격(한국부동산원, 기말 기준)은 2023년 1.0%, 2024년 4.0%, 2025년 7.1% 상승하였으며, 평균 전세가격(한국부동산원, 기말 기준)도 2023년에 6.9% 하락하였으나 2024년 4.4%, 2025년 4.2%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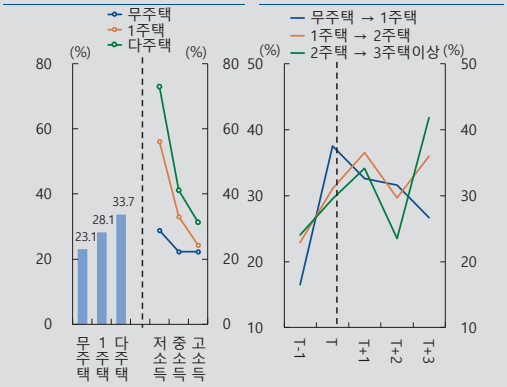
[33] 월세 비중 확대가 임차 가구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은 2025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 <Ⅱ. 주요 현안 분석> 「최근 주택시장의 특징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참고하기 바란다.

다주택 가구는 자산 측면의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지만 소득 측면은 취약

소득 측면에서의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을 살펴보면, 보유주택 수가 많거나 소득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주택 가구의 경우 평균 DSR이 33.7%로 무주택 및 1주택 가구에 비해 높았으며, 중·저소득 가구[34]의 DSR은 관리 수준(40%)을 상회하고 있다. 한편 보유주택 수 증가(무주택 → 1주택 → 다주택)에 따른 가구의 DSR 변화를 분석한 결과[35], 보유주택이 늘어나는 시점에 공통적으로 DSR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무주택 가구에서 1주택 가구로 변경된 경우 DSR이 일시에 크게 상승했다가 소득 증가, 원금상환 등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하락하는 반면, 다주택 가구는 주택매입 2년 경과 이후 다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다. 이는 임대 계약 갱신 시점에서의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부채 증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36](참고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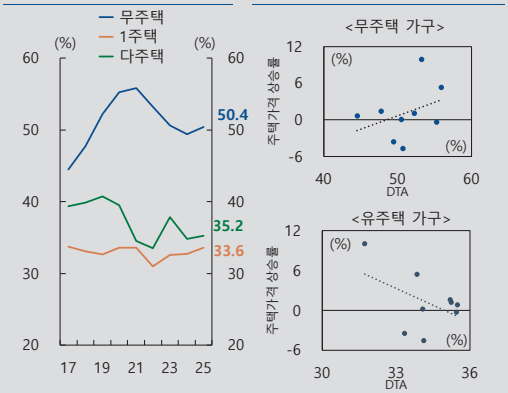
한편 자산 측면에서의 채무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자산 대비 부채비율(DTA, Debt To Asset ratio)을 시산해 본 결과, 1주택(33.6%) 및 다주택(35.2%) 가구가 무주택(50.4%) 가구보다 크게 낮아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했던 2021~2022년중 무주택 및 1주택 가구 간 DTA 격차가 큰 폭으로 확대된 점에 비추어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이들 간 격차가 더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가격 상승 시 유주택 가구는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높은 만큼 DTA가 대체로 개선되는 데 비해, 무주택 가구는 부채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전월세대출의 증가 등으로 DTA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이다(참고 1-6).

참고 1-5. 주택소유 유형별 DSR 및 단계별 DSR 변화[1)]



주: 1) 금융부채보유 가구 기준
2) 2025년 3월 기준
3) 원리금상환액(전월세보증금 제외)/처분가능소득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금융복지조사)

참고 1-6. DTA 추이 및 주택가격과 DTA 간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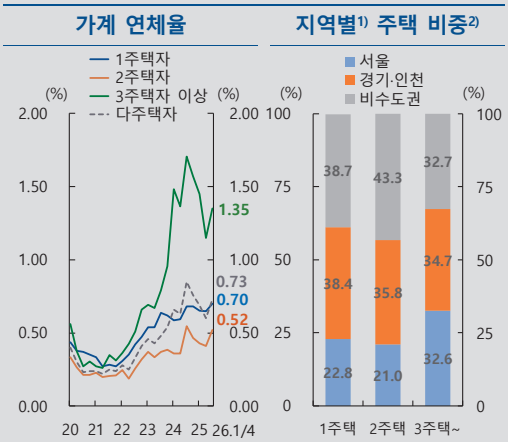
주: 1) 금융부채보유 가구, 각 연도 3월 기준
2) 총부채/자산평가액
3) 2017~2025년 금융부채보유 가구의 연도별 평균 DTA와 주택가격 상승률(전년대비) 간의 상관관계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부동산원

[34]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하위 30%는 저소득층, 상위 30%는 고소득층, 그 외는 중소득층으로 구분하였다.
[35] 2017~2025년 간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무주택 → 1주택 또는 1주택 → 다주택으로 이동하는 사건(event)들을 식별한 후, 해당 사건 전후 가구의 DSR 수준 변화를 추적해 보았다. 단, 사건 식별 시 상태가 바뀌기 1년 전(T-1), 변화 시점(T), 변화 1년 후(T+1) 등 최소 3개년의 연속 관측치가 존재하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36] 무주택 가구에서 1주택 가구가 되는 경우 주택매입 1년 후 평균 원리금상환액이 전년대비 4.8% 증가, 평균 처분가능소득은 전년대비 20.8% 증가하였다. 한편 1주택 가구에서 2주택 가구, 2주택 가구에서 3주택 이상 가구가 되는 경우 주택매입 3년 후 전년대비 평균 원리금상환액이 각각 36.9%, 76.7% 증가하고 평균 처분가능소득은 각각 12.9% 증가, 0.6% 감소하였다.

3주택 이상 보유 차주의 건전성 악화되는 추세

2021년 이후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전반적인 가계대출 연체율이 높아진 가운데 특히 3주택 이상 보유 차주의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다주택자의 연체율[37] (가계부채DB 기준)은 2026년 1/4분기말 0.73%로 1주택자(0.70%)에 비해 소폭 높은 수준이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로 한정해 보면 1.35%로 크게 높은 모습이다. 3주택 이상 차주가 보유한 주택의 67.3%가 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최근 다주택자에 대해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한 점[38] 등을 고려하면 이들의 수도권 지역 주택 매도 및 관련 대출 상환을 통한 재무건전성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39](참고 1-7).

참고 1-7. 가계대출 연체율 및 지역별 주택 비중



주: 1) 주택 소재지 기준
2) 주택 수 기준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평가 및 시사점

그동안 가계부채가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주택 보유 유무와 보유주택 수에 따라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차별화되어 온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무주택 가구는 상대적으로 가구당 부채 규모가 작고 임차보증금 한도 내에서 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부채상환부담은 낮은 편이다. 다만 최근 수도권의 전월세가격 상승 등으로 늘어난 주거비용 부담이 소비와 저축 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주거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정책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유주택 가구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순자산 규모가 확대되며 무주택 가구에 비해 재무 구조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1주택 가구는 다주택 가구와 비교 시 DSR이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등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어 실거주 목적의 1주택 가구에 대해서는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접근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다만, 향후 시장금리 상승과 함께 주택가격이 조정을 받을 경우 차입이 많은 유주택자들은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DSR 상승), 담보가치 하락(LTV 상승) 등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다주택자의 경우 대출 및 임대보증금을 활용한 구조로 인해 시장금리 및 주택가격 변동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전월세가격 변동에 따라 임대보증금 반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매입 후에도 시차를 두고 상환부담이 추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여 과다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 대해 선제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질서 있는 주택 매도를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37 동 연체율은 가계대출을 대상(사업자대출 불포함)으로 한 것으로 부동산임대업 대출 연체율과 차이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Ⅲ. 자영업 구조 변화에 따른 리스크 점검 및 대응방향」을 참조하기 바란다.
38 정부는 2026년 4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도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되었다.
39 다만,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만기일시상환 차주를 중심으로 유동성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참고 2.

기업부문 리스크의 업종별 차별화 현황 및 시사점 [40]

최근 반도체, 조선 등을 중심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업종은 일시적 또는 구조적 요인 등으로 부진을 겪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기업부문 리스크의 업종별 차별화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업황 부진 업종의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늠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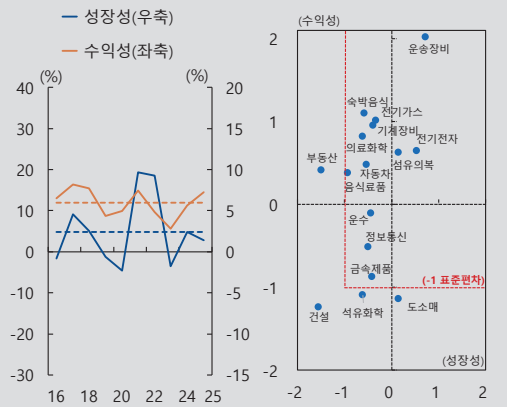
업종별 재무건전성 현황

업종 간 업황 차별화

2025년중 국내 기업부문[41]의 실적을 살펴보면, 대체로 과거(최근 10년) 평균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성장성(매출액증가율)은 과거 평균을 소폭 하회하였으나, 수익성(매출액영업이익률)은 이를 소폭 상회하였다. 다만, 업종별로는 성장성과 수익성이 2025년중 서로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주요 업종의 2025년중 성장성과 수익성을 과거 평균과 비교한 결과, 운송장비, 전기전자 등의 업종은 두 지표 모두 과거 평균을 상회하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나 건설, 석유화학, 금속제품 등의 업종에서는 모두 과거 평균을 크게 하회하였다. 또한 도소매의 경우 성장성은 과거 평균 대비 양호하였으나 수익성이 크게 부진하였으며, 부동산은 성장성의 저하가 두드러졌다(참고 2-1).

참고 2-1. 기업부문 성장성[1] 및 수익성[2]



주: 1) 매출액증가율 기준
2) 매출액영업이익률 기준
3) 점선은 최근 10년 평균
4) 업종별 2025년 매출액증가율 및 매출액영업이익률이 10년 평균 대비 얼마나 높거나 낮은지를 표준편차 단위로 환산하여 표시
자료: VALUE Search

취약 업종 부진은 주로 구조적 요인에 기인

2025년중 성장성 또는 수익성이 과거 평균 대비 크게 부진한 업종들[42]의 지난 5년간 실적 흐름을 살펴보았다. 건설, 금속제품 및 석유화학 등 2025년중 성장·수익성이 모두 부진했던 업종(이하 '취약 업종')의 실적은 2021~2022년중 양호한 흐름을 보이다 최근 2~3년간 성장·수익성이 연속으로 과거 평균 대비 낮은 모습을 보이는 등 부진의 정도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소매 및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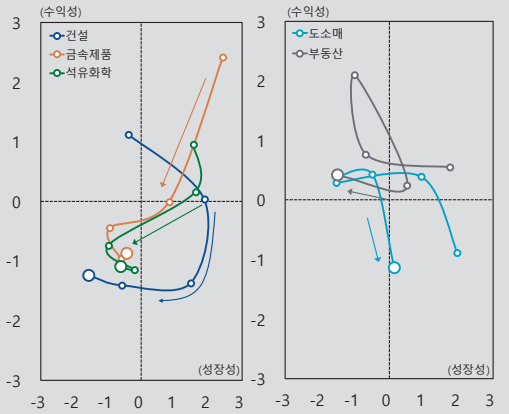
[40] 본고는 이준성 · 남지윤(안정분석팀)이 작성, 이정연(금융안정기획부장) · 문용필(안정분석팀장)이 검토하였다.

[41] 본고에서는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속보성 있는 분석이 가능한 상장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25년 4/4분기말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상장기업 및 일부 비상장기업 중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총 2,854개 기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므로, 외감기업 등 더 큰 표본을 활용한 분석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42] 건설, 석유화학, 도소매, 부동산 업종은 최근 성장성 또는 수익성 지표의 부진 정도가 큰(최근 10년 평균을 1표준편차 이상 하회)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속제품의 경우 상기 업종만큼은 아니지만 업황 부진의 정도가 상당하고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부진하다는 점에서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부동산(이하 '주의 업종')의 경우에는 최근 성장성과 수익성이 동반 부진하지는 않았으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성장성 또는 수익성 중 한 지표가 저조한 모습을 보이는 등 수년간에 걸쳐 기업 실적이 정체되거나 소폭의 부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참고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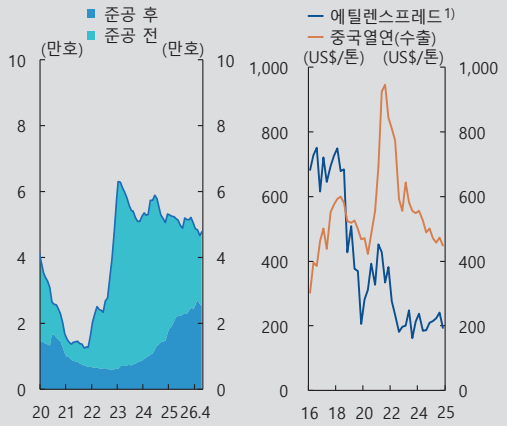
참고 2-2. 취약·주의 업종의 연간 성장성-수익성[1] 추이



주: 1) 업종별 연간 매출액증가율 및 매출액영업이익률이 10년 평균 대비 얼마나 높거나 낮은지를 표준편차 단위로 환산 표시
자료: VALUE Search

취약 업종들의 실적이 저하된 후 이러한 상태가 2~3년간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들 업종의 실적 부진은 해당 산업 내 형성되어 있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건설업의 경우 민간 주택건설에 대한 사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준공 후 미분양물량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지방 부동산시장이 장기간 부진을 이어가면서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고환율에 따른 원가부담 역시 수익성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석유화학과 금속제품 업종의 경우에는 최근의 대외여건 불확실성에도 영향을 받고 있으나, 중국발 공급과잉이 실적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해 온 모습이다. 석유화학과 금속제품의 일반적인 채산성을 나타내는 에틸렌 스프레드[43]와 중국산 열연 가격의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이후 가파르게 하락한 후 상당기간 낮은 수준[44]을 이어가고 있다(참고 2-3).

참고 2-3. 취약 업종의 구조적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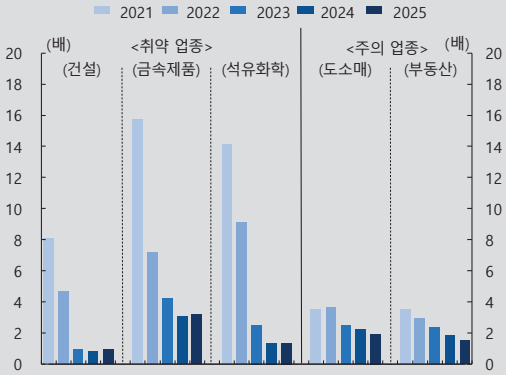
주: 1) 에틸렌 판매가격 – 나프타 구매가격
자료: 국토교통부, 한국화학산업협회

취약 및 주의 업종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지속

이와 같은 취약 및 주의 업종들의 실적 부진은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 업종의 최근 5년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총이자비용) 추이를 살펴보면, 3개 취약 업종의 경우 이자보상배율이 2021년중 크게 높았다가 2022~2023년중 급락한 후 각각 3.18(2025년말 금속제품)과 1.34(석유화학) 및 0.95(건설)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개 주의 업종은 2021년에도 이자보상배율이 높지 않은 수준이었던 데다가 이후에도 소폭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참고 2-4).

43 에틸렌 스프레드는 에틸렌 판매가격과 나프타 구매가격 간의 차이로 석유화학 업황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이다. 통상적으로 톤당 250달러~300달러 수준이 석유화학 업종의 손익분기점으로 인식된다.
44 다만 미국-이란 중동지역 전쟁 발발 이후 에틸렌 등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확보해 둔 저가 나프타 재고를 원료로 사용한 일부 석유화학사는 제품 마진 확대로 단기 실적이 개선되기도 하였다.

참고 2-4. 업종별 이자보상배율



자료: VALUE Search

취약 및 주의 업종의 리스크 전이 가능성 평가

건설, 부동산 및 도소매업 등 업종의 금융기관으로의 리스크 전이 가능성 유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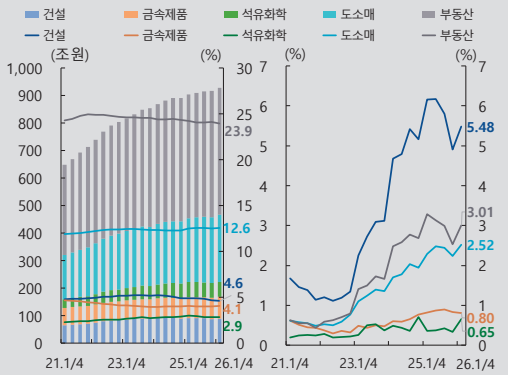
앞에서 살펴본 취약 및 주의 업종 기업들의 채무상환능력 저하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기 위해, 이들 업종에 대한 대출이 전체 금융기관 기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연체율의 움직임에 대해 살펴보았다.

건설(26년 1/4분기말 기준 4.6%), 금속제품(4.1%), 석유화학(2.9%) 등 3개 취약 업종에 대한 기업대출 비중은 약 11.6%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체율은 이자보상배율의 급격한 저하 등에도 불구하고 금속제품(26년 1/4분기말 기준 0.80%)과 석유화학(0.65%)은 아직까지 비교적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건설(5.48%)은 이자보상배율이 1을 하회하는 등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악화된 데다 PF 부실에 따른 우발채무 현실화 등의 영향으로 연체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도소매(26년 1/4분기말 기준 12.6%), 부동산(23.9%) 등 주의 업종에 대한 기업대출 비중은 36.5%로 높은 수준이다. 연체율도 도소매(26년 1/4분기말 기준 2.52%)와 부동산(3.01%) 모두 전체 평균(2.09%)[45]을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저조한 실적 흐름(낮은 성장성이나 수익성)이 만성화됨에 따라 2021년 하반기 이후 금리상승 등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크게 작용[46]했던 것으로 추정된다(참고 2-5).

참고 2-5. 취약 업종의 금융기관 대출 및 건전성 현황[1)]

업종별 대출잔액 및 기업대출 내 비중 | **업종별 연체율**



주: 1) 업종별 기업대출 잔액 및 연체액 구분이 가능한 은행,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제외), 보험사 합산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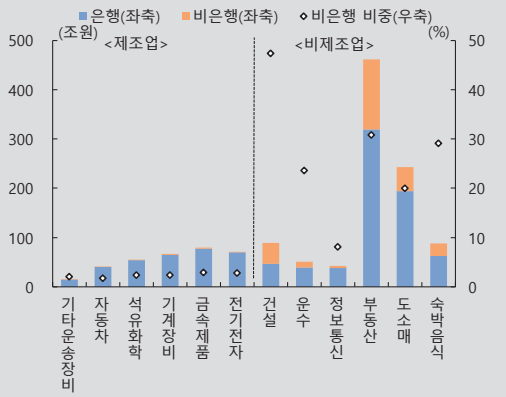
이상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부진 업종들의 리스크를 평가해 보면, 우선 금속제품과 석유화학은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인 만큼, 대내외 여건 악화 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부실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지만 전체 기업대출

45 업종별 기업대출 잔액 및 연체액 구분이 가능한 업권을 기준으로 별도 시산하였기 때문에 앞서 기술된 동향의 기업대출 연체율과 차이가 있다.
46 도소매와 부동산 업종의 2022년 이후 이자보상배율 변동을 요인(수익성, 레버리지, 이자율)별로 분해해 보면 대체로 수익성이 이자보상배율을 크게 개선시키지 못하거나 하락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금리상승이 이자보상배율 하락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내 비중이 작아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건설업의 경우 연체율이 타 업종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인 점, 도소매 및 부동산업 등은 연체율이 비교적 높고 전체 기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들 업종은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의존도가 높아, 부실 확대 시 상대적으로 자본완충력이 약한 일부 취약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빠르게 파급될 가능성이 있다 (참고 2-6).

참고 2-6. 업종별 금융기관 대출금[1)]



주: 1) 2026년 1/4분기말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시사점

기업부문 리스크를 업종별로 구분해서 살펴본 결과, 건설, 석유화학 및 금속제품 등 일부 취약 업종에서는 주로 구조적 요인의 부각으로 실적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시계에서 구조적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조정[47]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필요시 과도기적인 유동성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적절한 금융지원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도소매 및 부동산 등 일부 주의 업종의 경우, 이들 업종에 대한 금융기관의 익스포저가 크고 연체율도 전체 업종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금융기관의 각별한 자산건전성 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이들 업종이 금리 변동 충격에도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반도체 등 전기전자, 조선업 등 운송장비 등의 업종은 기업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데다 전반적인 재무상황도 양호하여 가시적인 리스크 요인이 부각되지 않고 있으나, 업종별 특성 등에 기인한 잠재 리스크 요인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글로벌 수요 대응을 위한 투자가 확대될 경우 기업 부채가 크게 늘어날 수 있으며, 외부 충격으로 산업 경기가 예기치 못하게 급변할 경우에는 늘어난 부채가 기업뿐 아니라 금융시스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기전자 업종은 AI 관련 글로벌 투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점[48], 조선업은 수요공급 불일치에 따른 큰 폭의 경기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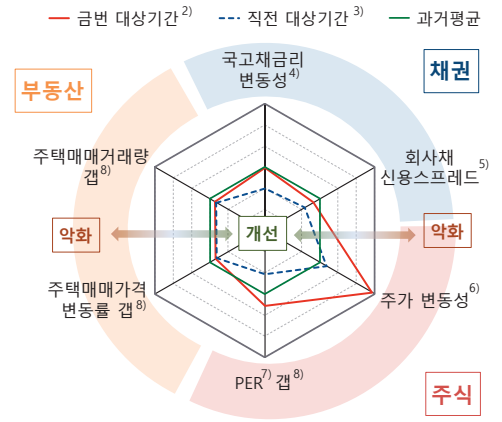
47 정부는 최근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석유화학은 에틸렌 과잉생산을 조정하기 위해 NCC 설비의 감축과 업체 간 통폐합을 유도하고 세제 및 금융지원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금속제품(철강)의 경우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K-스틸법 등을 통해 주요 업체들의 자율적 설비조정 및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48 IMF(2026)는 AI 하드웨어의 빠른 감가상각으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재무제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금융시장 전반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 데이터 센터 건설 및 유지에 막대한 자본이 투자되면서 새로운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2. 금융 및 자산 시장

-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금리는 국내외 통화정책 기대 변화, 중동상황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부각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으며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도 금리 변동성 증대 등으로 확대되었다.
- **주식시장**에서 주가는 반도체 업황 호조,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 개선 등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큰 폭 상승하였으나 대외여건 변화와 외국인 주식매도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 **부동산시장**에서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 지역 기대심리 상승 전환과 함께 상승세가 재차 커지고, 전월세가격도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한편 상업용부동산의 경우 오피스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이나, 상가는 공실률 상승 등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 **(금융·자산시장 평가) 금융시장에서는 직전 반기에 비해 금리, 주가 등 가격 변동성이 크게 증대된 가운데 차입에 의한 주식투자가 늘어났으며, 부동산시장에서는 매매가격 상승세가 다시 확대되고 있어, 자산시장에서의 금융불균형 축적 우려에 대해 높은 경계감을 가져야 한다.**

그림 Ⅰ-2-1. 금융 및 자산 시장 상황 변화 지도[1)]



주: 1) 각 지표별 최근 5년 평균을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금번 대상 기간과 직전 대상기간 지표의 상대적 수준을 지도에 도시
2) 2026년 1~5월중(주택매매거래량 갭은 26년 1~4월중)
3) 2025년 7~12월중
4) 국고채(3년) 금리의 일별 변동성 기준
5) 회사채(AA-등급) 금리 – 국고채(3년) 금리 기준
6) 일별 V-KOSPI의 기간중 평균 기준
7) MSCI 기준(12개월 선행 PER)
8) 갭은 각 지표의 최근 5년 평균 대비 격차를 의미
자료: 한국은행 시산

(1) 채권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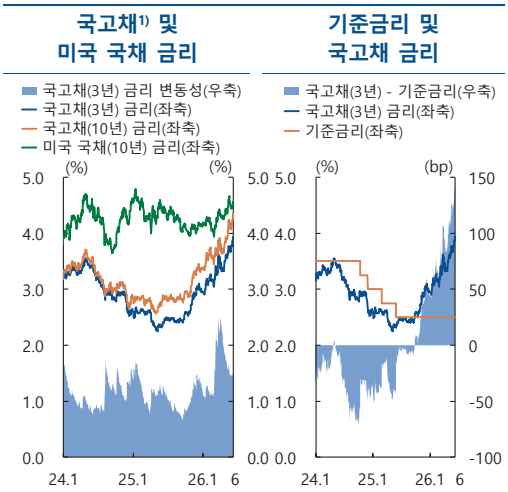
장기 시장금리 큰 폭 상승

국고채 금리는 국내외 통화정책 기대 변화와 중동상황으로 인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다. 금년 들어서는 금리인하 기대 약화가 이어진 가운데 채권 발행 물량 증대[49] 및 머니무브에 따른 수급 부담 등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다. 2월 중순에는 금리상승 과도 인식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되기도 하였으나, 3월 들어 중동상황 발생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50]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되고, 리스크 프리미엄이 증대되면서 주요국[51]과 더불어 재차 큰 폭 상승하였다. 4월 이후에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기대감, WGBI 편입 개시 영향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1/4분기 GDP 호조, 5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결과 등으로 연내 금리인

[49] 2월중 설 연휴로 국고채 발행이 단기간 내 집중(18조원 중 1~2주 14.5조원)된 데다, 공사채·특수은행채 등 초우량채 발행도 예년에 비해 늘어나면서 공급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50] WTI유($/bbl, 최근월물 선물가격지수): 26년 2월말 67.0 → 3월말 101.4 → 4월말 105.1
[51] 2026년 2월말 대비 6월 9일 기준 주요국 금리변동(10년물, bp): 미국 +58, 영국 +67, 독일 +40, 일본 +56, 호주 +27

상 기대가 증대되며 상승하였다. 한편 국고채 금리 변동성은 중동상황 발생 이후 큰 폭 확대되었다가 4월 중순 이후에는 다소 축소되었다. 국고채 3년물 금리와 기준금리 간 스프레드는 시장금리 상승을 반영하여 확대되었다(그림 I-2-2).

그림 Ⅰ-2-2. 국고채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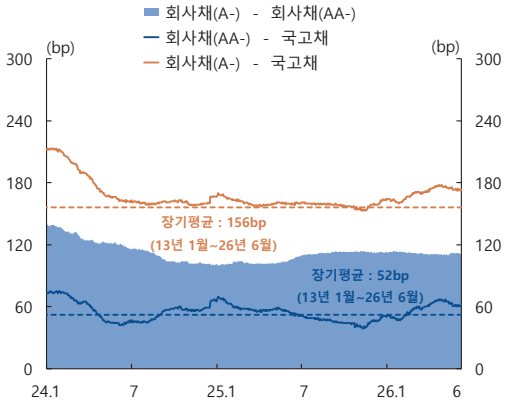


주: 1) 일별 변동성은 지수가중이동평균(EWMA)을 통해 산출
자료: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Bloomberg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확대

금년 들어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도 국고채금리 상승폭 확대, 머니무브 등으로 신용채권에 대한 투자수요가 약화되면서 확대되었다. 중동상황 발생 이후에도 금리 변동성 증대 영향으로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며 우량물(AA-)과 비우량물(A-) 모두 장기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을 보였다. 다만 5월중에는 국고채금리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높아진 금리 수준 등에 따른 투자 유인이 부각되면서 소폭 축소되었다. 한편 신용등급 간 스프레드(AA- 및 A- 기준)는 111bp로 지난 연말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었다[52](그림 I-2-3).

그림 Ⅰ-2-3. 회사채 신용스프레드[1] 및 신용등급 간 스프레드



주: 1) 3년물 기준
자료: 금융투자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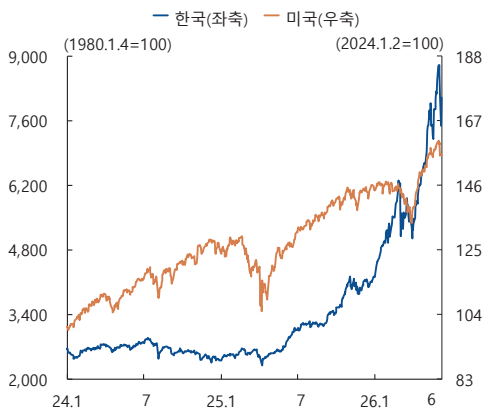
52 회사채 신용등급 간[(A-) – (AA-)] 스프레드(bp): 25년 12월말 113 → 26년 3월말 111 → 6월 9일 111

(2) 주식시장

주가 큰 폭 상승 및 변동성 확대

주가(KOSPI)는 반도체 업황 호조,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큰 폭 상승(전년말 대비 92.1%, 6월 9일 기준)하였다.[53] 시기별로는, 연초 이후 반도체 기업의 실적개선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방산·원전·금융 등 여타 업종들이 동반 상승하면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으나 3월중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크게 하락하였다. 4월 이후에는 미국·이란 종전협상 기대감 및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전망치 상향조정 등에 힘입어 재차 급등하였고 사상 최고치(8,801.5, 6.2일)를 경신하였으나, 6월 들어 미 연준 금리인상 기대 강화 등으로 다소 조정받았다(그림 I-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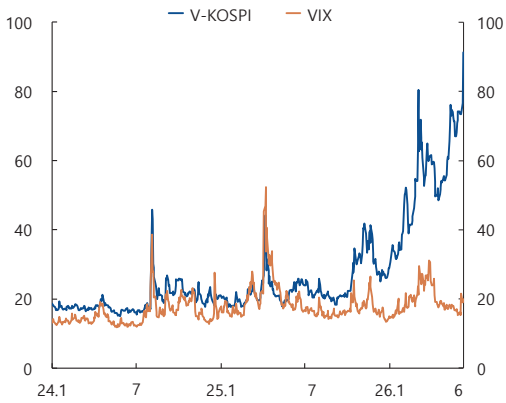
그림 Ⅰ-2-4. 한국(KOSPI) 및 미국 주가[1)]



주: 1) 미국은 S&P500 지수를 2024년 1월 2일자로 정규화
자료: Bloomberg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2월중 AI 관련 과잉투자 우려, 차기 연준의장 지명에 따른 달러화 유동성 축소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장기평균[54]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까지 상승한 이후 3월 들어 중동지역 불안에 따른 고유가 장기화 우려 등으로 위험회피심리가 강화되며 급등하였다. 이후 중동상황에 대한 민감도가 둔화되면서 하락하기도 하였으나, 주가 급등으로 재차 반등하여 사상 최고치(91.2, 6.9일)를 경신하는 등 높은 수준을 지속[55]하고 있다(그림 I-2-5).

그림 Ⅰ-2-5. 주가 변동성[1)]



주: 1) KOSPI200 및 S&P500 지수의 옵션 가격으로부터 산출된 변동성지수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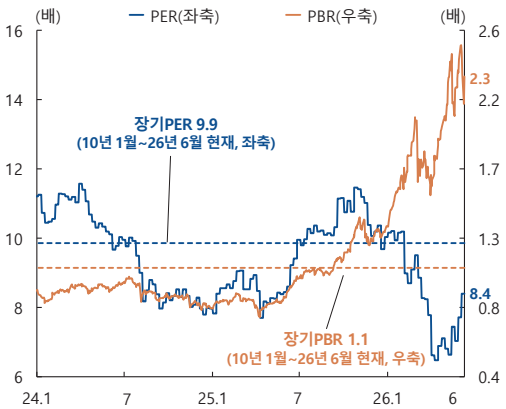
PER과 PBR의 상반된 흐름

금년중 주가가 큰 폭 상승하며 주가순자산비율(PBR, Price-to-Book Ratio)은 높아졌으나, 주가수익비율[56](PER, Price-to-Earnings Ratio)은 국내 기업들의 예상 실적이 크게 상향되며[57] 하락하였

53 다만 최근 주식시장에서 차입에 의한 레버리지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Ⅱ 주요 현안 분석> 「1.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시스템 안정성 평가」를 참조하기 바란다.
54 2010년 이후부터 26년 6월 9일 현재까지의 V-KOSPI 장기평균은 18.9 수준이다.
55 3월 이후 코스피 사이드카가 20회(매수 11회, 매도 9회) 발동되며(6월 9일 기준) 높은 주가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20~25년 중 11회 발동).
56 MSCI 기준 12개월 선행 PER을 활용하였으며 동 지수는 MSCI지수 편입 기업들의 현재 시가총액 합계를 향후 1년간 예상되는 순이익(국내외 증권회사 전망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57 MSCI 한국지수의 향후 1년간 예상 순이익은(6월 9일 기준) 전년말 대비 200.4% 증가하며 지수 전체 시가총액 증가율(110.1%)을 크게 상회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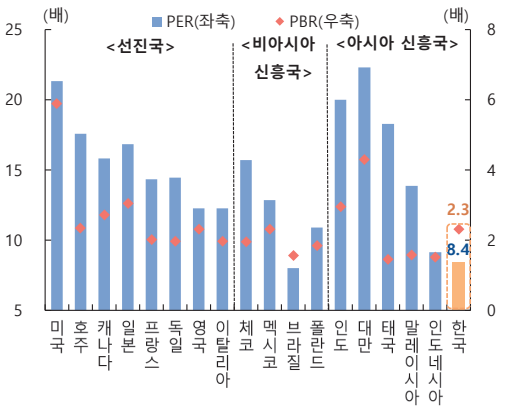
다. 6월 9일 기준 PER(8.39배)은 과거(2010년 이후 장기평균 9.86배) 대비 낮은 수준이나, PBR(2.31배)은 장기평균(1.09배)을 큰 폭 상회하고 있다(그림 I-2-6). 다만, PER과 PBR 모두 대체로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그림 I-2-7).

그림 Ⅰ-2-6. PER[1] 및 PBR[2]



주: 1) MSCI 기준(12개월 선행 PER)
2) 코스피 종목 기준
자료: Bloomberg, Refinit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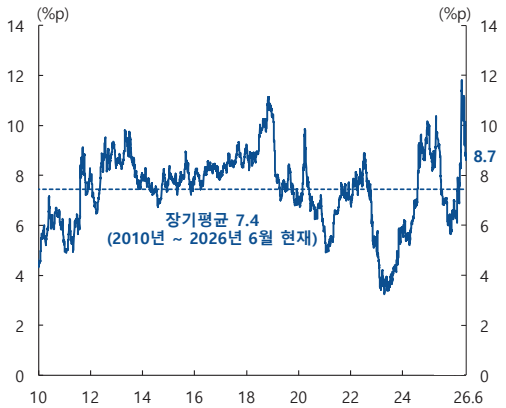
그림 Ⅰ-2-7. 주요국의 PER[1][2] 및 PBR[1]



주: 1) 2026년 6월 9일 기준
2) MSCI 기준(12개월 선행 PER)
자료: Bloomberg, Refinitiv

한편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58]은 연중 상승세를 지속하여 11.81%포인트(4월 9일)까지 오르면서 2004년 8월(11.82%포인트)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최근에는 8.69%포인트(6월 9일 기준)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장기평균(2010년 이후 7.44%포인트)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59](그림 I-2-8).

그림 Ⅰ-2-8.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1]



주: 1) 수익주가비율(MSCI 기준 12개월 선행 PER의 역수) – 국고채(10년)수익률
자료: Bloomberg, Refinitiv

58 수익-주가 비율(MSCI 기준 12개월 선행 PER의 역수)과 국고채(10년) 수익률 간의 차이로 산출한다.
59 일반적으로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은 주식 보유 시 요구되는 초과보상이 확대되었음을 의미하므로 위험선호 경향이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다만, 최근의 수익-주가 비율 상승은 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익 전망이 전례없는 수준으로 상향되며 발생한 결과라는 점에서 위험회피심리 강화보다는 주식의 기대수익률이 크게 높아진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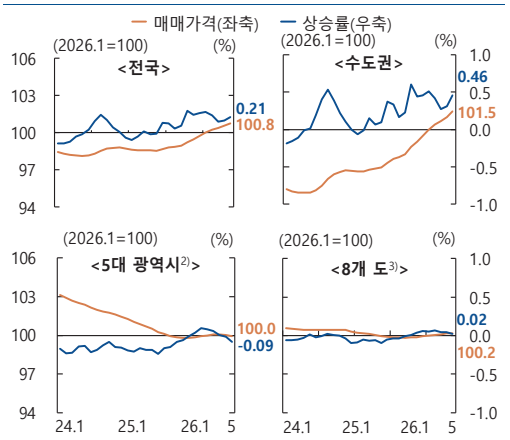
(3) 부동산시장

주택매매가격 상승폭 재확대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금년 들어 비수도권이 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 부동산 대책의 영향 등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둔화되었다가 4월 이후에는 가격상승 기대가 높아지면서[60] 상승폭이 재차 커지는 모습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은 정부 정책의 영향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되어오다 4월 들어 그동안 하락세를 보이던 고가지역이 상승 전환하는 등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었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8개 도(5월 +0.02%)는 미약한 상승 흐름을 보인 반면 5대 광역시(5월 -0.09%)는 하락 전환하였다(그림 I-2-9).

그림 Ⅰ-2-9. 주택매매가격 추이 및 상승률[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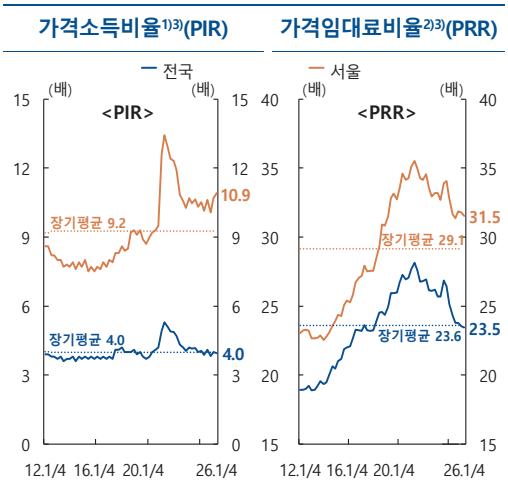


주: 1)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기준, 전월대비
2)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및 울산
3)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및 제주
자료: 한국부동산원

소득 대비 주택가격을 나타내는 가격소득비율[61](PIR, Price-to-Income Ratio)은 2026년 1/4분기중 전국 4.0배, 서울 10.9배를 기록하였다. 전국의 가격소득비율은 장기평균(2012년 1/4분기~2026년 1/4분기, 4.0배) 수준인 반면, 서울은 장기평균(9.2배)을 상회하였다.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을 나타내는 가격임대료비율(PRR, Price-to-Rent Ratio)은 전국과 서울이 각각 23.5배, 31.5배를 나타내었다. 전국의 가격임대료비율은 장기평균(23.6배)을 소폭 하회하였으나 서울은 장기평균(29.1배)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I-2-10).

그림 Ⅰ-2-10. 가격소득비율 및 가격임대료비율



주: 1) 주택가격/가구 연소득, 분자·분모는 각각 5분위 중 3분위 기준
2) 주택가격/연간 임대료
3) 장기평균은 2012년 1/4분기~2026년 1/4분기중 평균
자료: 한국은행 시산, 한국부동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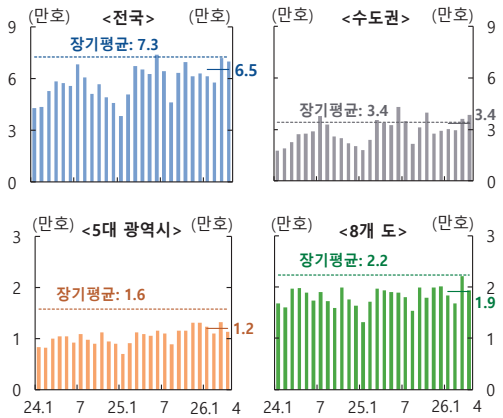
60 주택가격전망 CSI: (전국) 25년 12월 121 → 26년 1월 124 → 2월 108 → 3월 96 → 4월 104 → 5월 112
(서울) 25년 12월 127 → 26년 1월 130 → 2월 113 → 3월 97 → 4월 106 → 5월 118

61 가격소득비율(3분위, 배, KB부동산): (전국) 25년 2/4분기 4.6 → 3/4분기 4.3 → 4/4분기 4.6 → 26년 1/4분기 4.5
(서울) 25년 2/4분기 10.3 → 3/4분기 9.7 → 4/4분기 10.3 → 26년 1/4분기 10.5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2026년 1~4월중 월평균 6.5만호로, 장기평균(2010년 1월~2026년 4월, 7.3만호)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전년동기(5.5만호)와 비교해서는 큰 폭(17.7%)으로 증가하였다.[62]

지역별로는 수도권 주택매매거래량이 1~4월중 월평균 3.4만호로 다주택자 매물 소화 등으로 전년동기(2.8만호) 대비 20.5% 증가하면서 장기평균(3.4만호) 수준을 기록하였다. 비수도권의 월평균 거래량도 5대 광역시 1.2만호, 8개 도 1.9만호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24.9%, 10.4% 증가하였다(그림 Ⅰ-2-11).

그림 Ⅰ-2-11. 월별 주택매매거래량[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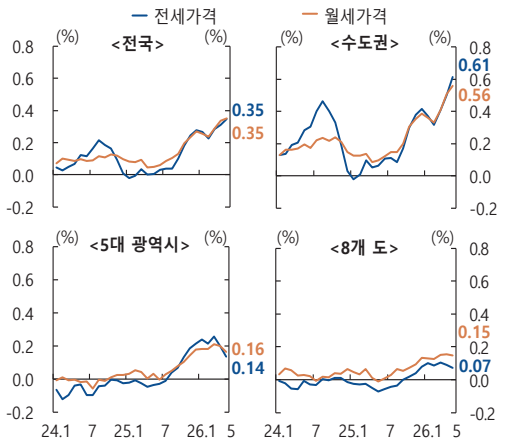
주: 1) 점선은 2010년 1월~2026년 4월중 장기평균
2) 실선은 2026년 1~4월중 월평균
자료: 국토교통부

전월세가격 상승세 확대

주택임대차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월세가격의 상승세가 크게 확대되었다.

지역별[63]로는 수도권의 전월세가격은 공급 부족, 실거주 확대 등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커지는 모습이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5대 광역시의 전월세가격이 울산, 부산 등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으며, 8개 도에서도 전월세가격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그림 Ⅰ-2-12).

그림 Ⅰ-2-12. 주택전월세가격 상승률[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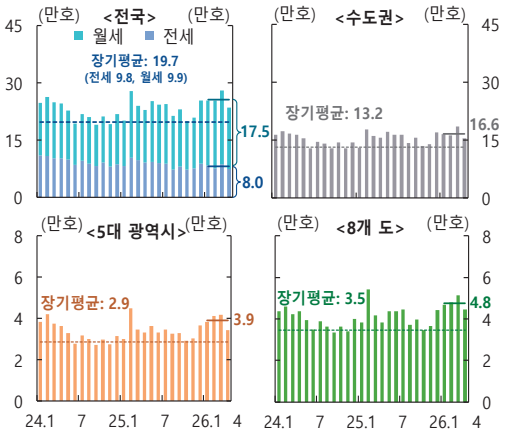
주: 1) 전월대비
자료: 한국부동산원

62 매수우위지수는 2026년 들어 전년동기대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100 상회시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많음을 의미).
매수우위지수(KB부동산, 전국): 25년 1월 25.7 → 4월 29.1 → 7월 33.3 → 10월 43.4 → 26년 1월 45.8 → 4월 40.1 → 5월 44.4

63 전세가격 상승률(전월대비, %): (서울) 4월 0.66 → 5월 0.91, (울산) 0.46 → 0.42, (부산) 0.27 → 0.26
월세가격 상승률(전월대비, %): (서울) 4월 0.63 → 5월 0.81, (울산) 0.42 → 0.43, (부산) 0.24 → 0.21

주택전월세거래량은 2026년 1~4월중 월평균 25.5만호로 전년동기(23.7만호) 대비 7.9% 증가하였다. 임차유형별로 보면, 전세거래량은 월평균 8.0만호로 전년동기(9.4만호) 대비 14.2% 감소하였다. 반면 월세거래량은 월평균 17.5만호로 전년동기(14.3만호) 대비 22.3% 증가하면서 장기평균(9.9만호)을 큰 폭 상회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전월세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4월중 68.5%로, 전년동기(60.4%) 대비 큰 폭(8.1%포인트) 상승하였다(그림 I-2-13).

그림 Ⅰ-2-13. 월별 주택전월세거래량[1)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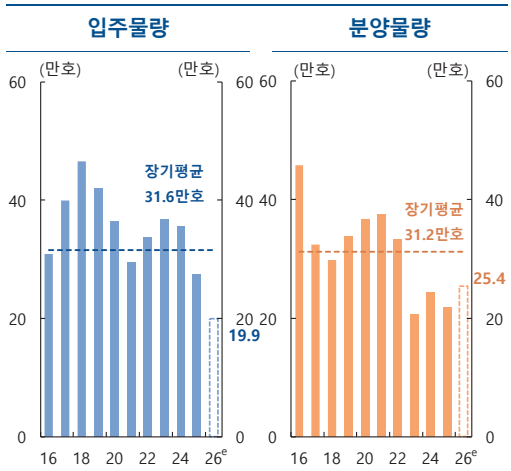
주: 1) 2021년 6월 이후 집계범위가 확정일자 신고자료에서 주택임대차 신고자료로 확대
2) 자료제약으로 지역별 전세 및 월세 거래량 구분은 전국만 명시
3) 점선은 2017년 1월~2026년 4월중 장기평균
4) 실선은 2026년 1~4월중 월평균
자료: 국토교통부

아파트 입주 및 분양물량 저조한 수준 지속

2026년 아파트 신규 입주물량은 19.9만호로 전년(27.4만호) 대비 큰 폭 감소[64](-27.3%)하면서 장기평균(2010~2025년, 연평균 31.6만호)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26년중 아파트 분양물량은 25.4만호로 전년(21.8만호)보다 소폭 증가하였으나 장기평균(2010~2025년, 연평균 31.2만호) 대비 낮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I-2-14).

전국 미분양주택 물량은 2026년 4월말 6.5만호(수도권 1.7만호, 비수도권 4.8만호)로 금년 들어 소폭 감소하였다. 반면 전국 준공후 미분양은 2026년 4월말 3.0만호로 비수도권(2.5만호)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65]

그림 Ⅰ-2-14. 아파트 입주 및 분양 물량[1)]



주: 1) 2026년 6월 15일 기준(단, 26년은 월별 계획물량 합산 기준)
자료: 부동산R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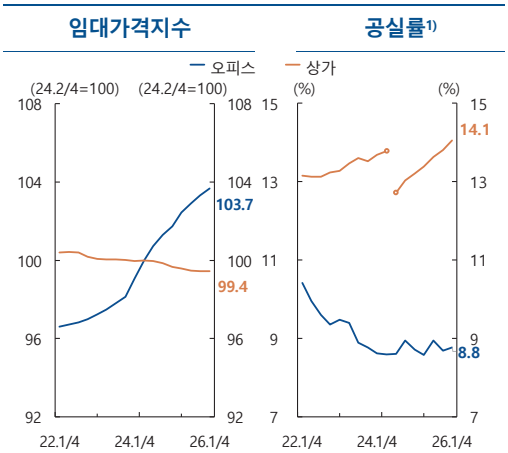
64 2026년 수도권 입주물량은 10.6만호, 비수도권은 9.3만호로 전년대비 각각 19.7%, 34.4% 감소하였다.
65 미분양주택 물량(월말 기준, 만호): 25년 6월 6.4 → 12월 6.7 → 26년 1월 6.7 → 2월 6.6 → 3월 6.5 → 4월 6.5
준공후 미분양주택 물량(월말 기준, 만호): 25년 6월 2.7 → 12월 2.9 → 26년 1월 3.0 → 2월 3.1 → 3월 3.0 → 4월 3.0

오피스 양호, 상가 부진 흐름 지속

상업용부동산 시장에서는 오피스와 상가가 상반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오피스의 경우 서울 주요 권역에 대한 안정적인 임차수요가 이어지면서 임대가격지수가 상승(2026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1.89%)하였으며, 공실률(8.8%)도 낮은 수준이다.[66]

반면 상가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2026년 1/4분기 상가 임대가격지수는 전년동기대비 0.24% 하락하는 등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며, 공실률(14.1%)도 전년동기에 비해 0.9% 포인트 상승하면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그림 Ⅰ-2-15).

그림 Ⅰ-2-15. 상업용부동산 임대가격지수 및 공실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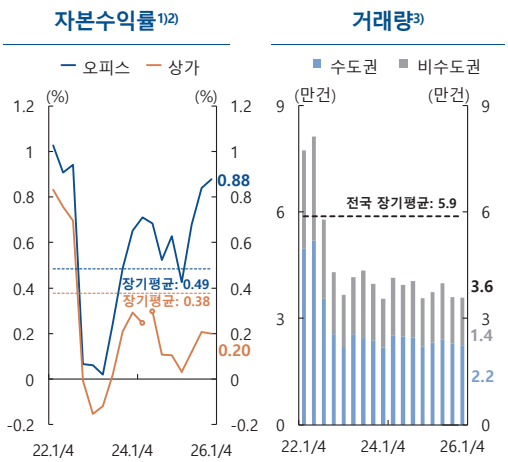


주: 1) 상가는 중대형 기준(한국부동산원 표본 개편으로 2024년 2/4~3/4분기 간 시계열 단절)
자료: 한국부동산원

2026년 1/4분기중 오피스의 자본수익률은 0.88%로 전년동기(0.63%) 대비 상승하며 장기평균(2010년 1/4분기~2026년 1/4분기, 0.49%)을 큰 폭 상회하였다. 상가 수익률은 2026년 1/4분기중 0.20%로 전년동기(0.10%)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나 오피스와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2026년 1/4분기중 상업용부동산 거래량은 전년동기(3.6만건)와 유사한 3.6만건으로 장기평균(5.9만건)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그림 Ⅰ-2-16).

그림 Ⅰ-2-16. 상업용부동산 자본수익률 및 거래량



주: 1) 토지와 건물의 가격 변동을 반영한 당분기 자산가치의 전분기 대비 상승률로, (당분기 자산가치-전분기 자산가치)/전분기 자산가치로 정의. 상가는 중대형 기준(한국부동산원 표본 개편으로 2024년 2/4~3/4분기 간 시계열 단절)
2) 점선은 2010년 1/4분기~2026년 1/4분기 장기평균
3) 상업업무용(오피스텔 포함) 기준. 매매 목적 이외 분양, 증여, 교환 등도 포함
자료: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66] 오피스 공실률은 평균적으로는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지역별로는 차별화되는 모습이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3> 「상업용부동산 시장 상황과 리스크 점검」을 참조하기 바란다.

(4) 기타 자산시장

글로벌 가상자산시장 시가총액 크게 감소

글로벌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은 올해 1월 하순 미 연준 의장 지명 직후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비트코인 가격 급락, 가상자산 선물시장의 대규모 포지션 청산[67] 등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4월에는 중동사태 긴장 완화, ETF 자금유입[68] 및 가상자산 재무기업(Digital Asset Treasury)의 비트코인 매입 등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5월 이후 주요국 시장금리 상승 및 ETF 자금유출, 주요 가상자산 재무기업의 비트코인 일부 매각 등의 영향을 받아 재차 감소하였다(그림 I-2-17).

가상자산 종류별로 살펴보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가상자산 전체 흐름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며 연초에 비해 감소하였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미국의 「디지털 자산시장 명확화 법안」(Clarity Act) 논의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 대한 이자 지급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입장 대립[69]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시가총액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Ⅰ-2-17.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

자료: CoinGecko

글로벌 가격 변동성 확대 후 축소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70]은 올해 1월 가파른 가격 하락으로 2024년 이후의 평균 수준보다 높아졌다가, 이후 좁은 범위의 가격 등락으로 빠르게 낮아졌다. 특히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은 나스닥 지수의 변동성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축소되었다가 6월초 가격 급락으로 다소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그림 I-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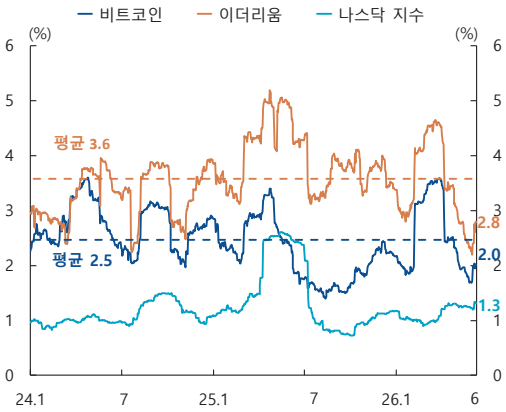
67 2026년 2월초 비트코인 가격이 7만달러 이하로 하락하자 선물시장 청산 규모가 2월 4일 6억달러에서 2월 5~6일중 34억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자료: Coinglass).

68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유출입 규모: 2026년 4월 +17.4억달러 → 5월 -23.3억달러(자료: EPFR)

69 2026년 5월 14일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대한 이자 지급은 금지하되, 결제·송금 등 거래나 실제 이용 활동에 대한 보상은 허용하는 법안이 미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대해 가상자산업계는 지지하는 입장인 반면 은행업계는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 적용 등을 주장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동 법안은 향후 상원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26년 6월 10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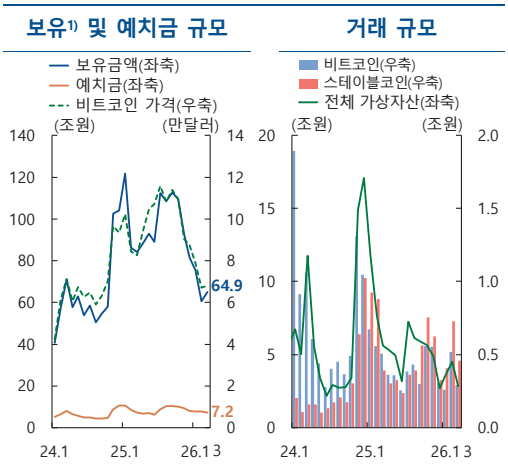
70 가격 변동성은 각 가상자산 일별 수익률의 60일 이동 표준편차를 통해 산출하였다.

그림 Ⅰ-2-18.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1)2)]



주: 1) 일별 수익률의 60일 이동 표준편차를 통해 산출
2) 평균은 2024년 이후 일평균
자료: CoinGecko

그림 Ⅰ-2-19. 국내 가상자산시장 현황



주: 1) 고객 보유금액 기준(거래소 보유금액 제외)
자료: 한국은행, 가상자산거래소 5개사

국내 가상자산시장 투자 규모 상당폭 감소

국내 투자자의 가상자산 보유금액은 가상자산 가격 하락으로 2025년 12월말 81.7조원에서 2026년 3월말 64.9조원으로 상당폭 감소하였으며, 이는 글로벌 시가총액의 약 1.8%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가상자산 예치금[71]도 2025년 12월말 8.1조원에서 2026년 3월말 7.2조원으로 줄어들었다(그림 I-2-19). 한편 금융위원회는 상장법인 등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 중에 있으며, 국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대금(일평균)은 2025년 4/4분기중 4.4조원에서 2026년 1/4분기중 3.7조원으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 둔화[72]와 함께 감소하였다. 스테이블코인 거래대금(일평균)도 같은 기간 0.57조원에서 0.53조원으로 소폭 감소하는 모습이다(그림 I-2-19).

7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4년 3월 12일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가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는 이용자의 재산을 말한다.
72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량(십억달러, 일평균): 25년 3/4분기 155 → 4/4분기 162 → 26년 1/4분기 118 → 4~5월 91(자료: CoinGecko)

참고 3.

상업용부동산 시장 상황과 리스크 점검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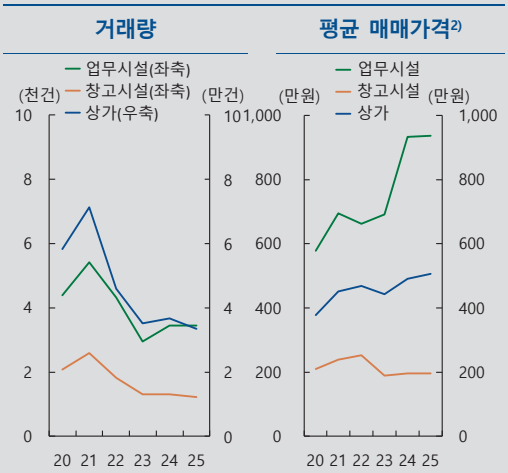
국내 상업용부동산 시장은 오피스 등이 개선 흐름을 보이는 반면 상가는 회복이 지연되는 등 유형별로 상이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상업용부동산은 실물경기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기업활동이 위축되거나 소비부진이 심화될 경우 수익성이나 담보가치가 하락하면서 관련 담보대출의 부실 위험이 확대되는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국내 상업용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각 유형 및 지역별로 살펴보고, 금융기관 등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점검해 보았다.

상업용부동산 시장 동향

상가 및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대체로 부진

상업용부동산 거래 동향[74]을 살펴보면, 2022년 이후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는 가운데 유형별로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다(참고 3-1). 상업용부동산 거래량의 경우 2021년 고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다. 유형별로 보면, 업무시설(오피스)[75]은 2024년 이후 거래량이 소폭 회복된 반면, 상가와 물류센터 등 창고시설은 2025년에 2020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낮아지는 등 부진이 이어졌다. 평균 매매가격의 경우에도 업무시설이 2022년 663만원에서 2025년 938만원(연평균 12.2%)까지 상승하였으나 상가는 같은 기간 469만원에서 506만원으로 연평균 2.6% 상승에 그쳤으며, 창고시설은 253만원에서 196만원으로 오히려 하락(연평균 -8.1%)하였다.[76]

참고 3-1. 상업용부동산 유형별[1] 거래량 및 가격



주: 1) 상가는 건축물주용도상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2) 기간중 총거래금액/총전용연면적(m^2)
자료: 국토교통부

지역별로도 차별화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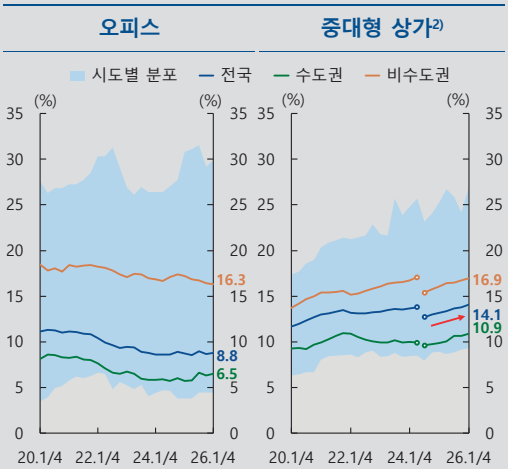
지역별로도 시장 흐름이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오피스의 공실률을 보면, 평균적으로는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비수도권(26.1/4분기말, 16.3%)이 수도권[77](6.5%)의 2.5배를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충북(29.9%), 경북(23.6%), 전남(22.8%) 등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상가의 경우에도, 지방 자영업 업황 부진 등이 가세되며 공실률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세종(27.0%), 충

---

[73] 본고는 김동욱 · 정서영(안정분석팀)이 작성, 이정연(금융안정기획부장) · 문용필(안정분석팀장)이 검토하였다.
[74] 국토교통부 실거래자료 중 상가(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 업무시설, 창고시설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거래량 및 가격 산정시 지분거래와 거래 해제건은 제외하였다.
[75]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건축물로 한국부동산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등에서 '오피스'로 칭하고 있다.
[76] 이에 따라 총거래금액은 업무시설이 2025년 15.6조원으로 과거 고점(21년, 15.5조원) 수준을 회복한 반면, 상가와 창고시설은 과거 고점(21년) 대비 절반 수준(각각 43.5% 및 57.0%)에 머물고 있다.
[77] 다만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의 공실률(26년 1/4분기)은 5.2%, 경기도는 11.1% 등 지역별로 차이가 큰 모습이다(자료: 한국부동산원).

북(20.3%), 경북(18.6%) 등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참고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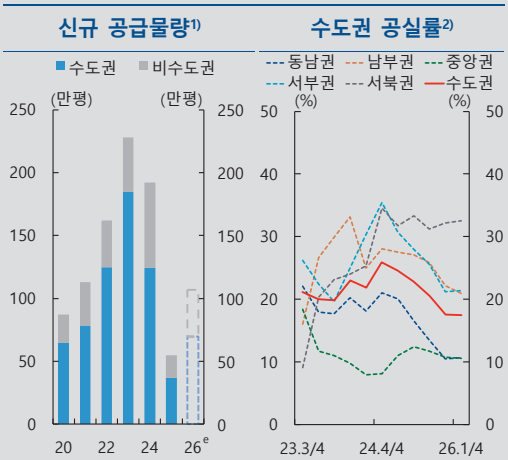
참고 3-2. 오피스 및 상가 지역별[1] 공실률



주: 1) 수도권 및 비수도권 수치는 시도별 모집단(동)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
2) 한국부동산원 표본개편으로 24년 2/4~3/4분기간 시계열 단절
자료: 한국부동산원

물류센터의 경우 2025년 들어 공급 감소 등으로 공실률이 하락하는 등 대체로 개선되고 있으나 수도권 내 일부 권역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다. 물류센터의 공실률은 코로나19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이 크게 증가[78]한 영향으로 2024년 4/4분기 25.9%까지 상승하였다. 지난해부터는 초대형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한 수요 회복[79], 공급 축소 조정 등으로 공실률이 하락하고 있으나 수도권 내 서북권 등 일부 권역은 20%를 상회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참고 3-3). 또한, 금년에도 공실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권역들에 물류센터가 상당부분 공급될 예정[80]이어서 이들 지역에서 수급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참고 3-3. 물류센터 공급물량 및 수도권 공실률



주: 1) 26년은 젠스타메이트 추정치
2) 상온·저온 전체 기준(신축 포함). 수도권 내 권역은 동남권(이천, 여주 등), 남부권(안성, 화성 등), 중앙권(군포, 동탄 등), 서부권(안산, 시흥 등), 서북권(고양, 파주 등)으로 구분
자료: 젠스타메이트 리서치센터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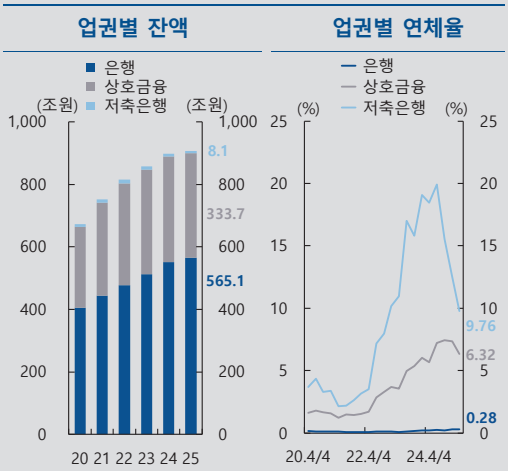
비은행 담보대출의 건전성 저하 우려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기준)[81] 규모는 2025년말 기준 915.9조원으로 전반적인 시장 부진 등이 반영되면서 2024년 이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증가율: 23년 4.7% → 24년 4.3% → 25년 1.0%). 업권별로는 은행이 2022년말 476.7조원에서 2025년말 565.1조원으로 88.4조원 증가(연평균 증가율 5.9%)한 반면 비은행은 같은 기간중 2.9조원 감소(353.7조원 → 350.8조원)하였다.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의 자산

78 2020년 이후 누적 기준으로 전체 면적의 73.2%가 수도권에 공급되었다.
79 물류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자동화 설비구축이 가능한 대형센터를 화주사들이 선호함에 따라 연면적 5만평 이상 초대형 물류센터의 공실률이 평균 대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정진우, '2026년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망').
80 수도권 평균 공실률을 상회하는 서북권, 서부권, 남부권의 2026년 물류센터 신규공급 예상면적은 39.6만평으로 추정(젠스타메이트)되며, 이는 전체 수도권 공급 예상면적 69.7만평의 56.8% 수준이다.
81 은행(일반은행 및 농협은행), 상호금융(농·수·산·신협) 및 저축은행의 비주택 담보대출을 기준으로 집계하였다. 다만 은행 연체율은 자료 제약으로 상업용 임대부동산(25년말 기준 은행 200.0조원)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건전성을 보면, 은행 연체율은 2025년말 기준 0.28%로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나, 비은행(2025년말 기준 저축은행 9.08%, 상호금융 6.32%)은 최근 부동산PF 구조조정 및 부실관리 강화(매·상각 등) 등에 힘입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은행에 비해서는 여전히 크게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참고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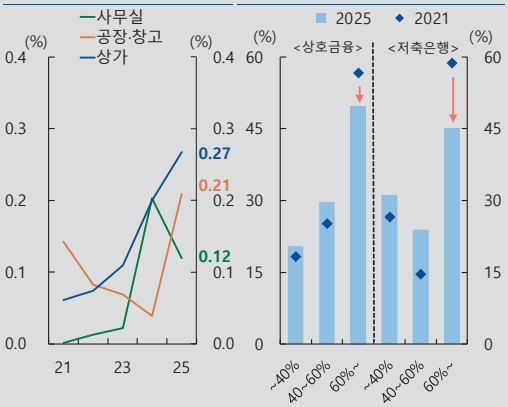
참고 3-4.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잔액 및 연체율[1)]



주: 1) 기말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각 업권별로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의 자산건전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은행의 경우 연체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긴 하나 상가 및 공장·창고(물류센터)의 연체율[82]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비은행의 경우에는 LTV 60% 초과 대출 비중(2025년말 기준)이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하락(2021년말 대비)하였으나 여전히 50% 내외 수준을 보이고 있어 향후 기업활동 위축,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상업용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 해당 대출의 부실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참고 3-5).

참고 3-5.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자산건전성 현황[1)]



주: 1) 기말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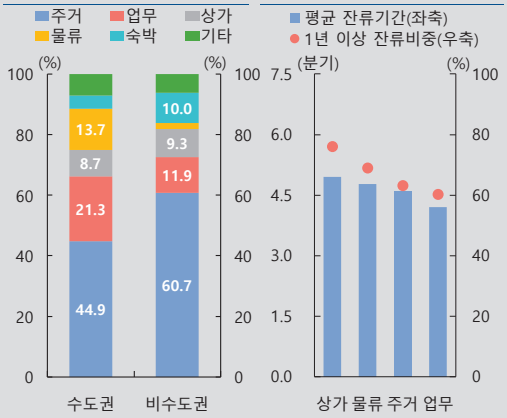
부동산PF 구조조정 지연 가능성

상가, 물류센터 등 상업용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계속될 경우에는 사업성 저하 등으로 부실 사업장에 대한 정리가 늦어지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PF 구조조정이 일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로 유의 및 부실우려 PF 사업장 현황(2025년 12월말 기준)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 물류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13.7%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비수도권에서는 상가가 9.3% 수준에 이르고 있다.[83] 아울러, 유의 및 부실우려 PF 사업장의 해당 등급내 잔류기간을 보면, 상가와 물류센터가 주거시설 등 다른 유형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나는 등 매각 등 정리에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84](참고 3-6).

---

[82] 2025년말 은행(일반은행 및 농협은행) 기준 연체액은 상가 2,603억원, 공장·창고 428억원, 사무실 205억원 순이다.
[83] 경공매 추진 사업장(26년 4월말 기준)을 보더라도, 물류센터와 상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업장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중이 16.7% 및 10.1%로 높은 수준이다.
[84] 법원경매 통계에 따르면, 2025년중 상가의 매각률(매각건수/경매건수)은 15.8%로 주거시설(28.2%) 대비 낮았으며, 매각가율(매각가/감정가) 또한 주거시설은 76.0% 수준이었으나 상가는 49.2%에 불과했다(자료: 법원경매정보).

참고 3-6. PF 부실 사업장[1] 유형별 현황



주: 1) 유의, 부실우려 판정 사업장
2) 사업장 수 비중, 2025년 12월말 기준
3) 2025년 12월말 부실 사업장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평가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상업용부동산 시장은 하이브리드 근무 확산, 온라인 소비 확대 등 생활 방식의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면서 오피스, 상가 등을 중심으로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참고 3-7).

참고 3-7. 주요국 상업용부동산 가격 동향[1][2]

(%)

	미국	유로	독일	싱가포르	한국[3]
하락률[1]	-10.5	-11.7	-13.2	-16.5	-3.1

주: 1) 2020년 이후 고점 대비 하락률(2025년말 기준)
2) 미국, 유로지역은 전체 상업용부동산, 독일은 오피스 및 상가, 싱가포르는 오피스 기준
3) 중대형 상가 임대가격지수 기준(오피스 임대가격지수는 25년말 기준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자료: BIS, 한국부동산원

국내 상업용부동산 시장도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유형별, 지역별로 상이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 주요 권역의 업무시설은 기업의 임차수요가 이어지면서 양호한 반면 비수도권 소재 상가 및 수도권 일부 권역의 물류센터 등이 높은 공실률을 지속하는 등 부진한 모습이다. 특히, 상가 시장의 경우에는 온라인·비대면 소비 확산 등 소비행태의 변화를 고려할 때, 회복이 더딜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 관련 익스포저를 보유한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해당 금융기관들의 경영상황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상업용부동산 시장의 부진으로 재구조화, 매각 등 절차가 지연되면서 부실 사업장의 정리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동산PF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4.

최근 가상자산시장 가격 변동의 특징 [85]

글로벌 가상자산시장은 2025년 10월 10일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 선물시장의 대규모 포지션 청산 등으로 가격이 급락하였다가 최근까지 등락이 이어지고 있다(참고 4-1). 이러한 가운데, 최근 투자주체의 다변화 등 시장 구조가 변하면서 가상자산시장이 전통 금융시장으로 파급되는 정도가 확대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2015년 이후 가상자산의 가격[86] 변동에 영향을 미친 공통 요인들과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가격 변동 요인들을 각각 살펴본 후 가상자산시장과 전통 금융시장 간의 연계성을 평가하고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가격 변동의 공통 요인

가상자산 가격은 글로벌 유동성 흐름, 비트코인 반감기 등의 영향을 받아왔으며, 2022년 테라-루나 사태(5월), FTX 거래소 파산(11월) 등 이례적 충격[87]은 변동성 확대의 개별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글로벌 유동성 축소가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

가상자산 가격은 글로벌 유동성 흐름에 따라 변동해 왔는데, 2015년 이후 비트코인 수익률과 글로벌 M2 증가율 간 상관계수는 가격 상승기(0.27)보다 하락기(0.62)에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뚜렷한 비대칭성을 보였다. 또한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M2 증가율과의 상관계수는 비트코인(0.33)이 나스닥(0.47)을 하회하였으나, 가격 하락기에는 비트코인(0.62)이 나스닥(0.59)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글로벌 유동성 위축 시 가상자산의 가격 조정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참고 4-2).

참고 4-1. 상승·하락기별 주요 가상자산 가격[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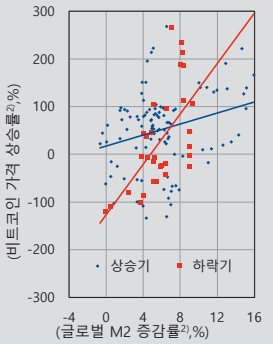
주: 1) 기간중 비트코인 가격의 저점 및 고점을 기준으로 구분
2) 음영은 가상자산 가격 하락기를 의미
자료: CoinGecko

참고 4-2. 글로벌 유동성[1)]과 가상자산 가격 간 연계성

상관계수[2)]

	비트코인	나스닥	금 현물
전체	0.33	0.47	0.06
상승기	0.27	0.47	0.05
하락기	**0.62**	**0.59**	**0.10**

상승기와 하락기 비교



주: 1) 미국, 중국, EU, 일본, 영국, 캐나다의 M2 합계 기준
2) 2015~2026년 3월중 전년동월대비 변화율로 산출
자료: Bloomberg, CoinGecko

85 본고는 박상훈 · 김민수 · 김진(비전통금융분석팀)이 작성, 정연수(금융기관분석부장) · 조성민(비전통금융분석팀장)이 검토하였다.
86 본고에서 가상자산 가격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이는 비트코인이 통화나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경제적 유용성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여전히 있으나(Kashkari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 2026 BOK 국제컨퍼런스), 글로벌 가상자산시장 시가총액 1위로서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87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인 테라-루나의 페깅 실패(de-pegging)에 따른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 붕괴로 비트코인 가격이 한 달여간 40% 가량 하락하였으며, 글로벌 대형거래소 FTX가 고객자금 유용과 이에 따른 대규모 자금인출 요구 등으로 파산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일주일간 25% 이상 하락한 바 있다.

비트코인 반감기 효과 소멸 이후 상당기간 가격 하락 지속

가상자산 가격은 약 4년 주기의 비트코인 반감기(halving) 이후 시차를 두고 상승[88]하다가 일정기간(약 1년 6개월)이 지나면 차익 실현, 상승 기대 약화 등으로 가격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참고 4-3). 비트코인 신규 공급비율이 0.82%로 하락한 4차 반감기(2024년 4월) 이후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큰 폭 상승하였다가 2025년 10월부터 하락세로 전환하였다.

참고 4-3. 반감기별 비트코인 가격 및 신규 공급비율[1)2)]

주: 1) 기존 비트코인 공급량 대비 일별 신규 추가 공급량을 연율화
2) 음영은 가상자산 가격 하락기를 의미
자료: CoinGecko, 한국은행 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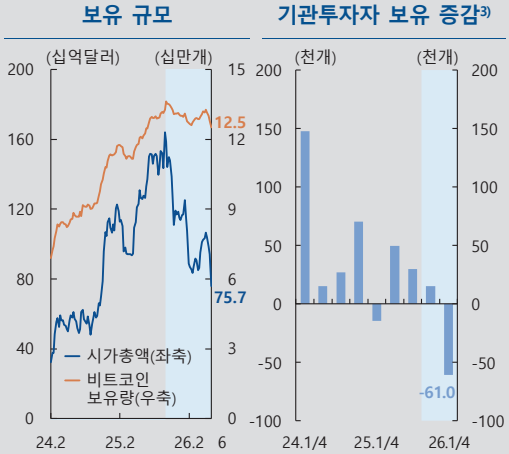
최근 부각되고 있는 가격변동 요인

최근 가상자산시장에서는 미 현물 ETF 도입[89], 선물시장을 통한 레버리지 확대, 가상자산 재무기업(Digital Asset Treasury, 이하 'DAT 기업')[90]의 등장 등 과거와 다른 가격변동 요인이 나타났다.

미 현물 ETF 도입에 따른 쏠림현상 심화

2024년 1월 미 현물 ETF 도입으로 대규모 기관자금이 가상자산시장에 유입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수요 기반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가격 하락기에는 기관투자자의 대규모 ETF 매도가 가격 하락을 증폭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특히 헤지펀드 등의 알고리즘 매매가 늘어남에 따라 일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매도가 급증하는 '쏠림현상(herding)' 등으로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높아졌다. 실제 미 현물 ETF의 비트코인 보유 물량은 2026년 2월말 약 125만 BTC 수준으로, 고점(25년 10월 10일 136.2만 BTC) 대비 8.2% 감소하였고, 동 기간중 평가금액은 40% 이상 급감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었다(참고 4-4).

참고 4-4. 미 현물 ETF의 비트코인 보유 규모[1)2)]



주: 1) 가용자료 제약으로 2024년 2월 및 1/4분기부터 산출
2) 음영은 가상자산 가격 하락기를 의미
3) 미 현물 ETF 중 기관투자자 보유 규모의 전분기 대비 증감
자료: Bloomberg, bitbo.io, 한국은행 시산

88 통상 반감기 직후 채굴 보상 감소로 수익성이 악화된 영세 채굴업자들이 보유 물량을 매도하면서 단기적으로 가격 하락 압력이 확대되다가 공급 감소의 영향이 점차 반영되면서 가격이 상승한다.
89 미국에서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와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2017년 12월 비트코인 선물을 출시하였고,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4년 1월 현물 비트코인 ETP의 상장·거래를 승인하였다.
90 DAT 기업은 자산가치 증대를 위해 자산의 상당액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보유하는 전략을 쓰는 기업을 의미한다.

선물시장의 레버리지 누증에 따른 대규모 청산

미 현물 ETF 도입을 계기로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의 현물-선물 차익거래 수요가 증가하였다. 특히 규제를 받지 않는 역외 거래소를 중심으로 높은 레버리지[91]를 수반한 선물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선물시장의 거래 규모가 현물시장을 압도하고 있다.[92] 이에 글로벌 가상자산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open interest)[93] 규모도 2025년 10월 2,000억달러를 넘어섰다. 레버리지가 확대된 상태에서의 자산가격 하락은 증거금 부족, 포지션 강제 청산, 추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downward spiral)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5년 10월 10일 미국의 대중(對中) 추가 관세부과 발표 등으로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하자, 같은 날 하루에만 167.8억달러의 선물매수 포지션이 강제 청산되었고 이는 가격의 추가 하락을 유발하였다(참고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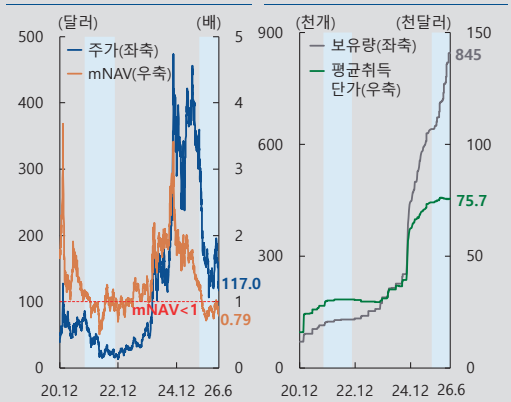
참고 4-5. 가상자산 선물시장 관련 지표

주: 1) 음영은 가상자산 가격 하락기를 의미
자료: Coinglass, CoinGecko

DAT 기업 보유물량 증가에 따른 취약성 누증

2025년 이후 DAT 기업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가상자산 매입 규모도 확대되었다.[94] 특히 최근 ETF 자금 유입 둔화와 개인투자자의 거래 감소 등으로 수요가 약화된 상황에서 미국의 대표적 DAT 기업인 스트래티지(26년 6월 9일 기준 84.5만 비트코인 보유)가 지배적인 비트코인 매수 주체로 부상하고 있는[95] 등 시장 수요가 소수 기업에 편중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하에 가상자산 가격 하락 시 해당 기업의 주가가 동반 하락하면서 기업의 시장가치가 보유 가상자산의 가치를 하회(기업 시가총액/보유가상자산 가치<1)하게 될 경우, 해당 기업은 신주발행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보유 가상자산을 매각할 유인이 커지고, 이는 가상자산 가격의 추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참고 4-6).

참고 4-6.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투자 관련 지표[1)]



주: 1) 음영은 가상자산 가격 하락기를 의미
2) mNAV=시가총액/보유 비트코인의 가치
자료: CoinGecko, BitcoinTreasuriesNet, Bloomberg, 한국은행 시산

[91] CFTC 감독을 받는 미국 내 거래소 CME는 비트코인 선물 레버리지를 약 4배로 제한하는 반면, 역외 거래소인 Binance는 30만달러까지는 150배, 80만달러까지는 100배, 300만달러까지는 75배의 선물 레버리지를 허용한다(26년 6월 9일 기준).

[92] Binance, Bybit, OKX, HTX, Bitget 등 5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기준 최근 1년간 선물거래 규모(551.1조달러)는 현물거래 규모(106.6조달러)의 약 5.2배에 달한다(자료: CoinGecko).

[93] 결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선물계약의 총액으로, 미결제약정 증가는 시장내 레버리지가 누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94] CoinGecko(Digital Asset Treasury Companies Report 2025)에 따르면 DAT 기업 수는 2020년초 4개에서 2025년 10월 142개로 증가했고, 이 중 76개가 2025년에 설립되었다. 이들의 가상자산 보유 규모는 1,373억 달러로 2025년초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95] Bloomberg는 2026년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입 규모가 ETF, 선물,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시장 매수규모의 약 70%를 차지한다고 10X Research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보도하였다(26년 5월 21일, "Bitcoin Grows More Dependent on Saylor's Buying Mach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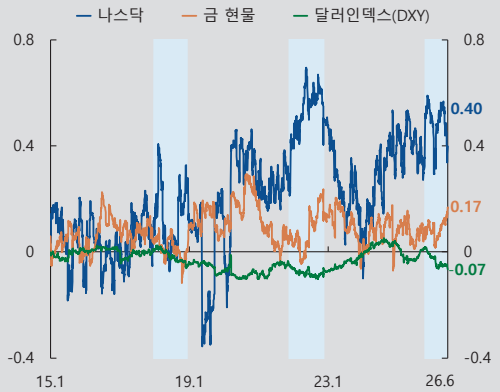
전통 금융시장과의 연계성 평가

가상자산시장은 최근 기관투자자 유입, DAT 기업 확산 등으로 주식시장과의 연계성이 특히 강화되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시장 확대로 채권시장으로의 전이 경로도 형성되고 있다.

주식시장과의 연계성 강화

가상자산시장과 금융시장 간 연계성에 대해 실증분석한 결과[96],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시장 수익률 간 동조화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2022년 글로벌 금리 인상 등 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동조성이 보다 높아지는 움직임을 보였고, 2024년 미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으로 가상자산이 기관투자자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이후에는 과거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미 달러 및 금 시장과 비교하더라도 가상자산시장은 주식시장과 확연히 높은 동조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참고 4-7). 다만, 최근에는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 확대 등으로 시장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상자산시장의 충격이 금 시장으로도 전이되는 사례가 관찰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29일 뉴욕 시장 개장 직후 비트코인 가격과 나스닥 지수가 동반 하락한 가운데 금 선물가격도 함께 하락하였다. 이는 가상자산 가격 급락으로 선물시장에서 마진콜이 발생하자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들이 증거금 확보를 위해 금을 처분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97]

참고 4-7. 비트코인과 나스닥·달러인덱스(DXY)·금(현물가격) 간 동적 조건부 상관계수[1)]



주: 1) 음영은 가상자산 가격 하락기를 의미
자료: CoinGecko, Bloomberg, 한국은행 시산

채권시장으로의 리스크 전이 가능성 증대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모 증가와 함께 준비자산인 미 단기국채(T-bill) 보유가 늘어남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의 충격이 채권시장으로 전이되는 경로가 형성되고 있다. 테더와 서클의 T-bill 보유 규모는 2026년 3월말 기준 약 1,419억달러로, 이는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보유 규모를 상회하는 수준이다(참고 4-8). BIS(2025)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단기국채 금리에 영향을 미치며[98], 특히 환매시 금리 상승폭이 발행시 금리 하락폭의 2~3배에 달하는 비대칭성이 나타난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스테이블코인은 여러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발행·유통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스트레스 상황에서 충격의 원천을 식별하기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한 신뢰 약화가 대규모 환매와 함께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9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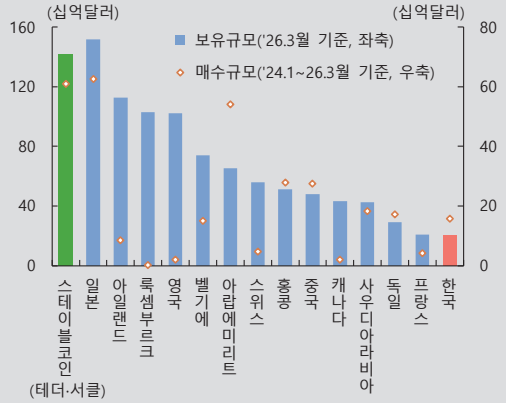
96 연계성은 Engle(2002)이 제안한 DCC-GARCH(Dynamic Conditional Correlation GARCH) 모형을 통해 동적 조건부 상관계수로 측정하였다. DCC-GARCH 모형은 개별 자산의 변동성을 각 자산의 GARCH 모형으로 표준화한 후 표준화된 변동성 간 상관관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구조를 추정하는 다변량 시계열 모형으로 기간 설정의 자의성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97 인베스팅닷컴은 1월말 비트코인 가격 폭락(1월 29~31일)과 함께 발생했던 금 가격 하락의 79%가 비트코인 선물시장의 마진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Gold's 12% Crash: How $1.8bn in Crypto Liquidations Tanked Precious Metals", 26년 2월 2일).

98 Ahmed & Aldasoro(2025, BIS Working Papers, No. 1270)는 35억달러 규모(실제 관측자료의 상위 2~3%에 해당하는 이례적 유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미 T-bill 3개월물 금리를 2.5~3.5bp 낮추며, 단기국채 공급이 부족한 시기에는 금리 하락폭이 5~8bp까지 확대된다고 추정하였다.

99 Carapella et al.(26년 4월 8일, FED Notes)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복잡한 블록체인 확산이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여 위기 시 불안 심리를 심화시킬 수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결제망, 은행, 증권사 등과 통합되면서 운영 장애나 유동성 위기가 전통 금융시스템으로 파급될 수 있는 경로가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참고 4-8.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및 주요국 중앙은행의 미 T-bill 보유 및 매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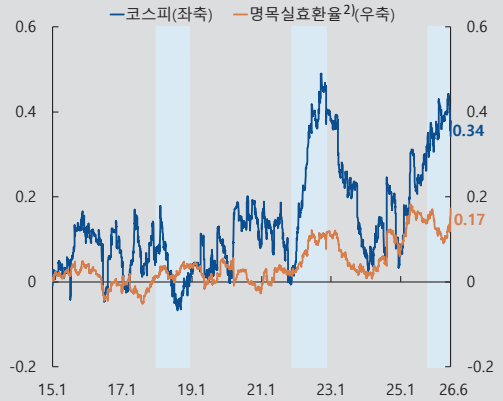


자료: 미 재무부 TIC, 테더·서클 준비자산 보고서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시사점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현·선물 ETF 거래가 허용되지 않았고 법인의 시장 참여도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가상자산 가격 변동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최근 들어 비트코인과 국내 금융시장 간 연계성이 직간접적으로 높아지는 모습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비트코인과 코스피 간 동적 조건부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낮은 수준에서 움직였으나, 2022년 글로벌 유동성 긴축기와 최근의 경우,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과 외환시장(명목실효환율[100]) 간 관계는 뚜렷하지 않으나, 최근 낮은 수준의 동조성이 관찰되고 있다. 이는 글로벌 투자자의 위험회피심리가 양 시장에 모두 반영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참고 4-9). 추후 기관 및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가 늘어날 경우[101] 가상자산 가격 변동이 법인 보유자산의 평가손익이나 포트폴리오 조정 등을 통해 주식 및 외환시장 수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참고 4-9. 비트코인과 국내 금융시장 가격 변수 간 동적 조건부 상관계수[1)]



주: 1) 음영은 가상자산 가격 하락기를 의미
2) 주요 교역상대국 통화에 대한 환율을 교역비중으로 가중평균

자료: Coingecko, Bloomberg, 한국은행 시산

또한 현재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법제화되고 발행 규모가 증가할 경우 준비자산 운용 및 환매 과정에서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의 신뢰성 약화로 대규모 환매 요구가 발생할 경우 준비자산 매각이 금융시스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발행잔액, 준비자산 구성, 환매 대응 능력 등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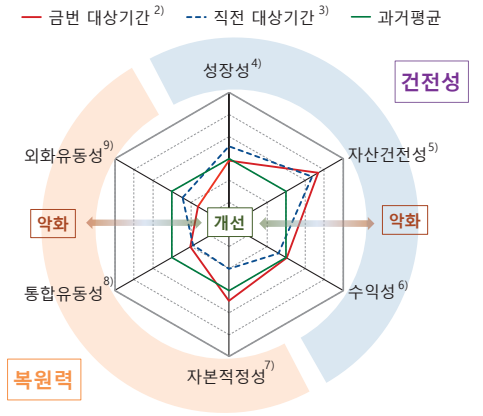
100 명목실효환율(NEER, Nominal Effective Exchange Rate)은 자국 통화의 대외가치를 교역 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환율로 지수가 상승하면 자국 통화가치의 절상을, 하락하면 절하를 의미한다. 본고는 달러인덱스(DXY)가 교역상대국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가치를 가중평균한 점을 고려하여 원화 명목실효환율을 사용하였다.

101 지난해 정부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유관기관 TF를 통해 상장법인 등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법인의 단계적인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추진합니다」(25년 2월 14일)를 참조하기 바란다.

3. 금융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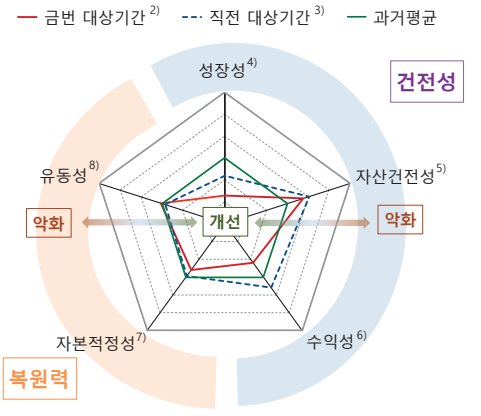
- **은행**[102]은 자산 증가세가 지속된 가운데 자산건전성이 소폭 저하되었으나 수익성은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자본비율이 고환율 지속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감독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유동성 대응능력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비은행금융기관**은 모든 업권에서 수익성이 개선된 가운데 자산건전성은 보험·증권회사에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상승하고 여타 비은행금융기관에서는 하락하는 등 업권별로 상이한 흐름을 나타내었다. 자본적정성 비율 등 손실흡수능력은 모든 업권에서 감독기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유동성 대응능력도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 **상호연계성** 측면에서는 투자펀드 중심으로 업권 간 연계가 강화된 가운데, 국내외 주식투자 증가 등으로 비은행이 가계에서 조달한 자금을 기업 및 비거주자 부문으로 운용하는 중개구조가 심화되었다.
- **(금융기관 평가)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 비율 등 복원력이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부 업권의 자산건전성이 저하되고 비은행 중심으로 상호연계성이 강화되고 있어 대내외 여건 악화 시 리스크가 타 업권에 빠르게 전이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Ⅰ-3-1. 은행 건전성 및 복원력 변화 지도[1)]



주: 1) 각 지표별 최근 5년 평균을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금번 대상 기간과 직전 대상기간 지표의 상대적 수준을 지도에 도시
2) 2026년 1/4분기말(통합 및 외화유동성은 26년 4월)
3) 2025년 3/4분기말(수익성은 25년 1/4분기)
4) 총자산증가율
5) 고정이하여신비율
6) 총자산순이익률(ROA)
7) BIS 기준 총자본비율
8)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9) 외화 LCR
자료: 한국은행,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그림 Ⅰ-3-2. 비은행 건전성 및 복원력 변화 지도[1)]



주: 1) 각 지표별 최근 5년 평균을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금번 대상 기간과 직전 대상기간 지표의 상대적 수준을 지도에 도시
2) 2026년 1/4분기말
3) 2025년 3/4분기말(수익성은 25년 1/4분기)
4) 총자산증가율
5) 고정이하여신비율
6) 총자산순이익률(ROA)
7) 비은행업권별 자본비율을 총자산 규모에 따라 가중평균
8) 유동성비율(보험은 25년 4/4분기말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자료: 한국은행 시산

[102] 금융안정보고서의 은행 부문은 일반은행(시중, 지방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만을 분석대상으로 하며, 영업모델이 상이한 특수은행(산업, 기업, 수출입, 농협 및 수협 은행)은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1) 은행

자산 증가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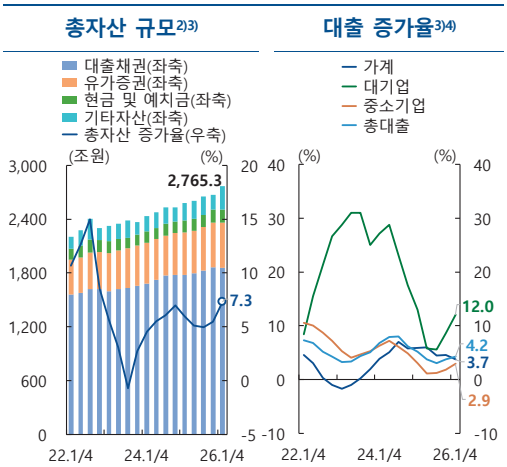
일반은행의 총자산은 2026년 1/4분기말 2,765.3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3% 증가하면서 지난해 3/4분기말(4.9%)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그림 I-3-3).

자산 항목별로 살펴보면, 대출채권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기업대출 확대 등으로 지난해 3/4분기말(3.1%)에 비해 높아진 4.3%를 기록하였다. 유가증권은 전년동기대비 7.3% 증가하면서 전년 3/4분기말(9.5%)보다 증가세가 축소되었다.

차주별 대출(원화대출금 기준)을 살펴보면, 가계대출은 전년동기대비 3.7% 증가하며 지난해 3/4분기말(4.4%)보다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기업대출은 4.6% 증가하였는데, 대기업(12.0%)과 중소기업(2.9%) 모두 지난해 3/4분기말(각각 5.6%, 1.2%) 대비 상당폭 확대되었다.

중동사태 발생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기업 중심의 여신 확대 전략 및 생산적 자금 공급을 위한 은행의 역할 강화 기조 등의 영향으로 기업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103]

그림 Ⅰ-3-3. 일반은행 총자산 규모[1] 및 대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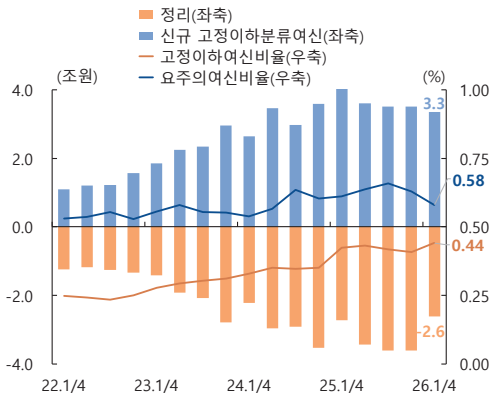
주: 1) 은행계정 기말 잔액 기준
2) 원화대출, 외화대출 및 환매조건부채권 매수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차감 후 잔액 기준
3) 전년동기대비
4)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기준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자산건전성 저하

일반은행의 자산건전성 핵심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6년 1/4분기말 0.44%로 전년 3/4분기말(0.42%)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이는 고정이하여신의 신규 발생 규모 축소(25년 3/4분기 3.5조원 → 26년 1/4분기 3.3조원)에도 불구하고 정리 규모가 상당폭 감소(3.6조원 → 2.6조원)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고정이하여신의 직전 단계인 요주의여신비율[104]은 2026년 1/4분기말 0.58%로 전년 3/4분기말(0.66%) 대비 개선되었다(그림 I-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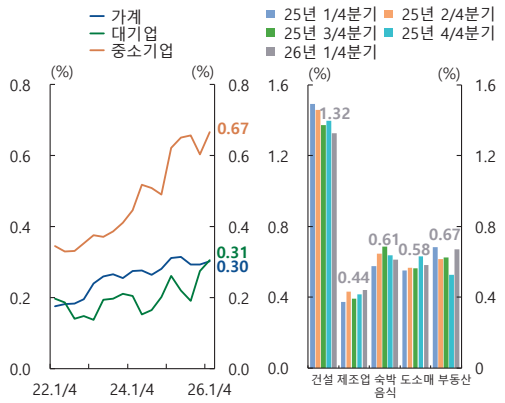
[103] 2026년 2/4분기중 국내은행의 대출태도(전망 기준)는 대기업이 다소 완화되고 중소기업은 전분기 수준이 유지되는 반면, 가계대출은 다소 강화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104] 자산건전성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구분되는데, 요주의여신은 1~3개월 연체여신 등을 포함한 부실징후 여신을 의미한다.

그림 Ⅰ-3-4. 일반은행 고정이하여신비율[1] 및 부실채권 발생·정리[2] 실적[3]



주: 1) 기말 기준
2) 회수, 대손상각, 매각, 건전성 재분류, 채권 재조정 등 포함
3) 기간중 기준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그림 Ⅰ-3-5. 일반은행 차주별·업종별 고정이하여신비율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차주별로 보면, 가계 여신의 2026년 1/4분기말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30%로 2025년 3/4분기말(0.29%) 대비 상승하였다. 기업 여신의 경우에도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각각 0.31%, 0.67%로 전년 3/4분기말(0.19%, 0.66%)보다 모두 상승하였다(그림 Ⅰ-3-5).

기업여신의 업종별 고정이하여신비율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2026년 1/4분기말 0.44%로 2025년 3/4분기말(0.39%)에 비해 상승하였으며 부동산업(25년 3/4분기 0.62% → 26년 1/4분기 0.67%), 도소매업(0.56% → 0.58%)도 상승하였다. 반면 건설업(1.37% → 1.32%), 숙박음식업(0.69% → 0.61%)은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최근 은행의 부실여신 관리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종의 업황 회복 지연 등으로 자산건전성 개선이 제약된 것으로 보인다.[105]

수익성 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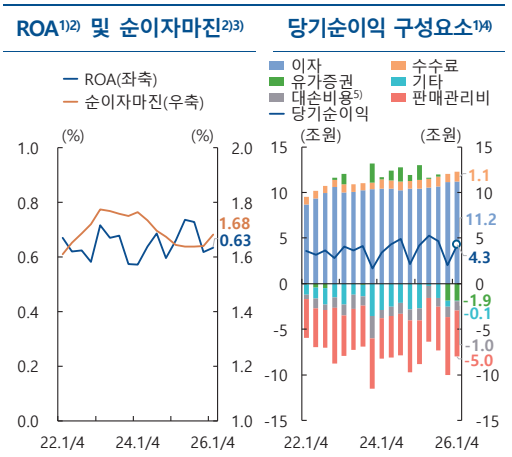
일반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 누적 분기 실적의 연율 환산 기준)은 2026년 1/4분기 0.63%로 전년동기(0.66%) 대비 소폭 하락하였다. 순이자마진(NIM)은 2026년 1/4분기 1.68%로 전년동기(1.64%) 대비 소폭 개선되었다.

당기순이익 규모는 2026년 1/4분기중 4.3조원으로 전년동기(4.2조원) 수준을 유지하였다. 순이익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이자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0.8조원)한 반면 유가증권 평가손익이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상당폭 감소(-3.1조원)하였다(그림 Ⅰ-3-6).

일반은행의 수익성은 유가증권 평가손실 등에도 불구하고 순이자마진 개선, 이자수익 산정대상 자산[106] 규모 확대(25년 1/4분기 대비 +109.2조원) 등에 힘입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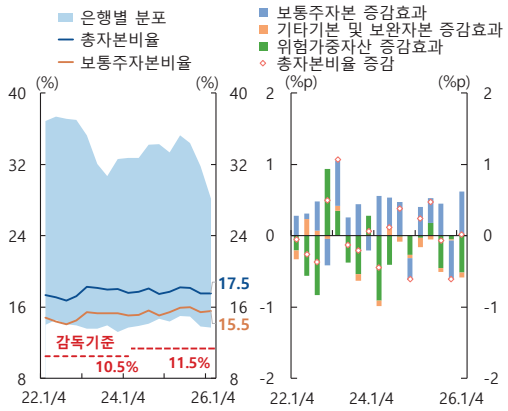
105 자세한 내용은 <참고 5>「국내은행 부실여신의 증가 배경 및 정리 현황」을 참조하기 바란다.
106 예치금, 유가증권, 대출채권, 기타운용자산(종금계정대, 신탁계정대여금, 본지점계정 등) 등 금리부 자산을 말한다.

그림 Ⅰ-3-6. 일반은행 수익성



주: 1) 대손준비금 전입 전 금액 기준
2) 누적 분기 실적을 연율로 환산
3) (이자수익자산 운용수익 – 이자비용부채 조달비용) / 이자수익자산 영업규모
4) 기간중 기준
5) 대손상각비, 충당금 순전입액 및 대출채권 매매손익 포함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그림 Ⅰ-3-7. 일반은행 바젤Ⅲ 기준 자본비율 1)2)3) 및 자기자본비율 변동 요인분해 1)2)4)



주: 1) 2024년부터 토스뱅크 포함
2) 기말 기준
3) 2026년 규제기준: 보통주자본비율 8%, 총자본비율 11.5%(2024년 5월부터 부과된 경기대응완충자본 추가적립(1%) 포함). D-SIB의 경우 각각 9%, 12.5%
4) 전분기대비 총자본비율 증감을 자본 및 위험가중자산 증감이 기여한 정도로 각각 분해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손실흡수능력 다소 저하

일반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 기준 총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은 2026년 1/4분기말 각각 17.5% 및 15.5%로 2025년 3/4분기말(18.1%, 16.0%) 대비 하락하였다. 이는 고환율 지속[107]과 ELS 판매 관련 운영리스크 인식[108], 위험가중자산 하한[109]의 상향 조정 등으로 위험가중자산 규모가 확대된 데 기인하였다(그림 Ⅰ-3-7).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2026년 1/4분기말 143.3%로 지난해 3/4분기말(157.8%) 대비 14.6%포인트 하락[110]하였다. 이는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고정이하여신이 증가(+0.6조원)한 데 반해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소폭 축소[111](-0.2조원)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손실흡수능력을 보강하는 대손준비금은 2026년 1/4분기말 12.8조원으로 지난해 3/4

107 환율 상승 시 은행 외화자산의 원화환산액이 증가하고 통화파생거래 신용위험이 확대되는 등 신용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나면서 자본비율이 하락한다. 자세한 내용은 2025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 <참고 5>「은행권 자본비율 관리 여건의 변화 및 평가」를 참조하기 바란다. 한편, 금융당국은 환율 상승에 대응하여 은행권 해외점포 출자금에 대하여 구조적 외환포지션으로 승인하고 시장리스크 산출시 제외(25년 2월)한 데 이어 금년 4월에는 해외 장기기분투자 및 해외점포 이익잉여금을 구조적 외환포지션으로 추가 인정하였다.

108 ELS의 불완전 판매 사유로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이는 절차, 인력 및 시스템 또는 외부 사건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운영리스크 손실사건에 해당하여 운영위험가중자산을 증대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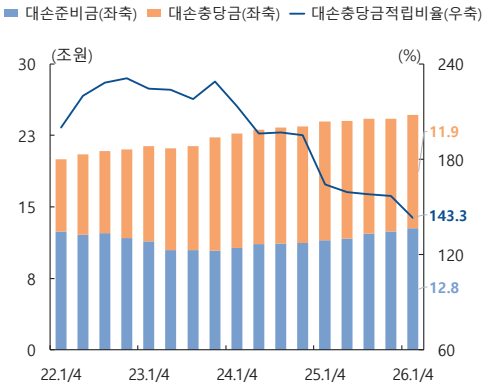
109 바젤Ⅲ 최종안에 따라 은행이 내부모형으로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이 표준방법으로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의 일정 비율에 상응하는 규모에 미달할 경우 동 차액만큼 위험가중자산을 가산하도록 하는 자본규제로, 2026년에는 위험가중자산 하한이 60%에서 65%로 상향 조정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2025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 <참고 5>「은행권 자본비율 관리 여건의 변화 및 평가」를 참조하기 바란다.

110 다만 2026년 1/4분기말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2020년말(146.8%)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코로나 직전 시기인 2019년말(116.2 %)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모습이다.

111 일부 은행의 경우 부동산업을 중심으로 고정이하여신이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담보물로 회수가 가능함에 따라 충당금 적립 요인이 제한적이었다.

분기말(12.2조원) 대비 0.6조원 증가하였다(그림 I-3-8).

그림 Ⅰ-3-8. 일반은행 대손충당금적립비율[1)]



주: 1) 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 기말 기준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단순기본자본비율(바젤Ⅲ 레버리지비율 규제)은 2026년 1/4분기말 5.7%로 지난해 3/4분기말(5.9%) 대비 하락하였으나 모든 은행이 감독기준(3%)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표 I-3-1).

표 Ⅰ-3-1. 일반은행 단순기본자본비율[1)2)]

(%)

	2024년			2025년				2026년
	2/4	3/4	4/4	1/4	2/4	3/4	4/4	1/4
평 균	5.8	5.9	5.7	5.7	5.8	5.9	5.6	5.7
중위값	6.0	6.0	6.1	6.0	6.0	6.2	5.8	5.9

주: 1) 2024년부터 토스뱅크 포함
2) 기본자본(보통주자본+기타기본자본)/총익스포저, 기말 기준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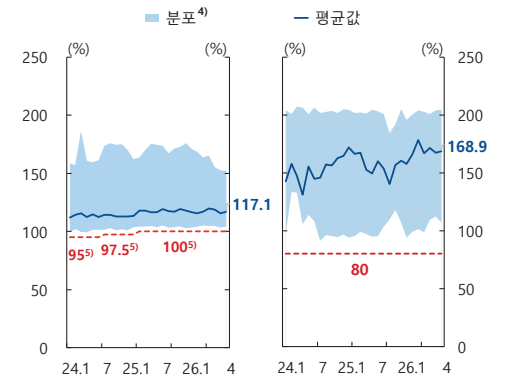
일반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은 자기자본비율이 감독기준(11.5%, D-SIB[112] 12.5%)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 적립 규모가 고정이하여신 규모를 크게 초과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동성 대응능력 양호

일반은행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이 소폭 하락하였으나 감독기준(100%)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유동성 대응능력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2026년 4월중 117.1%로 지난해 9월(118.1%) 대비 1.1%포인트 하락하였다. 이는 국채 등 고유동성자산 확대(+13.4조원)에도 불구하고 도매자금 증가 등으로 순현금유출액이 확대(+14.8조원)된 데 주로 기인하였다. 한편 외화유동성 대응여력을 나타내는 외화 LCR은 2026년 4월중 168.9%로 고유동성자산 확대 등에 힘입어 지난해 9월(160.4%) 대비 8.4%포인트 상승하였으며, 모든 은행이 감독기준(80%)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다(그림 I-3-9).

그림 Ⅰ-3-9. 일반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주: 1) 고유동성자산/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각각 월중 평잔)
2) 고유동성 외화자산/향후 30일간 외화 순현금유출액(각각 월중 평잔)
3) 외화부채 규모 기준 미달로 인터넷전문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은 외화 LCR 규제 적용 대상 제외
4) 인터넷전문은행은 분포에서 생략
5) 2023년 7월~2024년 6월 95%, 2024년 7~12월 97.5%, 2025년 1월부터 100% 적용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112] 2026년 국내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D-SIBs,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는 신한은행(신한지주), 우리은행(우리지주), 국민은행(KB지주), 하나은행(하나지주) 및 농협은행(농협지주)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은행 자금조달 구조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나타내는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Net Stable Funding Ratio)은 2026년 1/4분기말 113.0%로 개별 은행 모두 감독기준(100%)을 충족하였다(표 I-3-2).

표 Ⅰ-3-2. 일반은행 NSFR[1)2)3)]

(%)

	2024년			2025년				2026년
	2/4	3/4	4/4	1/4	2/4	3/4	4/4	1/4
평 균	115.1	116.0	116.1	115.7	114.4	115.6	115.2	113.0
중위값	111.8	111.9	111.9	111.4	110.9	110.6	109.5	107.3

주: 1) 2024년부터 토스뱅크 포함
2) 가용안정자금조달금액/필요안정자금조달금액, 기말 기준
3) 감독기준은 100%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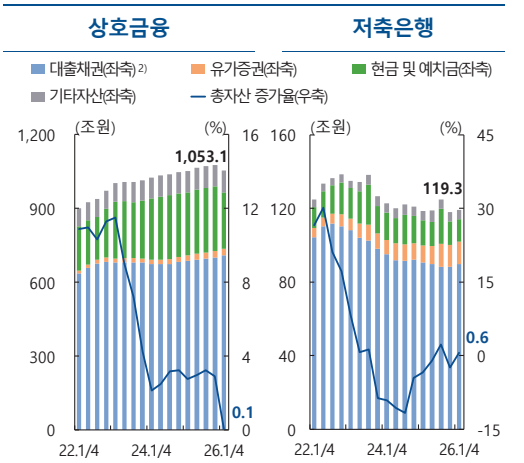
(2) 비은행금융기관 [113]

가. 비은행예금취급기관 [114]

자산 성장세 둔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자산 성장세는 둔화되었다. 2026년 1/4분기말 기준 상호금융의 총자산은 1,053.1조원으로 대출채권이 증가하였으나 현금 및 예치금이 크게 감소하며 전년동기대비 0.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저축은행의 총자산도 119.3조원으로 건전성 관리 지속, 현금 및 예치금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0.6% 늘어나면서 2025년 3/4분기말(2.3%)보다 증가세가 둔화되었다(그림 I-3-10).

그림 Ⅰ-3-10.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총자산 규모 및 증가율[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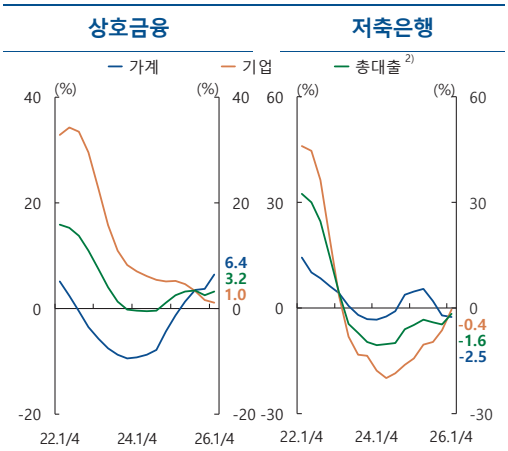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2) 대손충당금 차감 후 잔액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113 금융안정보고서의 비은행금융기관 부문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과 비예금금융기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14 금융안정보고서의 비은행금융기관 중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부문에서는 상호금융조합(이하 '상호금융')과 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을 분석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대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호금융의 경우 2026년 1/4분기말 기준 총대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이 3.2%로, 2025년 3/4분기말(3.4%)과 비슷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차주별로는 기업대출 증가세가 2025년 3/4분기보다 축소(3.3% → 1.0%)된 반면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확대(3.5% → 6.4%)되었다.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2026년 1/4분기말 기준 총대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이 -1.6%로 2025년 3/4분기(-4.1%)보다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차주별로는 가계대출이 규제강화 등으로 감소 전환(2.0% → -2.5%)되었으나 기업대출은 대규모 PF 부실채권 정리의 영향이 줄어들면서 감소폭이 크게 축소(-9.6% → -0.4%)되었다(그림 Ⅰ-3-11).

그림 Ⅰ-3-11.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차주별 대출 증가율[1]



주: 1) 전년동기대비
2) 정책자금대출금 등 기타대출 포함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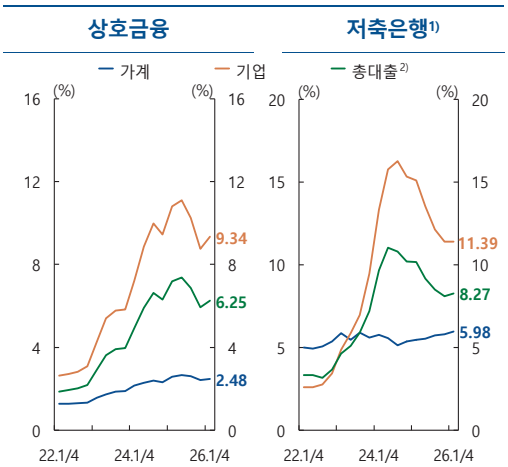
자산건전성 대체로 개선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자산건전성은 PF 구조조정 지속, 자산건전성 관리 등의 영향으로 개선되었다.

상호금융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6년 1/4분기말 6.25%로 2025년 3/4분기말(6.86%) 대비 0.61%포인트 하락하였다. 차주별로는 가계여신이 2026년 1/4분기말 2.48%로 2025년 3/4분기말보다 0.12%포인트 하락하였으며, 기업여신도 9.34%로 동 기간중 0.90%포인트 하락하였다.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6년 1/4분기말 8.27%로 2025년 3/4분기말(8.49%)보다 0.22%포인트 하락하였다. 차주별로 보면 가계여신은 2026년 1/4분기말 5.98%로 2025년 3/4분기말보다 0.25%포인트 상승한 반면, 기업여신은 부실채권 정리 등에 힘입어 0.72%포인트 하락하면서 11.39%를 기록하였다(그림 Ⅰ-3-12).

그림 Ⅰ-3-12.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고정이하여신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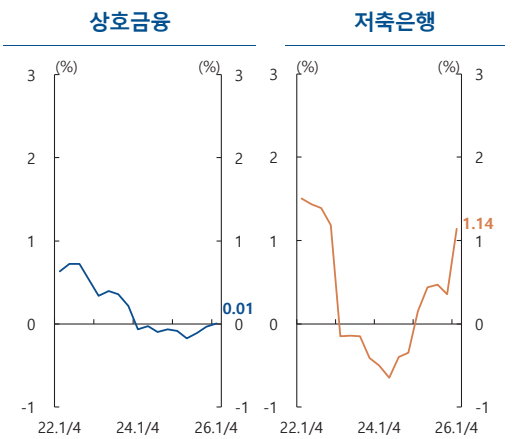
주: 1) 미사용약정 포함 기준
2) 정책자금대출금 등 기타대출 포함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수익성 다소 개선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수익성은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상호금융의 총자산순이익률(ROA, 누적 분기 실적의 연율 환산 기준)은 2026년 1/4분기 0.01%로 2024년 1/4분기 음(-)의 값으로 전환된 이후 9분기 만에 양(+)의 값으로 전환되었다. 저축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은 1.14%로 2025년 1/4분기(+0.15%)에 양(+)의 값으로 전환된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그림 I-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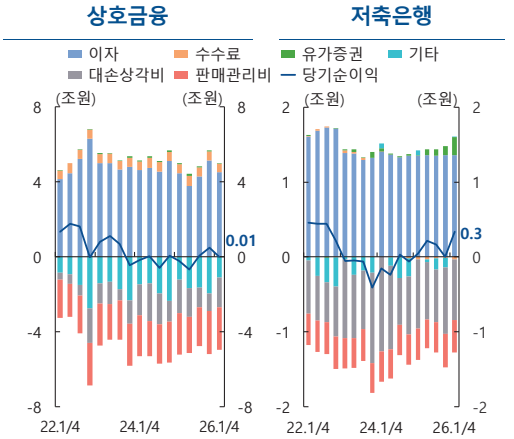
그림 Ⅰ-3-13.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총자산순이익률(ROA)[1)]



주: 1) 누적 분기 실적을 연율로 환산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한편,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당기순이익을 살펴보면, 상호금융은 2026년 1/4분기중 13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여 전년동기(당기순손실 0.2조원) 대비 개선되었다. 이는 PF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대손상각비(1.6조원)가 전년동기대비 0.2조원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하였다. 저축은행도 대손상각비 감소 등에 힘입어 2026년 1/4분기중 당기순이익이 0.3조원을 기록하면서 전년동기(444억원)보다 증가하였다(그림 I-3-14).

그림 Ⅰ-3-14.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당기순이익 구성요소[1)]



주: 1) 기간중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손실흡수력 양호한 수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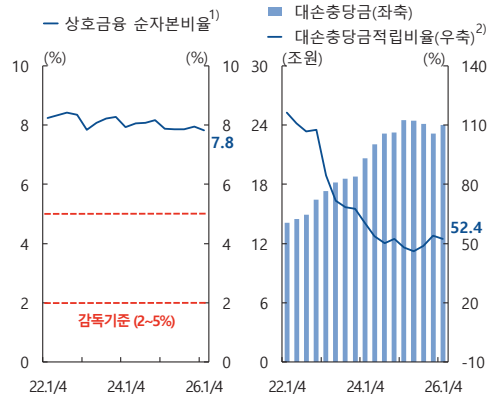
상호금융의 순자본비율[115]은 2026년 1/4분기말 7.8%로 2025년 3/4분기말(7.9%)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감독기준(2~5%)을 상당폭 상회하였다. 대손충당금적립비율(대손충당금[116]/고정이하여신)은 고정이하여신이 상당폭 감소[117]하면서 2025년 3/4분기말 48.8%에서 2026년 1/4분기말 52.4%로 3.6%포인트 상승하였다(그림 I-3-15).

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도 2026년 1/4분기말 16.0%로 2025년 3/4분기말(15.7%) 대비 0.3%포인트 상승하였다. 대손충당금적립비율도 고

115 순자본비율=(총자산-총부채-출자금+후순위차입금+대손충당금)/(총자산+대손충당금)×100, 단 출자금은 조합원 탈퇴 시 환급이 보장된 출자금에 한한다.
116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비율[대손충당금 잔액/설정대상자산(대출채권 등)에 대한 요적립액]은 2026년 1/4분기말 110.5%(새마을금고 제외)로 감독기준(100%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117 상호금융 고정이하여신은 부실채권 매·상각 등으로 2025년 3/4분기말 49.4조원에서 2026년 1/4분기말 45.9조원으로 3.5조원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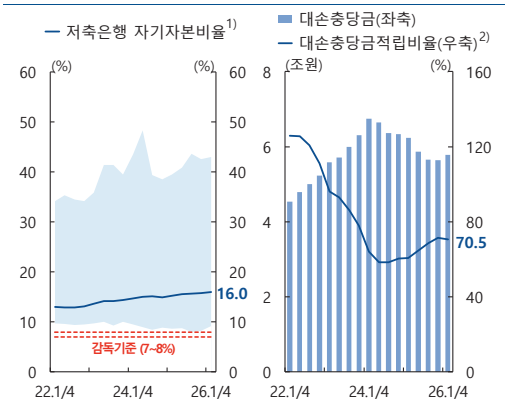
정이하여신 감소 등으로 2025년 3/4분기말 68.6%에서 2026년 1/4분기말 70.5%로 상승(+1.9%포인트)하였다(그림 I-3-16).

그림 Ⅰ-3-15. 상호금융 손실흡수력 지표



주: 1) 감독기준 농협 5%, 수협·신협·산림조합 2%, 새마을금고 4%
2) 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대출채권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그림 Ⅰ-3-16. 저축은행 손실흡수력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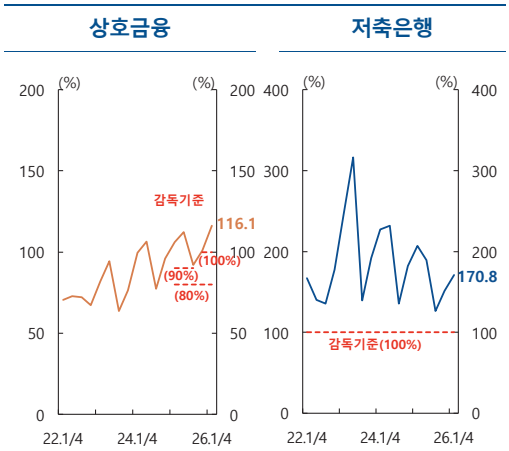


주: 1)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감독기준 7%(자산 1조원 이상은 8%), 음영은 개별 저축은행 분포
2) 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대출채권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유동성비율 감독기준 상회

상호금융의 유동성비율은 2026년 1/4분기말 116.1%로 2025년 3/4분기말(92.0%) 대비 24.1%포인트 상승하여 감독기준(80~100%)[118]을 상회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유동성비율도 2026년 1/4분기말 170.8%로 2025년 3/4분기말(126.6%)보다 44.3%포인트 상승하면서 감독기준(100%)을 크게 상회하였다. 금년 1/4분기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비율이 상승한 것은 유동성비율의 산정 방식이 변경[119]되고, 기존 예금의 만기가 직전 분기인 2025년 4/4분기중에 상당부분 도래하면서 유동성부채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하였다(그림 I-3-17).

그림 Ⅰ-3-17.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유동성비율1)2)



주: 1) 잔존만기 3개월이내 유동성자산/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
2) 저축은행은 감독규정(제40조의4)에 따른 규제비율 100% 적용, 상호금융은 감독규정(제12조)에 따라 자산규모별로 80~100% 적용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118 상호금융은 2024년 12월 29일(새마을금고는 25년 1월 1일)부터 유동성비율 규제(90% 이상, 자산 300억원 미만은 80% 이상)가 시행되었다. 단, 자산 1,000억원 이상 조합은 2025년 12월 29일부터, 금고는 2026년 1월 1일부터 규제비율이 100%로 강화되었다.

119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으로 26.1/4분기부터 상호금융의 잔존만기 3개월 초과 중앙회 정기예치금이 유동성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나. 비예금금융기관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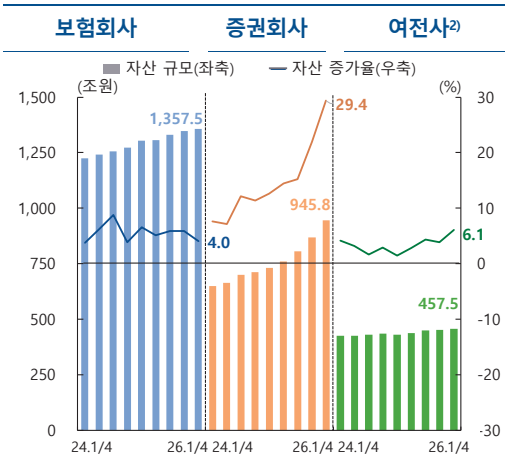
자산 증가세 견조

보험회사의 총자산 증가율은 2026년 1/4분기말 전년동기대비 4.0%를 기록하였다. 이는 장기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보험회사 채권 보유 잔액이 감소하였으나, 주가 상승에 따라 주식 보유 잔액이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하였다[121](그림 I-3-18).

증권회사 총자산 증가율은 2026년 1/4분기말 29.4%로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는 국내외 주식시장 호조에 따라 투자자 예탁금 유입세가 지속되는 데다[122], 유가증권 운용규모도 확대[123]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그림 I-3-18).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총자산 증가율은 2026년 1/4분기말 6.1%로, 2025년 3/4분기말(4.4%) 대비 1.7%포인트 상승하였다. 이는 신용카드사의 카드대급금(4.8% → 7.6%), 캐피탈사의 할부·리스자산(4.6% → 6.2%) 등 주요 영업자산의 증가폭이 상당폭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하였다(그림 I-3-18).

그림 Ⅰ-3-18. 비예금금융기관 총자산 규모 및 증가율[1]



주: 1) 전년동기대비
2) 미수금 제외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자산건전성 업권별 차별화

보험회사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6년 1/4분기말 1.13%로 2025년 3/4분기말 대비 0.15%포인트 상승하였다. 보험업권별로는 생명보험회사가 0.79%로 2025년 3/4분기말 대비 0.26%포인트 상승하였는데, 이는 일부 생명보험사의 부동산 PF 대출이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된 데 주로 기인한다.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1.56%로 2025년 3/4분기말(1.57%)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그림 I-3-19).

---

[120] 금융안정보고서의 비은행금융기관 중 비예금금융기관 부문에서는 보험회사, 증권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분석대상으로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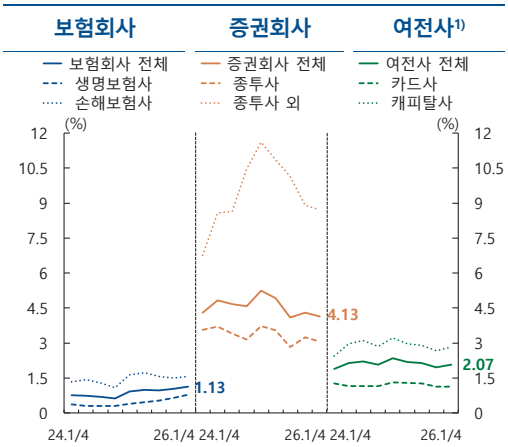
[121] 2026년 1/4분기말 보험회사의 보유 유가증권은 956.9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8.6조원이 증가(+4.2%)하였는데,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채권 보유잔액은 49.9조원 감소한 반면 주식 보유잔액은 66.2조원 증가하였다.

[122] 2026년 1/4분기말 투자자 예탁금은 전년동기대비 51.8조원이 증가(+88.6%)하였으며, 신용공여금도 전년동기대비 21.2조원이 증가(+55.7%)하였다.

[123] 2026년 1/4분기말 증권회사의 보유 유가증권은 전년동기대비 86.4조원 증가(+18.4%)하였으며, 이 중 채권증가분이 27.9조원, 주식 증가분이 20.5조원이다.

증권회사[124]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6년 1/4분기말 4.13%로 2025년 3/4분기말(4.10%)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업권별로는 종투사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3.05%로 2025년 3/4분기말(2.83%)대비 소폭 상승한 반면, 비종투사(8.71%)는 부동산PF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등의 영향으로 2025년 6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그림 I-3-19).

그림 Ⅰ-3-19. 비예금금융기관 고정이하여신비율



주: 1) 미수금 제외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6년 1/4분기말 2.07%로 2025년 3/4분기말(2.15%) 대비 0.08%포인트 하락하였다. 신용카드사는 부실채권 상각 등으로 고정이하여신이 줄어들면서 2025년 3/4분기말 1.26%에서 2026년 1/4분기말 1.14%로 하락하였다. 캐피탈사도 대출채권, 리스자산 등 자산건전성 분류 대상 총여신이 증가하면서 동 기간중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90%에서 2.84%로 하락하였다(그림 I-3-19).

수익성 개선

보험회사의 총자산순이익률(ROA, 누적 분기 실적의 연율 환산 기준)은 2026년 1/4분기 1.32%로 전년동기(1.26%) 대비 상승하였다. 보험회계의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강화조치[125] 지속 등으로 보험손익은 감소하였으나, 유가증권 관련 투자손익이 증가하여 영업손익[126]이 개선되었다(그림 I-3-20).

증권회사의 총자산순이익률은 2026년 1/4분기 1.69%로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심리 개선, 대체거래소 출범에 따른 유가증권 거래대금 증가로 수수료수익의 견조한 흐름[127]이 이어지면서 전년동기(1.26%) 대비 상승하였다(그림 I-3-20).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총자산순이익률은 2026년 1/4분기 1.39%로 전년동기(1.30%) 대비 0.09%포인트 상승하였다. 신용카드사는 외화환산 손실, 카드비용 증가 등으로 수익성이 저하된 반면, 캐피탈사는 주가 상승에 따른 유가증권 관련

124 증권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대상 자산은 대출채권과 채무보증이며, 이 중 대출채권은 신용공여금(신용거래융자금, 주식청약자금 대출금, 증권매입자금 대출금 등), 대출금, 사모사채 등으로 구성된다. 2026년 1/4분기말 기준 증권회사의 총자산 대비 자산건전성 분류 대상 자산 비중은 약 19.4%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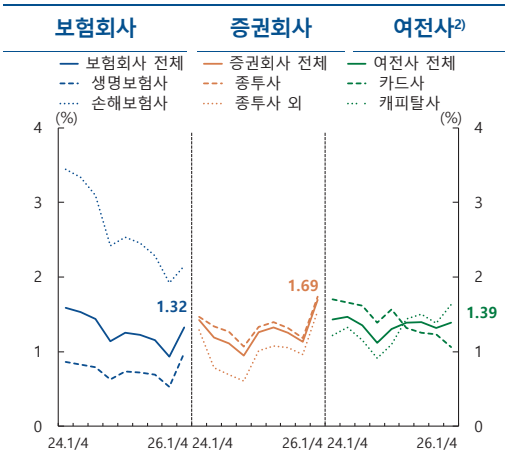
125 감독당국은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24년 11월 6일),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방안 마련」(26년 1월 21일)을 통해 보험부채 산출시 사용되는 주요 계리적 가정(손해율, 할인율, 사업비율)이 객관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2024년 결산부터 일부 낙관적이었던 계리가정을 수정함에 따라, 향후 인식될 미실현이익인 계약서비스마진(CSM)은 감소하는 한편, 향후 보험계약에서 발생할 순현금유출의 현재가치인 최선추정부채(BEL)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26 2026년 1/4분기말 보험손익은 3.03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00억원(-1.9%) 감소하였으나, 투자손익은 2.56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300억원(+10.0%) 증가하였다.

127 2026년 1/4분기말 수수료수익은 6.7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3조원(+98.9%) 증가하였는데 이는 2026년 1/4분기중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누계 기준, 2,775.4조원)이 전년동기대비 2,134.6조원(+333.1%)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다.

수익과 배당금 수익[128] 등이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었다(그림 I-3-20).

그림 Ⅰ-3-20. 비예금금융기관 총자산순이익률(ROA)[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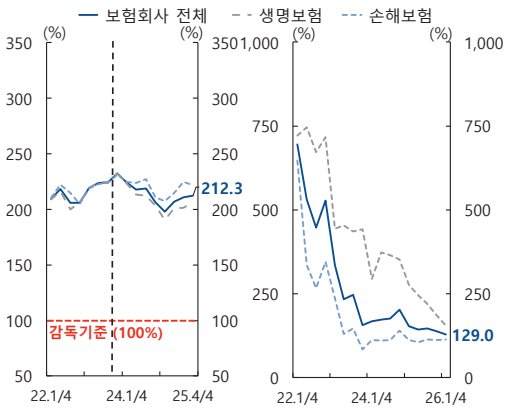
주: 1) 누적 분기 실적을 연율로 환산
2) 대손준비금 반영 후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자본적정성 양호한 수준 지속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인 K-ICS비율[129](경과조치 적용 후 기준)은 2025년 4/4분기말 212.3%로, 유가증권 관련 손익의 증가로 가용자본이 늘어나면서 2025년 3/4분기말 대비 1.5%포인트 상승하였다. 보험회사의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2026년 1/4분기말 129.0%로 2025년 3/4분기말 대비 17.8%포인트 하락하였다(그림 I-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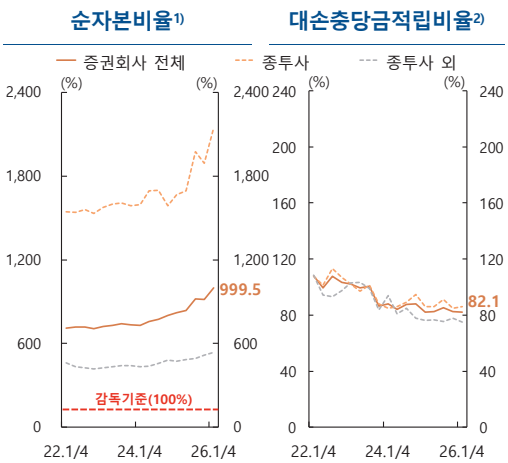
증권회사의 순자본비율은 2026년 1/4분기말 999.5%로 실적개선에 따른 순이익 증가 및 일부 증권회사의 영업기반 확대를 위한 자본확충 등으로 2025년 3/4분기말(920.2%) 대비 79.3%포인트 상승하였다. 한편,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2026년 1/4분기말 82.1%로 2025년 3/4분기말(85.1%)보다 3.0%포인트 하락하였다(그림 I-3-22).

그림 Ⅰ-3-21. 보험회사 손실흡수력 지표



주: 1) 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 2022년말까지는 RBC비율, 2023년부터는 K-ICS비율(경과조치 적용 후) 기준
2)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고정이하여신(대출채권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그림 Ⅰ-3-22. 증권회사 손실흡수력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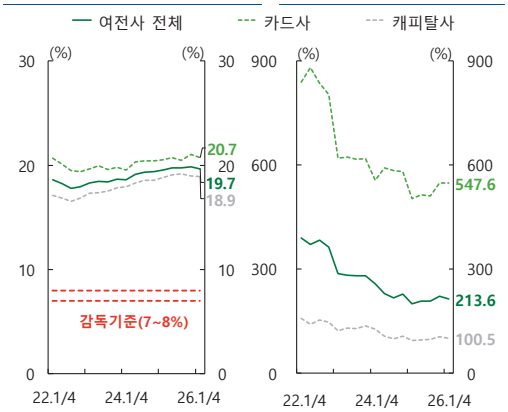


주: 1)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필요유지자기자본
2)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고정이하자산(자산건전성 분류 대상 자산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128] 증시 호조 및 투자금융 실적 호조에 힘입어 금융지주 계열 캐피탈사를 중심으로 배당금 수익이 증가하였다.
[129] 2023년부터 보험회사에 신회계제도(IFRS17 및 IFRS9) 시행과 함께 자본비율 산정 방식을 개편한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되었다. 과거 위험기준 자기자본(Risk-Based Capital) 제도와 달리 K-ICS 하에서는 자산·부채 시가평가를 통한 가용자본 산출, 요구자본 산정 시 신규 리스크 추가 및 신뢰수준 상향 조정 등이 변경되며 최대 10년간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은 2026년 1/4분기말 19.7%로 2025년 3/4분기말 수준을 지속[130]하며 감독기준(7~8%)을 크게 상회하였다.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부실채권 상각 등으로 고정이하여신이 감소함에 따라 2025년 3/4분기말 208.6%에서 2026년 1/4분기말 213.6%로 상승하였다(그림 I-3-23).

그림 Ⅰ-3-23. 여신전문금융회사 손실흡수력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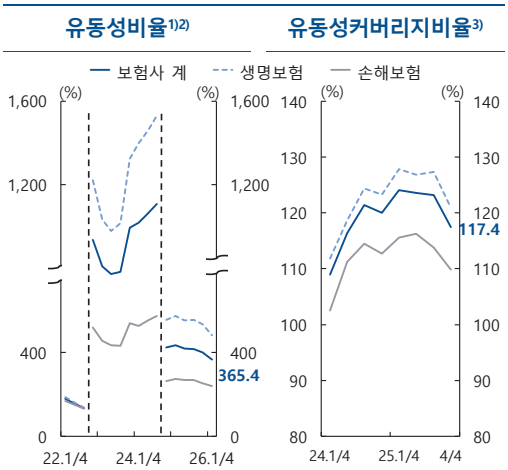


주: 1) 조정자기자본/조정총자산, 감독기준 7~8%(캐피탈사 7%, 신용카드사 8%)
2)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고정이하여신(총채권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유동성 대응능력 대체로 양호

보험회사의 유동성비율[131]은 2026년 1/4분기말 365.4%로 시장금리 상승[132]에 따라 국공채·특수채를 중심으로 유동성자산이 감소하면서 2025년 3/4분기말 대비 51.7%포인트 하락하였다.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유동성 대응능력을 평가하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133]도 2025년 4/4분기말 117.4%로 2025년 3/4분기말 대비 5.8%포인트 하락하였다(그림 I-3-24).

그림 Ⅰ-3-24. 보험회사 유동성 대응능력 지표



주: 1) 유동성자산/평균 3개월 지급보험금
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22년 12월, 24년 6월)에 따른 유동성자산 인정범위 등 변경으로 인한 시계열 단절
3) 스트레스 상황 시 가용유동성/조달필요금액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130 캐피탈사는 총자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조정자기자본비율이 소폭 하락(19.2% → 18.9%)한 반면, 카드사는 자본확충 등으로 조정자기자본비율이 소폭 상승(20.5% → 20.7%)하며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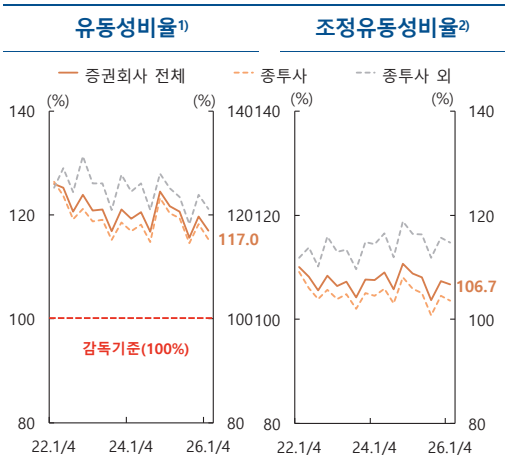
131 금융당국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24년 6월)」 개정을 통해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되던 만기 3개월 이상 채권(국고채, 통안증권, 예금보험공사채권)의 인정 비중을 2024년 12월부터 100%에서 30%로 축소함에 따라, 2024년 4/4분기부터 보험회사의 유동성비율이 상당폭 하락하였다.

132 2026년 3월말 기준 10년물 국고채 금리(최종호가수익률 기준)는 3.88%로, 2025년 12월말(3.39%) 대비 49bp 상승하였다.

133 감독당국은 기존 유동성비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산별 유동화(현금화) 가능 정도 및 지급보험금 이외 부채에 대해서 필요 유동성 정도를 반영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2023년부터 신규 도입하였다.

증권회사의 유동성비율[134]은 2026년 1/4분기말 117.0% 수준으로 2025년말 반등[135]하였다가 소폭 하락하였다. 한편, 우발부채인 채무보증까지 고려한 조정유동성비율은 2026년 1/4분기말 106.7%로 2025년 3/4분기말(103.7%) 대비 3.0%포인트 상승하였다(그림 I-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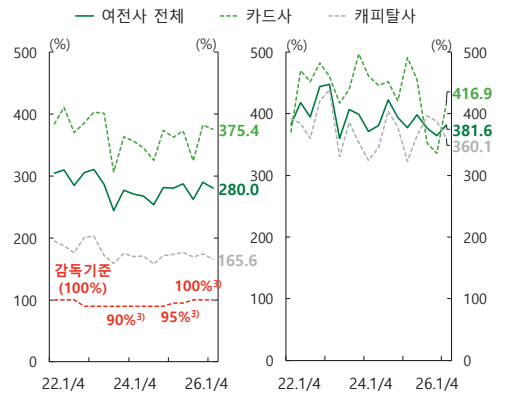
그림 Ⅰ-3-25. 증권회사 유동성 대응능력 지표



주: 1) 잔존만기 3개월이내 유동성자산/잔존만기 3개월이내 유동성부채
2) 잔존만기 3개월이내 유동성자산/(잔존만기 3개월이내 유동성부채+채무보증)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동성비율은 2026년 1/4분기말 기준 280.0%로 2025년 3/4분기말(262.6%)보다 상승하면서 감독기준(100%)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는 2025년 4/4분기중 장기차입금의 상당부분이 만기도래[136]하면서 유동성부채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하였다. 즉시가용유동성비율[137]도 381.6%로 신용카드사를 중심으로 1개월 이내 만기도래 부채 규모가 감소하면서 2025년 3/4분기말(376.1%)보다 소폭 상승하였다(그림 I-3-26).

그림 Ⅰ-3-26.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 대응능력 지표



주: 1) 90일 이내 만기도래 유동성자산/90일 이내 만기도래 유동성부채
2) 즉시가용유동성자산/1개월 이내 만기도래 부채
3) 2022년 12월~2024년 12월중 90%, 2025년 1~6월중 95%, 7월부터 100%를 적용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134 금융당국은 2022년 하반기 단기자금시장 경색 경험 및 최근 종투사 IMA·단기금융업(발행어음) 신규 인가 등으로 증권회사의 업무범위와 시스템적 중요성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정교화된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해 유동성규제체계를 개편하여 2027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증권사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추진」, 26년 5월 18일). 개편 내용으로는 현재 종투사 및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에게 부과되고 있는 유동성규제 준수의무를 전 증권회사로 확대하는 한편, 유동자산에 가격변동위험을 반영한 할인율 적용, 유동부채에 채무보증을 반영하는 등 보다 산정기준이 정교화된 신조정유동성비율 도입 등이 예정되어 있다.

135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ELB(Equity Linked Bond)의 만기가 주로 4/4분기에 집중됨에 따라 상환 예정인 ELB 잔액이 3/4분기 유동부채에 편입된다. 이에 따라 매년 3/4분기 유동성비율이 하락하다 이후 재반등하는 계절성이 나타난다.

136 과거 레고랜드 사태 당시 카드채 발행을 대신하여 조달했던 장기 기업어음 중 상당부분이 지난해 4/4분기에 만기도래(약 1.1조원)하면서 2025년 3/4분기말 유동성 비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바 있다(25.2/4분기말 287.1% → 3/4분기말 26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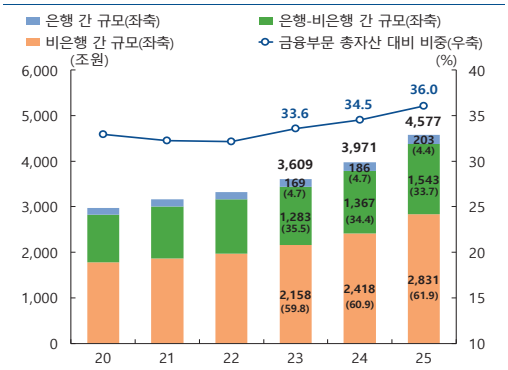
137 감독당국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동성 모니터링 지표를 확대·개편(20년 2월)하면서 2022년부터 즉시가용유동성비율을 도입하였다. 즉시가용유동성비율은 즉시가용유동성자산(현금 및 예치금, 즉시매도가능유가증권 및 미인출약정한도 합계)을 1개월 이내 만기도래 부채로 나누어 계산한다.

(3) 상호연계성

금융시스템 내 상호거래 증가세 확대

금융시스템 내 상호거래[138]는 2025년말 4,576.6조원으로 전년말대비 15.3%(+606.0조원) 증가하며,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139]을 기록하였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은행 간 거래 202.5조원(전체 상호거래 대비 비중 4.4%), 은행-비은행[140] 간 거래 1,542.6조원(33.7%), 비은행 간 거래 2,831.5조원(61.9%)으로, 전년말대비 각각 9.1%, 12.9%, 17.1% 증가하였다. 금융부문 총자산(1경 2,696조원, 자금순환통계 기준) 대비 상호거래 비중도 36.0%로 전년말(34.5%)보다 상승하였다(그림 Ⅰ-3-27).

그림 Ⅰ-3-27.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 현황[1)2)3)]



주: 1) 상호거래 규모는 자금순환통계 기말 기준
2) ( ) 내는 전체 상호거래 규모 대비 비중
3) 은행은 국내은행만, 비은행은 국내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 및 활동을 총칭
자료: 한국은행

은행-비은행 간 상호거래 증가

은행-비은행 간 상호거래는 은행예금 예치 및 은행의 RP 매수를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신탁(2024년말 104.1조원 → 2025년말 128.4조원), 증권(83.9조원 → 107.1조원), 투자펀드(41.3조원 → 56.2조원) 순으로 은행예금 증가폭이 컸다.[141] 또한, 은행의 투자펀드에 대한 RP 매수(31.8조원→57.5조원)가 확대되고, 투자펀드 지분 보유(69.4조원→81.4조원)도 증가하는 등 양 부문간 자금연계가 심화되었다(그림 Ⅰ-3-28).

비은행 간 상호거래는 투자펀드 중심으로 증가

비은행 간 상호거래는 투자펀드를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투자펀드는 보험·연금기금과 증권의 지분 투자를 통한 자금조달이 전년말에 비해 각각 20.3%(+72.8조원), 27.2%(+21.8조원) 확대되었으며, 증권(+4.7조원, +37.6%)·신탁(+3.9조원, +36.5%)·기타금융(+2.9조원, +158.5%) 대상 RP 매도를 통한 단기 자금조달도 늘렸다. 이러한 자금조달 확대를 바탕으로 투자펀드의 지분증권(+185.6조원, +45.6%), 채권(+88조원, +27.1%), CP (+29.6조원, +25.5%) 등에 대한 운용 잔액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다양한 비은행 업권을 통해 투자펀드로의 자금집중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142]

---

138 자금순환통계의 금융자산부채잔액표와 현금 및 예금 명세서, 차입금 명세서, 유가증권 보유 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48개 금융상품, 34개 금융업권 및 9개 기타 부문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2016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 <주요 현안 분석>「은행시스템 상호연계성 분석 및 횡단면 시스템 리스크 측정」을 참고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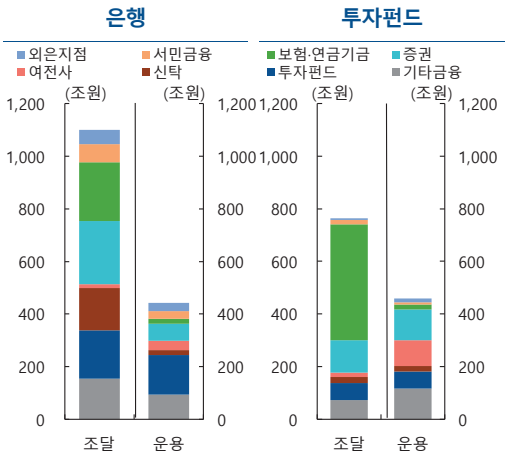
139 상호거래 증가율은 2020년 이후 둔화되어 2022년에 저점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반등세로 전환되었으며 2025년 4/4분기말에는 15.3%까지 상승하는 등 최근 들어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4/4분기 기준 전년대비 증가율: 18년 10.6% → 19년 14.4% → 20년 10.7% → 21년 6.5% → 22년 4.8% → 23년 8.8% → 24년 10.0% → 25년 15.3%)

140 상호연계성 분석에서 은행 부문은 국내은행을, 비은행 부문은 국내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 및 활동을 총칭하며, 외은지점, 서민금융(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연금기금, 증권, 여전사 신탁, 투자펀드, 기타금융(금융지주회사, 서민금융보조기관, 유동화전문회사, 대부업체, 자금중개회사, 선물회사, 투자자문회사, 자산운용회사 등)을 포함한다.

141 한편 가계의 은행예금 증가율(+3.2%)은 비은행의 은행예금 증가율을 크게 하회하였다. 이는 가계 자금이 수익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이동하면서, 은행의 자금조달에서 도매성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142 금융업권 간 전년말대비 거래 증감액 기준 상위 4개 업권쌍은 은행-투자펀드(+93조원), 투자펀드-보험·연금기금(+82조원), 투자펀드-증권(+63조원), 은행-증권(+51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Ⅰ-3-28. 은행·투자펀드의 비은행 부문에 대한 자금조달 및 운용[1)2)]



주: 1) 2025년 4/4분기말 자금순환통계 기준
2) 기타금융은 금융지주회사, 서민금융보조기관, 유동화전문회사, 대부업체 등을 포함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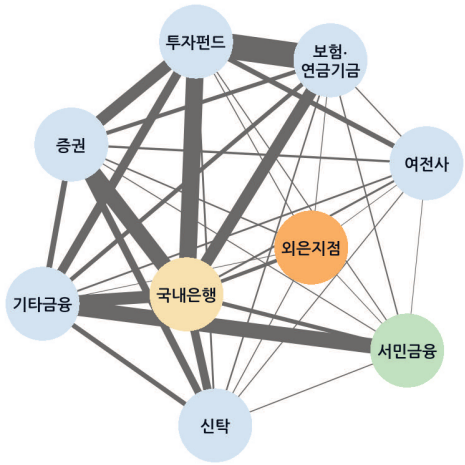
금융업권 간에는 은행-투자펀드 연계, 금융·실물 간에는 비은행의 가계 자금 조달 및 기업·비거주자 운용 구조 심화

금융업권 간 상호연계 구조에서는 은행 및 투자펀드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은행-투자펀드 간 상호거래가 전년말대비 38.8%(+93.2조원) 증가하며 양자 간 연계 강화가 두드러졌다(그림 I-3-29). 아울러 투자펀드와 보험·연금기금 간 거래가 21.9%(+82.3조원) 확대되었으며, 투자펀드-증권 및 은행-증권 간 거래는 각각 34.8%(+62.6조원), 19.8%(+50.6조원) 증가하는 등 투자펀드를 중심으로 한 업권 간 연계가 전반적으로 강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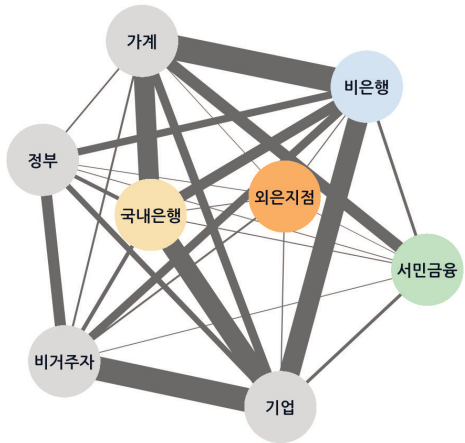
한편, 금융-실물 상호연계에서 은행 및 비은행 부문은 상이한 자금조달 및 운용 구조를 보였다(그림 I-3-29).

그림 Ⅰ-3-29. 금융시스템 상호연계 구조[1)2)3)]

(금융업권 간)



(실물부문과 금융시스템 간[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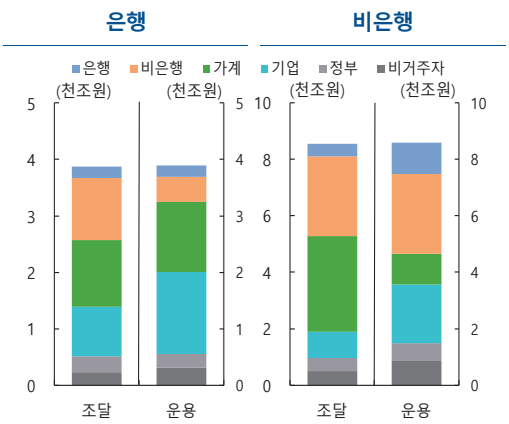


주: 1) 2025년 4/4분기말 자금순환통계 기준
2) 네트워크 시각화 분석기법을 활용하였으며, 업권 간 상호거래 규모에 비례하여 선이 굵게 나타남
3) 서민금융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기타금융은 금융지주회사, 서민금융보조기관, 유동화전문회사, 대부업체 등, 연금기금은 퇴직연금 등(국민연금 제외), 정부는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구(국민연금 등) 등을 포함
4) 비은행은 외은지점 및 서민금융을 제외한 비은행부문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은행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의 영향으로 가계 부문과의 거래에서 조달과 운용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기업 부문에 대한 순운용 규모가 580.4조원으로 전년말대비 7.0%(+38.1조원) 확대되었다. 한편, 비은행은 국내외 주식 투자 증가 등을 배경으로 가계 부문에서 조달한 자

금을 기업·비거주자(국외) 부문으로 운용하는 중개구조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가계로부터의 순조달 규모는 전년말대비 12.4%(+255.6조원) 확대된 가운데, 기업 및 비거주자에 대한 순운용도 각각 7.2%(+77.9조원), 7.4%(+25.3조원) 증가하였다(그림 Ⅰ-3-30).

그림 Ⅰ-3-30. 은행과 비은행 부문의 자금조달 및 운용[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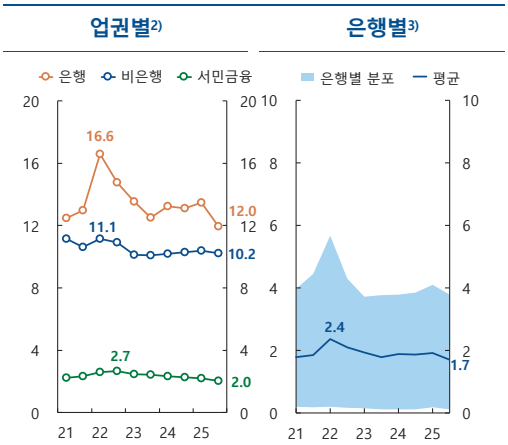


주: 1) 2025년 4/4분기말 자금순환통계 기준
자료: 한국은행

부실전염 리스크는 안정적인 수준

금융시스템 내 상호연계성이 심화되었으나, 금융총자산 대비 실물 익스포저 비중 하락, 업권별 손실흡수력 개선 등으로 DebtRank 지수로 측정한 부실전염 리스크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다.[143] DebtRank 지수는 특정 금융기관 또는 업권의 손실이 금융시스템 내 채권·채무 네트워크를 통해 전이·증폭되어 발생하는 금융시스템 내 총자본손실을 나타낸 값이다.[144] 은행 부문 부실전염 리스크를 나타내는 은행 DebtRank 지수는 2024년말 13.1에서 2025년말 12.0으로 하락하였으며, 같은 기간 비은행(외은지점, 서민금융 제외) DebtRank 지수는 10.3에서 10.2로 보합세를 보였다. 서민금융의 경우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면서 DebtRank 지수가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5년말 2.0을 기록하였다(그림 Ⅰ-3-31).

그림 Ⅰ-3-31. DebtRank 지수[1]



주: 1) 자금순환통계 기준
2) 은행은 7개 시중은행 DebtRank 지수, 비은행은 서민금융, 외은지점을 제외한 비은행 업권 DebtRank 지수, 서민금융은 서민금융 DebtRank 지수
3) 7개 시중은행 기준
자료: 한국은행

143 은행 DebtRank 하락 및 비은행 DebtRank 보합세는 최근 금융총자산 대비 실물 익스포저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충격의 절대적 크기(분자)가 축소되었고, 금융시스템 내 자본 총합(분모)이 증가하면서 동일 손실 충격에 대한 완충력이 높아진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호연계성 심화에도 불구하고 분자 축소와 분모 확대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DebtRank가 안정세를 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144 DebtRank 지수는 특정 금융기관 또는 업권의 실물(비금융) 부문에 대한 익스포저가 부실화될 경우, 금융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해 전이·증폭되어 나타나는 금융시스템 내 발생 손실의 총합을 전체 금융시스템 내 자본 총합으로 나눈 값이다. 특정 금융기관 A가 보유한 비금융 부문 자산이 부실화(채무상환능력 하락, 부도가능성 상승)되면, 1차적으로 A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들의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연쇄적으로 이들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들의 자산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자산 규모가 크고 레버리지비율이 높으며, 금융시스템에서 중심성(centrality)과 매개중심성(betweenness)이 높은 금융기관 또는 업권일수록 DebtRank 지수가 높게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특정 업권의 비금융 부문 익스포저 가치가 5% 하락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의 총합이 시스템 내 자본 총합의 1%에 달하는 경우 DebtRank를 1로 표준화하여 표시하였다(Bardoscia et al.(2015), "Debtrank: A microscopic foundation for shock propagation"; Bardoscia et al.(2016), "Distress Propagation in Complex Networks: The Case of Non-Linear DebtRank").

참고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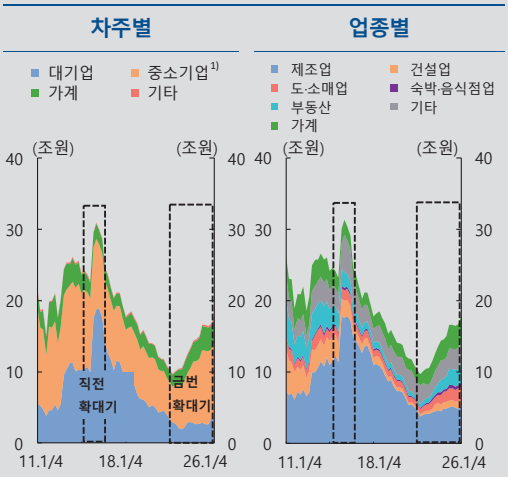
국내은행 부실여신의 증가 배경 및 정리 현황 [145]

국내은행 부실여신은 코로나19 금융지원조치 등으로 2022년 최저 수준으로 축소되었다가 최근 시장금리 상승, 업황부진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에 있다. 이에 국내은행은 자산건전성을 관리하는 한편, 신용중개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부실여신 정리에 힘쓰고 있다. 이하에서는 시장금리 및 환율 상승, 중동사태 등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내은행 부실여신의 증가 배경과 정리 현황을 살펴보았다.

최근 부실여신 증가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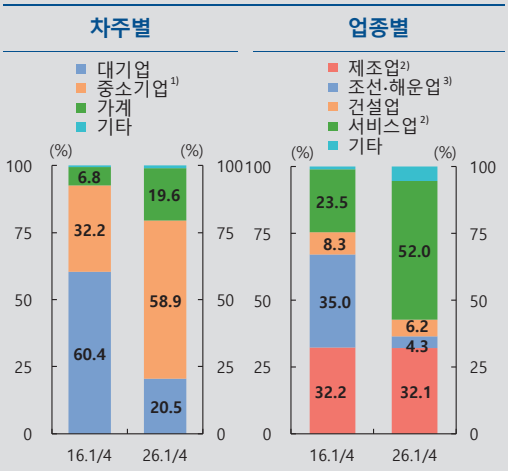
국내은행의 부실여신(이하 고정이하여신 기준) 규모는 2022년 9월말 저점(9.7조원)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6년 3월말 17.7조원에 이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부실 발생 및 정리가 일단락된 2011년 이후 최근까지 부실여신의 장기 추이를 보면, 2015~16년중(직전 확대기)에는 조선·해운 등 취약업종의 채무상환능력 악화[146] 및 구조조정 본격화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부실여신이 증가하였다. 반면 2022년부터 최근까지(금번 확대기)는 주로 중소기업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하고 있다. 도·소매업, 부동산업 등 서비스 부문의 회복 지연 등의 영향으로 부실여신이 다양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해당 기업 수도 크게 늘어난[147] 모습이다(참고 5-1, 5-2).

참고 5-1. 차주 및 업종별 국내은행 부실여신 추이



주: 1) 개인사업자 포함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참고 5-2. 부실 확대기 중 부실여신의 구성 비교



주: 1) 개인사업자 포함
2) 조선·해운업 제외
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및 수상운송업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145 본고는 박성경 · 이윤진(은행분석팀)이 작성, 정연수(금융기관분석부장) · 김경섭(은행분석팀장)이 검토하였다.
146 세계 교역 둔화와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조선 수주와 선박가격, 해운 물동량 및 운임이 하락하는 등 영업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호황기 중 선박·설비 투자 확대를 위해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한 상황에서 해양플랜트 등 고위험 사업에서 사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수익성과 이자 상환 여력이 약화되었다.
147 각 부실여신 확대기 중 부실여신 규모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6년 3월말 및 2026년 3월말을 비교해 보면 금번 확대기에는 직전 확대기에 비해 대기업 연체(1개월 연체 기준) 차주수는 감소(118개 → 68개)한 반면 중소기업은 크게 증가(22,339개 → 58,372개)하는 모습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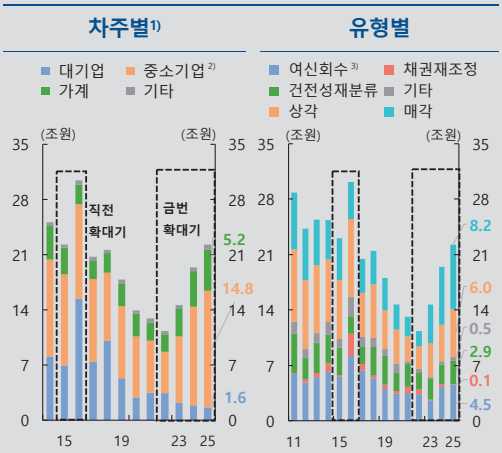
부실여신 정리 현황

부실여신 누적[148]은 은행의 충당금 적립 부담을 높여 수익성을 저하시키고[149] 신규 대출을 위축시킨다. 따라서 은행은 여신회수, 매·상각, 채권재조정 등을 통한 부실 정리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국내은행의 부실여신 정리 실적을 차주별로 보면, 부실여신 증가 추이와 마찬가지로 직전 확대기에는 부실이 많았던 대기업 여신의 정리 규모가 컸던 반면 금번 확대기에는 중소기업 여신의 정리 규모가 늘어났다. 2025년중 중소기업 여신 정리 규모가 14.8조원으로 전체 정리 규모(22.3조원)의 66.4%에 해당하였으며, 대기업 및 가계 여신의 정리 규모는 1.6조원 및 5.2조원으로 각각 7.2% 및 23.3%를 차지하였다.

정리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직전 확대기에는 채권단 주도의 기업정상화 과정에서 채권재조정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상각과 여신회수를 통한 자체 정리 규모도 큰 모습이었다. 이에 비해, 금번 확대기에는 2023년 이후 매각 규모가 상각 규모를 넘어서는 등 매각 방식을 통한 부실여신 정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25년중 매각을 통한 정리 규모는 8.2조원으로 전체 정리 규모의 36.7%에 해당하였으며, 여신회수 및 상각은 4.5조원 및 6.0조원으로 각각 20.4% 및 27.1%를 차지하였다(참고 5-3).

참고 5-3. 국내은행의 부실여신 정리 현황



주: 1) 데이터 수집 가능 시점인 2014년 이후로 분석
2) 개인사업자 포함
3) 자진변제, 담보물 처분 및 제3자(보증인 포함) 대위변제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부실여신 매각 방식의 확대 배경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매각 규모는 2022년중 1.9조원으로 저점을 기록한 이후 큰 폭으로 늘어나 2025년중 8.2조원 규모로 확대되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① 빠른 속도로 확대된 부실여신의 신속한 정리

최근 부실여신 규모가 빠른 속도로 확대된 데다 서비스업 등 여러 업종에 분포되어 있어 가시적인 경기회복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건전성 개선

148 ESRB(2017)는 부실여신(NPL)이 신규 대출을 위축시키고 은행 자산가치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를 통해 자금조달 비용 상승을 초래한다고 분석하였으며, EBRD(2016)는 높은 NPL이 은행의 충당금 부담을 높여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은행이 부실차주에 대한 여신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신용배분을 왜곡한다고 평가하였다.

149 IMF(2017) 분석방식에 따라 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전분기)과 총자산수익률(ROA) 및 대출증가율(전분기말 대비)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의 부실여신이 누적될수록 수익성 및 성장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고정이하여신비율에 따른 은행의 ROA 및 대출증가율 추정 결과[1)2)3)]

	ROA	대출증가율
고정이하여신비율	-0.091**	-0.868***

주: 1) 2015년 3/4분기~2025년 4/4분기중 20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을 실시
2) 통제변수로 자본비율, 총자산, 영업비용/영업수익, 비이자수익비율, 예대율, GDP성장률, 콜금리를 사용. 대출증가율은 ROA를 추가
3)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이 더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은행권은 절차 진행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자체 여신회수 및 채권재조정보다는 매각 방식이 정리 속도 및 부실여신 관리 부담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일괄매각을 통한 부실여신의 효율적 정리

부실여신이 이질적인 소액·다건의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확대됨에 따라 차주와의 개별 협상을 통한 정리보다는 부실채권의 일괄 매각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대출은 담보설정 비중이 높아 담보가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비담보부 부실채권 정리에 주로 활용되는 상각[150]보다 NPL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을 더 선호한 것으로 판단된다(참고 5-4).

참고 5-4. 국내은행 기업대출의 담보현황[1)]

(%)

	담 보	보 증	신 용[2)]
대 기 업	36.2	3.2	60.6
중소기업	67.0	13.6	19.4

주: 1) 2026년 3월말 기준
2) 법인지급보증, 연대보증, 순수신용 등에 의한 신용대출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③ NPL 전문 투자사의 참여 확대

부실여신 매각 시장(NPL 매각 시장)은 2015년 이후 매물이 축소됨에 따라 캐피탈사 및 자산운용사들의 입찰 참여가 부진한 가운데, 2020년 이후 NPL 전문 투자사들이 신규 진입하면서 소수 기관 중심의 시장으로 변모[151]하였다. 부실여신 투자는 여신의 매입부터 담보물 매각 등을 통한 회수에 이르기까지 투자수익을 획득하는 데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채권 발행 등을 통한 대규모 자금 조달[152]이 가능하며 장기간의 투자·회수 사이클을 감내할 여력을 갖춘 전문 투자사가 주된 매수 주체로 참여하면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은행권 매각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

최근 부실채권 매각의 주요 특징

① 개인사업자 등 개인차주 비중 확대

국내은행이 매각[153]한 부실채권(이하 미상각원금잔액 기준)의 차주별 구성을 보면, 과거 매각 규모가 컸던 2015년중에는 개인차주(개인사업자 포함)가 22.8%, 법인차주(중소법인 포함)는 77.2%로 취약업종 대기업 중심의 구조조정 여파로 법인 부실채권의 매각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에 비해 2025년중에는 개인 및 법인 차주 비중이 각각 41.5% 및 58.5%를 기록하여 내수부진과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개인차주의 부실채권 매각 비중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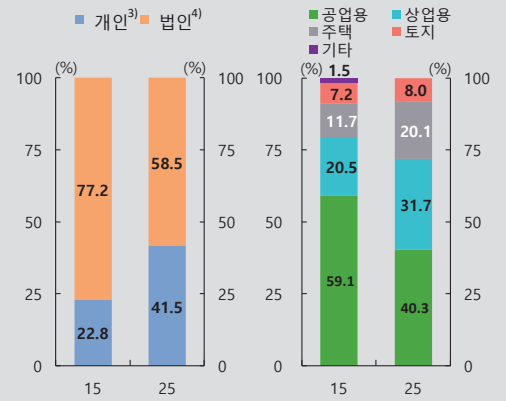
② 상업용 및 주거용 자산 비중 확대

은행권에서 매각된 부실채권의 담보별 구성도 변화하였다. 2015년 매각채권 중 공업용 자산 담보 비중이 59.1%에 달하였으나 2025년에는 40.3%로 축소된 반면, 상업용 및 주거용 자산 비중은

150 회수될 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장부에서 손실로 처리하는 회계처리 방법으로 국내은행은 「금융기관 채권 대손인정 업무세칙」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된 채권을 상각처리 한다.
151 현재 연합자산관리(UAMCO), 대신F&I, 하나F&I, 키움F&I, 우리금융F&I의 5개사가 영업중이다.
152 2025년중 5개 NPL 전문 투자사의 공모채 발행액은 3.2조원으로 전년도 발행액(2.8조원)보다 13.2% 확대되었다. 또한 대신F&I는 2025년 5월 2,500억원, 하나F&I는 2023년 12월 1,500억원, 우리금융F&I는 2024년 5월 1,200억원, 키움F&I는 2021~2025년중 매년 50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153 부실여신을 기초자산으로 ABS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공시하는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신청서' 기준으로, 해당 신청서에 첨부된 유동화자산 명세서를 분석하였다. 부실여신 투자자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발행하는 ABS 등에 투자하고, 동 증권의 원리금 또는 처분손익 등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한다.

2015년 20.5% 및 11.7%에서 2025년에는 31.7% 및 20.1%로 확대되었다(참고 5-5).

참고 5-5. 은행권 매각 부실채권 구성[1]



주: 1) 해당연도 중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신청 기준
2) 부동산 담보 기준
3) 개인사업자 포함
4) 중소법인 포함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③ 부실이력이 짧은 담보부 여신 위주로 매각

매각 부실채권 중 담보부 여신이 2025년중 91.4%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담보부 채권 중심으로 NPL 시장이 형성되었다. 또한 최초 취급일이 3년 이내인 부실채권이 매각 채권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부실이력이 짧고 담보물을 통한 회수가치가 높은 부실채권이 NPL 시장에서 보다 선호되며 원활히 정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평가 및 시사점

국내은행의 적극적인 부실여신 관리는 자산건전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154]한 것으로 평가된다. 부실여신 정리 방법의 하나인 매각 방식은 은행이 부담하는 신용위험을 NPL 전문 투자회사로 적절히 이전함으로써 생산적 부문으로의 신용 공급 활성화 등 은행의 신용중개 여력 확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향후 시장금리가 오르는 과정에서 은행권 부실여신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부실여신의 담보가치 하락, 회수 지연 등으로 인해 NPL 전문 투자회사의 수익성[155] 및 재무건전성[156]이 저하될 경우 부실여신에 대한 매입 수요가 축소되면서 은행의 부실자산 정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최근 국내은행이 매각하고자 하는 부실채권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매입 수요는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부실채권 매입가율[157]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여 은행권은 부실여신 추이 및 NPL 매각 시장의 수급 상황에 유의하면서 부실여신 정리 방식을 다양화하는 가운데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154 2025년중 부실여신 매·상각이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한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5년말 1.06%로 실제 국내은행 고정이하여신비율(0.57%)을 약 0.5%포인트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155 부동산의 법원경매 매각률(매각건수/경매건수)은 2021년말 36.0%에서 2025년말 22.7%로 하락하였으며, 낙찰가율(매각가/감정가)은 같은 기간 중 78.8%에서 63.7%로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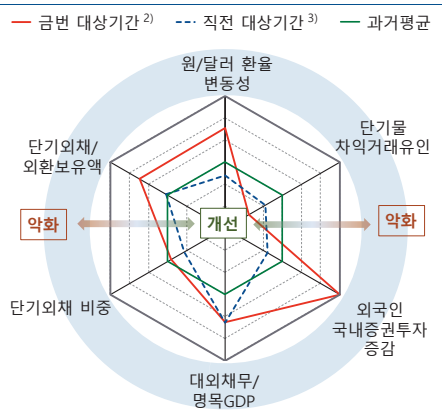
156 NPL 전문 투자사(5개사)의 평균 레버리지 배율은 2022년말 2.6배에서 2025년말 4.4배까지 확대되었다. 국내 신용평가회사는 신용등급 평가 시 적정 레버리지 배율을 통상 5배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157 부실채권의 대출원금 대비 매입가격(은행의 매각가격)으로 NPL 투자자의 매입 수요가 높을 경우 높게 책정되고 수요가 낮을 경우 하락한다. 부실채권 매입가율(추정치)은 2023년 87.3% → 2024년 79.3% → 2025년 70.7%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부실채권 매입 수요가 제약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또한 은행지주회사 산하 일부 투자회사의 경우 지주사 차원의 리스크관리 강화 조치로 부실채권 매입 규모를 축소하기도 하였다.

4. 대외부문

-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등 영향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크게 상승하였다. **외화자금시장**에서는 차익거래유인이 최근 5년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축소된 가운데 장단기 외화차입 가산금리 등 외화조달여건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었다.
- **자본유출입** 측면에서는 금년중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외국인 국내증권투자가 순유출을 지속한 가운데, 거주자 해외증권투자는 순투자 규모가 전년동기대비 축소되었다.
- **대외지급능력** 측면에서는 대외건전성지표들이 소폭 저하되고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및 여타 시장안정화 조치 등 영향으로 외환보유액이 감소하였으나, 대외충격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대외부문 평가) 금년 상반기중 중동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 외환시장 변동성이 높아지고 외국인 국내증권투자가 주식자금을 중심으로 순유출을 지속하였으나, 외화자금시장에서의 외화조달여건이 양호하고 대외지급능력도 강건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중동 상황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뿐 아니라 내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 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림 Ⅰ-4-1. 대외부문 상황 변화 지도[1)]



주: 1) 각 지표별 최근 5년 평균을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금번 대상기간과 직전 대상기간 지표의 상대적 수준을 지도에 도시
2) 2026년 1/4분기말(외환보유액은 5월말 기준)
3) 2025년 3/4분기말
자료: 한국은행

(1) 외환 및 외화자금 시장

원/달러 환율은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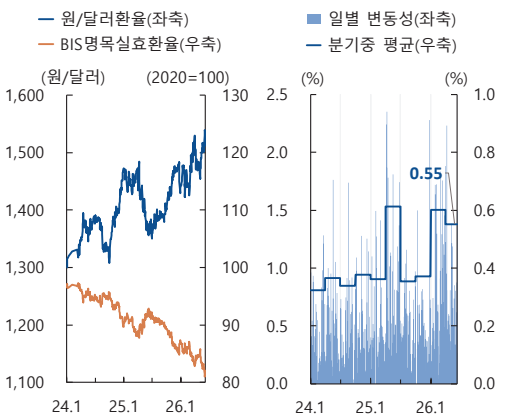
원/달러 환율은 1~2월 중에는 미 달러화 및 엔화 움직임에 연동되어 큰 폭으로 등락하였다. 3월 이후에는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에 따른 미 달러화 강세, 유가 급등 및 외국인의 국내주식 순매도[158] 등의 영향으로 큰 폭 상승하여 1,530.1원(3월 31일)까지 상승하였다가 미국-이란간 종전 협상 기대 등으로 1,450원대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5월 이후 종전 기대감이 다소 축소되는 가운데 국내주가 급등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주식 순매도 등의 영향으로 1,539.1원(6월 5일)까지 상승하였으나, 외환당국의 시장안정 메시지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을 축소하였다.

158 외국인의 주식투자자금 유출입(억달러): 25년 12월 +11.9 → 26년 1월 -0.5 → 2월 -135.0 → 3월 -297.8 → 4월 -26.8

원화의 명목실효환율지수는 3월 이후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 등으로 원화가 주요 교역상대국 대비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하였다. 4월에는 이러한 약세폭이 줄어들면서 다소 상승하였으나 5월 이후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다.

한편 금년중 원/달러 환율 변동성(전일대비 변동률)은 0.58%(1월 2일~6월 9일 기준)로 전년(0.42%)에 비해 확대되었다. 특히 3월 이후에는 중동지역 지정학적 우려 증대 등으로 1~2월(0.51%)에 비해 다소 확대(3월 3일~4월 30일 기준 0.68%)되었다가 5월 이후 소폭(5월 4일~6월 9일 기준 0.51%) 줄어들었다(그림 I-4-2).

그림 Ⅰ-4-2. 원화 환율 및 환율 변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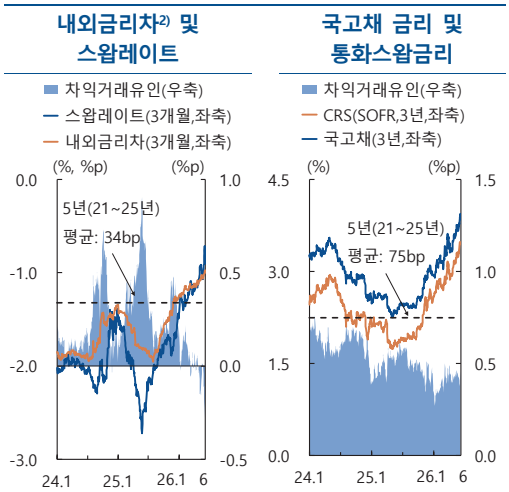
주: 1) 서울 15:30분 기준
2) BIS 원화 명목실효환율지수 기준
3) 전일대비 변동률의 절댓값
4) 26년 2/4분기는 4월 1일~6월 9일 기준
자료: 한국은행, BIS

외화자금시장은 차익거래유인이 축소

금년중 외환스왑시장의 차익거래유인(3개월물, SOFR 기준)은 기관투자자의 해외투자목적 외화자금수요에도 불구하고 비거주자 NDF(차액결제선물환) 순매입[159]이 지속[160]된 데다 4월 이후 WGBI 편입에 따른 채권자금 유입 등으로 외화자금공급이 확대되며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차익거래유인은 최근 5년 평균(21~25년중 34bp)보다 상당폭 낮은 수준[161]을 지속하였다.

통화스왑시장에서 차익거래유인(3년물, SOFR 기준)은 양호한 외화자금사정으로 최근 5년 평균(21~25년중 75bp)보다 상당폭 낮은 수준[162]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였다(그림 I-4-3).

그림 Ⅰ-4-3. 외환스왑 및 통화스왑 시장 차익거래유인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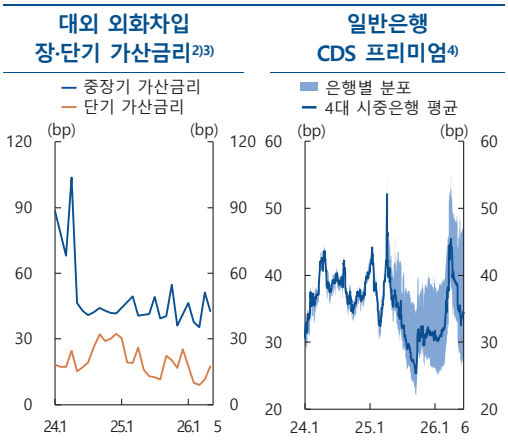
주: 1) 외환스왑 차익거래유인은 '내외금리차-스왑레이트'를, 통화스왑 차익거래유인은 '국고채 금리-통화스왑금리'를 의미
2) 통안증권(3개월)-Term SOFR(3개월)
자료: 한국자금중개, 금융투자협회, Tullett Prebon

159 비거주자에게 NDF를 순매도한 거래상대방 은행은 선물환 매도초과 포지션이 발생하게 되고, 동 포지션 해소를 위해 현물환시장에서 미 달러화를 매입하는 한편, 외화자금시장에서 미 달러화를 공급(Sell&Buy)한다.
160 비거주자의 NDF 순매입(억달러): 26년 1월 +19 → 2월 +77 → 3월 +175
161 2026년중(1월 2일~6월 9일, 일평균) 차익거래유인(3개월물, SOFR 기준)은 2bp 수준이다.
162 2026년중(1월 2일~6월 9일, 일평균) 차익거래유인(3년물, SOFR 기준)은 40bp 수준이다.

대외 외화조달여건 등 외화자금시장은 대체로 양호

일반은행의 대외 외화조달여건은 금년 3월초 발발한 중동전쟁의 영향을 받는 모습이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단기 외화차입 가산금리는 3월 이후 소폭 상승하였고, 장기 외화차입 가산금리는 다소 상승하였으나 5월 들어 하락하였다. 한편, 일반은행의 CDS 프리미엄은 3월중 급등하였다가, 4월 이후 하락하는 모습이다(그림 I-4-4).

그림 Ⅰ-4-4. 일반은행[1] 대외 외화조달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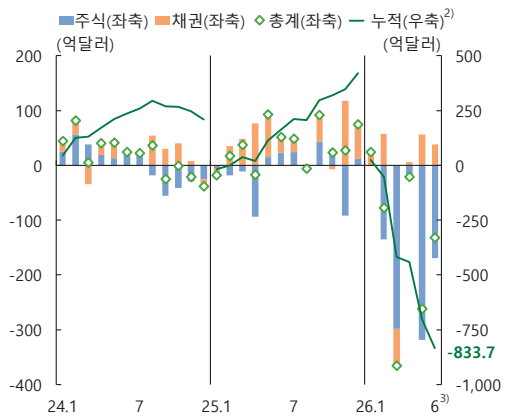
주: 1) 4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및 하나 은행) 기준
2) SOFR 기준 가산금리(4대 시중은행의 미 달러화 차입금액 가중평균)
3) 국내 금융기관 간 차입 및 본지점 차입, O/N은 집계대상에서 제외
4) 5년물 기준
자료: 한국은행, Markit

(2) 자본유출입

외국인 국내증권투자는 순유출

2026년 1~6월중(6월 9일 결제일 기준)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자금[163]은 833.7억달러 순유출(주식 948.1억달러 순유출, 채권 114.4억달러 순유입)되었다(그림 I-4-5). 주식자금은 2026년 1월 이후 5개월 연속 순유출되고 있으며, 채권자금은 2025년 11월 이후 4개월 연속 순유입되다가 2026년 3월 순유출로 전환된 이후 4~6월중에는 순유입을 나타내었다.

그림 Ⅰ-4-5. 외국인 국내증권투자 증감[1]



주: 1) 양(+)의 값은 순유입, 음(-)의 값은 순유출을 의미
2) 연도별 1월 이후 누적 순유입액
3) 6월 1~9일 기준
자료: 한국은행

외국인 주식자금은 2026년 1~6월중 948.1억달러 순유출되면서 전년동기(2025년 1~6월중 106.2억달러 순유출) 대비 유출폭이 크게 확대되었다(그림 I-4-6). 1월중 소폭의 순유출(-0.5억달러)을 기록했던 외국인 주식자금은 2월중 국내 주가 상승으로 차익실현 유인이 확대되고 글로벌 AI 기업의 자본지출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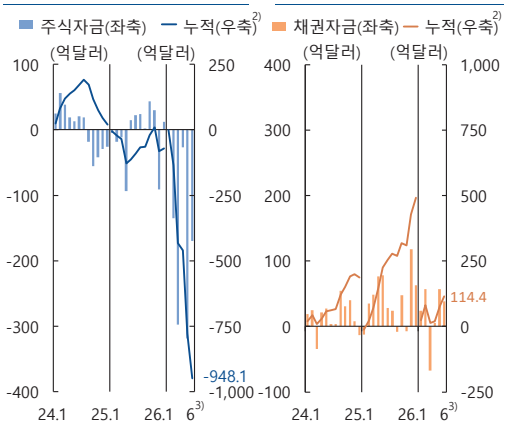
163 주식은 상장주식(KOSPI · KOSDAQ)의 장내 · 외 거래 및 기업공개(IPO)를 포함(단, ETF · ELW · ETN 등 제외)하며, 채권은 상장채권의 장내 · 외 거래 기준(RP거래 및 만기도래분 반영)이다.

서 순유출 규모(-135.0억달러)가 크게 늘어났다. 또한 3월중에는 차익실현과 함께 중동전쟁 발발로 위험회피심리가 확산되면서 순유출폭(-297.8억달러)이 더욱 확대되었다. 4월중에는 미국·이란 간 휴전 협상 등으로 투자심리가 일부 개선되면서 순유출 규모가 축소되었으나, 5월 이후 국내주가 상승에 따른 지분비율 조정(이하 '리밸런싱') 및 차익실현 매도세가 커지면서 순유출 규모(-318.3억달러)가 다시 확대되었다.

외국인 채권자금은 2026년 1~6월중 114.4억달러 순유입되면서 전년동기(2025년 1~6월중 250.4억달러) 대비 유입폭이 축소되었다(그림 I-4-6). 1~2월중에는 차익거래유인 축소, 시장금리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한 저가매수세 등에 힘입어 유입 흐름을 이어갔다. 그러나 3월중에는 대규모 채권 만기도래 이후 낮은 차익거래유인 등으로 재투자가 지연되고, 중동지역 지정학적 긴장이 확대되면서 순유출(-67.7억달러)로 전환되었다. 4월 이후에는 FTSE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효과에 힘입어 국고채[164]를 중심으로 순유입 전환되었다.

2026년 6월(6월 9일 기준) 현재 외국인 주식투자 잔액[165]은 2,552.9조원으로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166]의 3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말(32.9%) 대비 5.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주식자금 유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국내주식 보유비중이 확대된 것은 외국인 보유비중이 높은 반도체 업종의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외국인 채권투자 잔액은 355.5조원으로 전체 상장채권 잔액의 12.4%[167]를 차지하였으며 전년말(12.2%)보다 0.2%포인트 상승하였다.

그림 Ⅰ-4-6. 외국인 국내 주식 및 채권 투자자금의 증감[1]



주: 1) 양(+)의 값은 순유입, 음(-)의 값은 순유출을 의미
2) 연도별 누적 순유입액
3) 6월 1~9일 기준
자료: 한국은행

향후 외국인 증권투자는 유출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자금은 중동지역 지정학적 긴장이 점차 완화되는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접근성도 개선[168]되면서 유출폭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채권자금은 낮은 차익거래유인 등으로 인해 단기채 투자 부진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으나, WGBI 편입에 따른 중장기 국고채 수요[169]가 이를 상당부분 상쇄하면서 전반적으로 유입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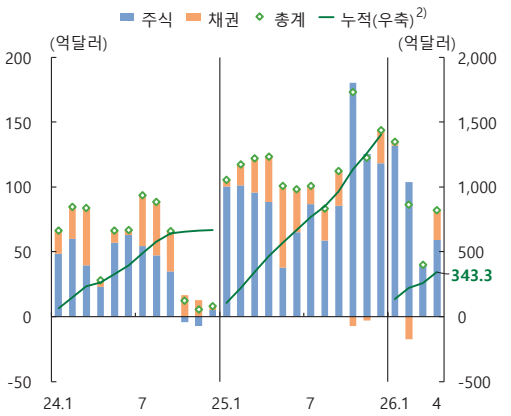
164 2026년 4~5월중 외국인은 국고채를 135.8억달러 순투자하였다.
165 외국인 주식투자 잔액 중 ETF 등을 포함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주식 보유 잔액 기준이다.
166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합계 기준이다.
167 외국인 국고채 투자 잔액은 5월말 기준 323.1조원으로 전체 국고채 잔액의 26.3%를 차지하였다.
168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권사에 본인 명의의 계좌 없이도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외국인 주식통합계좌(Omnibus Account)의 활용이 금년중 본격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169 WGBI 지수 내 국고채 편입 비중은 2026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재확산 여부, 글로벌 AI 산업 및 국내 반도체 산업의 실적 기대 변화, 그리고 대내외 실물경기의 전개 양상 등에 따라 자금유출입 변동성은 당분간 높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거주자 해외증권투자는 순투자 둔화

거주자 해외증권 순투자 규모는 2026년 1~4월중 343.3억달러(주식 334.3억달러, 채권 9.0억달러)로 전년동기(468.3억달러; 주식 385.7억달러, 채권 82.6억달러) 대비 둔화되었다(그림 I-4-7). 이는 주로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위험회피심리가 나타나면서 비금융기업등(개인투자자 등) 및 기타금융기관(자산운용사 등)의 주식 순투자가 축소되고, 미 연준의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도 약화되면서 비금융기업등, 일반정부(국민연금 등) 및 예금취급기관의 채권투자가 순회수된 데 기인한다.

그림 Ⅰ-4-7. 거주자 해외증권투자 증감[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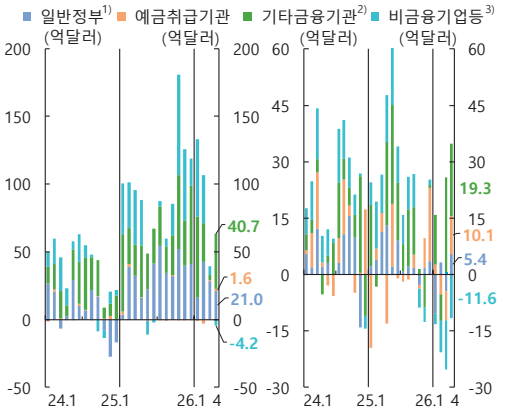


주: 1) 양(+)의 값은 순투자, 음(–)의 값은 순회수를 의미
2) 연도별 1월 이후 누적 순유입액
자료: 한국은행

주식의 경우 1~2월중에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순투자 흐름을 보였으나, 3월중 중동전쟁에 따른 위험회피심리 강화 등으로 일반정부의 순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비금융기업등, 기타금융기관이 순투자를 축소하였고 예금취급기관은 순회수하였다(그림 I-4-8).

채권의 경우 3월 이후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되면서 미 연준의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어 비금융기업등, 일반정부 및 예금취급기관이 순회수하였다(그림 I-4-8).

그림 Ⅰ-4-8. 거주자 해외 주식 및 채권 투자자금의 투자주체별 증감



주: 1)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 등
2) 보험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3) 개인투자자 포함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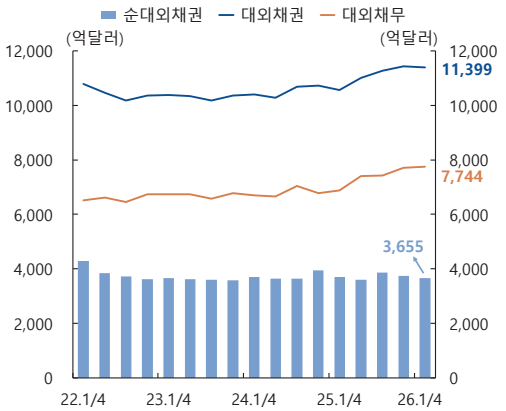
향후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는 중동사태 전개 양상에 따른 투자심리 변화, 주요국 물가·성장 흐름 및 통화정책 방향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3) 대외지급능력

순대외채권 소폭 감소

우리나라의 순대외채권(대외채권 - 대외채무)은 2026년 1/4분기말 3,655억달러로 전년 3/4분기말(3,861억달러) 대비 206억달러 감소하였다[170](그림 Ⅰ-4-9).

그림 Ⅰ-4-9. 순대외채권[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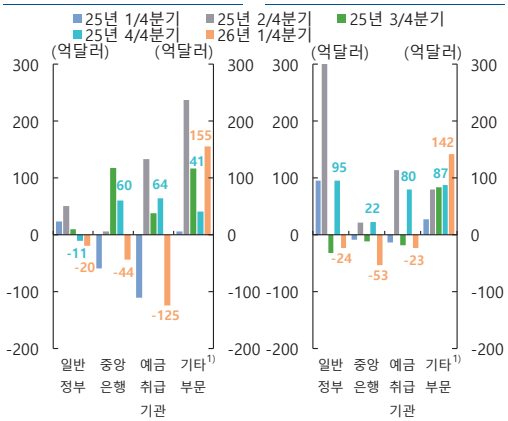


주: 1) 분기말 잔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대외채권은 2026년 1/4분기말 1조 1,399억달러로 전년 3/4분기말(1조 1,278억달러) 대비 121억달러 증가하였다. 일반정부는 외평기금 외화예치금 감소 등으로 31억달러 감소하였고, 중앙은행은 외환보유액이 16억달러 증가하였다. 또한 예금취급기관은 외은지점의 외화예치금 감소 등으로 61억달러 줄었으며, 기타부문은 민간기업의 무역신용 증가 등으로 196억달러 증가하였다(그림 Ⅰ-4-10).

대외채무는 2026년 1/4분기말 7,744억달러로 전년 3/4분기말(7,418억달러) 대비 326억달러 증가하였다. 일반정부는 외국인의 국공채 투자 증가 등으로 71억달러 증가하였으며 예금취급기관도 외은지점의 콜머니 증가 등으로 57억달러 증가하였다. 중앙은행은 외국인의 통안증권 투자 감소 등으로 31억달러 감소하였고 기타부문은 기관투자자의 비거주자원화예수금 증가 등으로 229억달러 증가하였다(그림 Ⅰ-4-10).

그림 Ⅰ-4-10. 부문별 대외 채권 및 채무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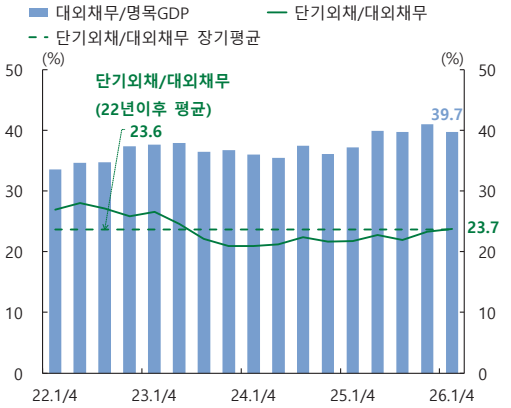
주: 1)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등의 기타금융기관과 비금융기업 등으로 구성
자료: 한국은행

대외채무 비율 및 단기외채 비중 상승

명목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은 2026년 1/4분기말 39.7%로 전년 3/4분기말(39.7%)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대외채무 중 단기외채 비중(2026년 1/4분기말 23.7%)은 단기외채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 3/4분기말(21.9%) 대비 상승하였으며, 2022년 이후의 평균(23.6%)을 소폭 상회하였다(그림 Ⅰ-4-11).

170 한편, 지분성 증권 등 미확정 부채 및 자산을 포괄하는 순대외금융자산의 경우 2026년 1/4분기말 7,536억달러로 전년 3/4분기말(1조 372억달러) 대비 2,836억달러 감소하였다. 이는 금년 국내주가 급등으로 외국인의 국내주식 보유 평가액이 크게 늘어난 평가효과(valuation effect)에 기인한다.

그림 Ⅰ-4-11. 단기 대외채무 비중[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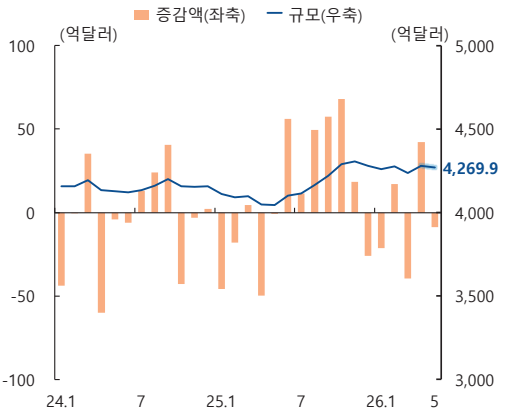
주: 1) 분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외환보유액 감소

2026년 5월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작년 12월말(4,280.5억달러) 대비 10.6억달러 감소한 4,269.9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등 시장안정화 조치 등에 주로 기인한다(그림 I-4-12).

2026년 5월말 기준 외환보유액의 구성을 보면 유가증권(89.2%) 및 예치금(5.0%)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유가증권은 국채, 정부기관채, 자산유동화채 등 유동성이 높은 안전자산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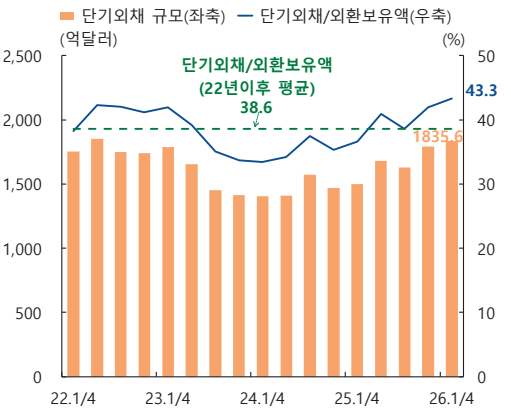
그림 Ⅰ-4-12. 외환보유액 규모 및 증감액[1)]



주: 1) 규모는 월말, 증감액은 월중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편 2026년 1/4분기말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전년 3/4분기말(38.6%) 대비 4.7%포인트 상승한 43.3%를 기록하였다(그림 I-4-13).

그림 Ⅰ-4-13.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1)]



주: 1) 분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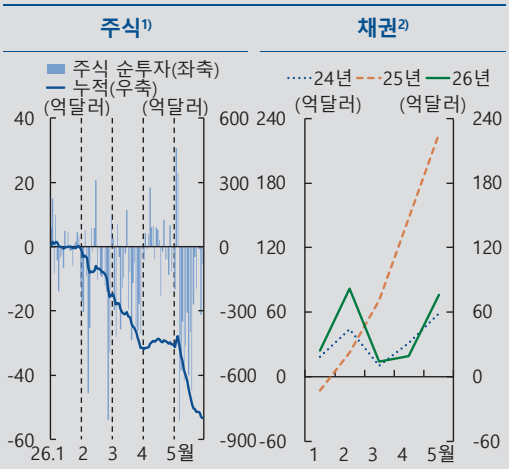
참고 6.

최근 외국인 국내 증권자금 흐름 점검 [171]

최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주식자금이 지난 3월 큰 폭 순유출된 이후 4월에 유출 규모가 축소되었다가, 5월중에는 역대 최대 순유출을 기록하는 등 유출폭이 다시 확대되었다(참고 6-1).

채권자금은 지난 3월 큰 폭으로 순유출된 이후 WGBI 편입이 시작된 4월부터 순유입 전환되었으나 금년중 유입 속도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완만하다.

참고 6-1.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자금[1]



주: 1) 거래일 기준
2) 결제일, 누적 순투자 기준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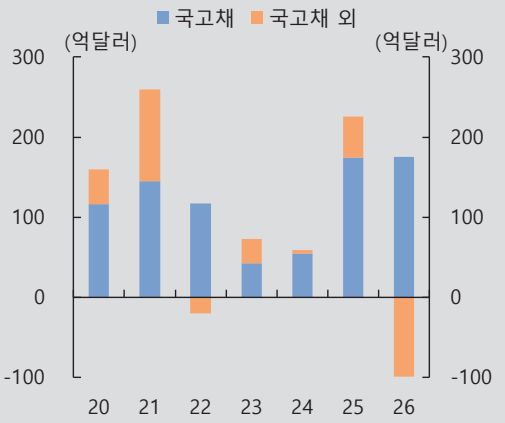
금년중 WGBI 편입 등에 따른 외국인 채권자금 유출입 특징을 살펴보는 한편, 주식자금의 추가 유출 가능성을 점검함으로써 향후 외국인 증권자금의 흐름을 가늠해 보았다.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동향

외국인의 국고채 투자는 견조한 모습

금년중 외국인의 국고채 투자는 지난해에 이어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등 WGBI 편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인은 WGBI 편입종목인 국고채[172]를 올해 1~5월중 176억달러 순투자한 반면 통안증권 등 국고채 외 채권을 99억달러 순회수하였다(참고 6-2).

참고 6-2. 종목별 외국인 국내 채권투자[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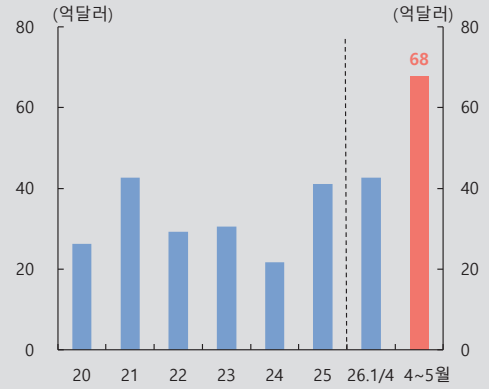


주: 1) 각 연도별 1~5월중 기준
2) 양(+)의 값은 순투자, 음(-)의 값은 순회수를 의미
자료: 한국은행 시산

특히 WGBI 편입 기준인 잔존만기 1~30년물 국고채로 한정하면 금년 4~5월중 월평균 68억달러 순투자되었는데, 이는 지난해 월평균 수치(41억달러)와 비교해도 크게 늘어난 모습이다(참고 6-3).

171 본고는 임준혁 · 한창현(자본이동분석팀)이 작성, 주성완(외환분석부장) · 최재혁(자본이동분석팀장)이 검토하였다.
172 통안증권 및 재정증권은 WGBI 편입대상 종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일정 요건(잔존만기 1~30년, 종목별 발행잔액 1조원 이상)을 충족하는 국고채(KTB)만 WGBI 편입대상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다(FTSE Russell).

참고 6-3. 월평균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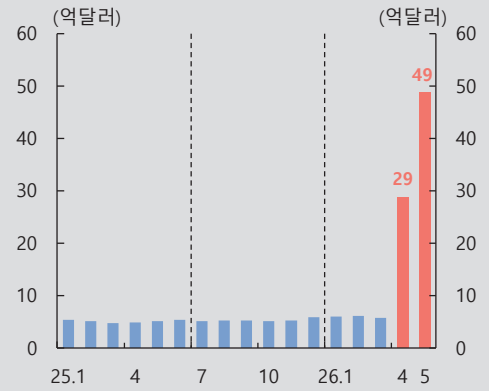


주: 1) 잔존만기 1~30년 기준
자료: 한국은행 시산

일본계 자금이 4월 이후 본격적으로 유입

특히 일본계 투자자의 국내채권 투자가 지난 4월 이후 크게 확대되었다(참고 6-4). 이전까지 일본계 국내채권 보유잔액은 미미하였고 거래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4월 이후 유입된 일본계 자금은 거의 대부분 WGBI 추종자금으로 추정된다. 4월 이후 유입된 일본계 채권자금은 주로 연기금 위주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참고 6-4. 일본계 투자자 국고채 보유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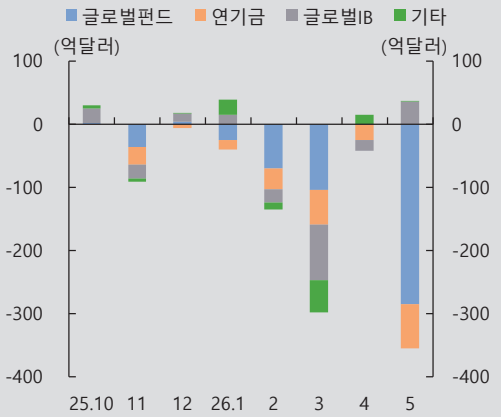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시산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동향

금년중 외국인 주식자금 순유출을 주도한 투자주체는 시기별로 달랐다. 자금 유출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2월중에는 글로벌펀드(투자회사)가 유출을 주도한 반면, 3월에는 글로벌 투자은행(이하 '글로벌IB')의 순유출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4월에는 연기금의 유출 기여도가 높았으며, 5월에는 다시 글로벌펀드가 대규모 자금 유출을 주도하였다(참고 6-5).

참고 6-5. 투자주체별 외국인 주식투자자금[1)] 증감[2)]



주: 1) 결제일 기준
2) 양(+)의 값은 순유입, 음(-)의 값은 순유출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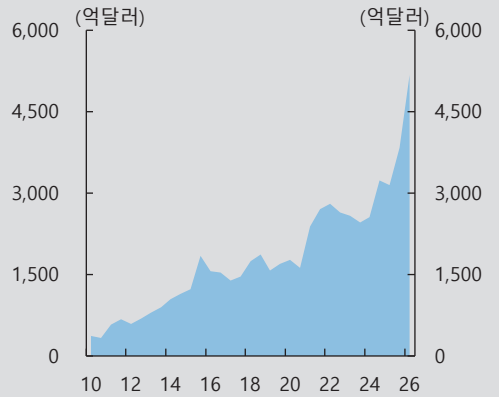
3월중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는 글로벌IB의 국내주식 매도를 촉발

중동분쟁이 격화되던 3월중 글로벌 위험회피성향이 확대되고 국내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에 민감한 글로벌IB들의 매도세가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글로벌 헤지펀드 등이 TRS(Total Return Swap)[173] 등 주식 연계 파생금융상품을 통해 높은 레버리지로 국내주식 포지션을 간접적으로 구축하고, 이들의 파생상품 거래상대방인 글로벌IB

[173] 주식연계 TRS(Total Return Swap)는 투자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USD 금리(SOFR + spread)를 지급하고 국내주가 상승률과 배당률의 합(total return)을 수취하는 스왑 거래를 의미한다.

는 헤지 목적으로 국내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금년 3월 국내주가 급락 등으로 주식 연계 파생거래가 일부 중도 청산되면서 글로벌IB의 국내주식 매도를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참고 6-6).

참고 6-6. 아시아[1] 주식 연계 파생금융상품[2] 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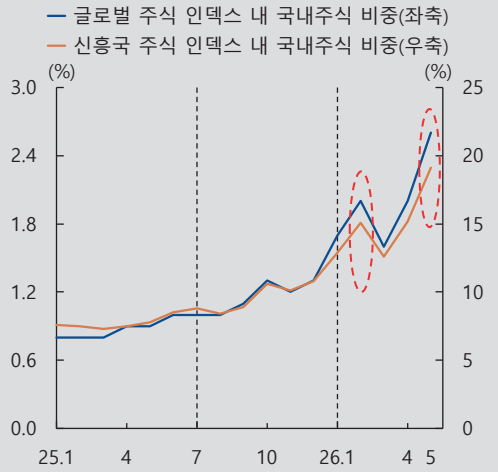
주: 1) 한국 포함, 일본 제외
2) 주식 연계 선도(forward) 및 스왑
자료: BIS

5월중에는 국내주가 최고치 경신에 따른 리밸런싱 및 차익실현 매도가 자금유출을 주도

반면 금년 2월 및 5월중에는 위험회피심리가 안정되고 국내주가가 최고치를 수차례 경신한 시기로 글로벌 자산배분이 중요한 펀드와 연기금에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국내주식을 매도할 유인이 커졌을 것으로 판단된다(참고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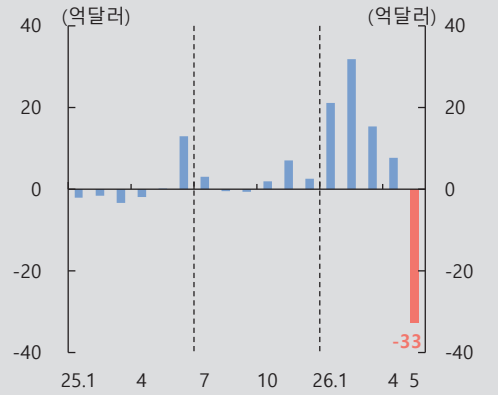
특히 국내 주식시장을 추종하는 주요 해외상장 ETF[174]가 5월 들어 국내주식을 매도 전환하는 등 글로벌펀드의 주식자금 유출 양상이 자산배분 차원에서의 리밸런싱뿐만 아니라 고객자금 인출 등 차익실현을 통해서도 일부 나타났다(참고 6-8).

참고 6-7. 글로벌 주식 인덱스 내 국내주식 비중



자료: Bloomberg

참고 6-8. 국내주식 해외상장 주요 ETF 순매수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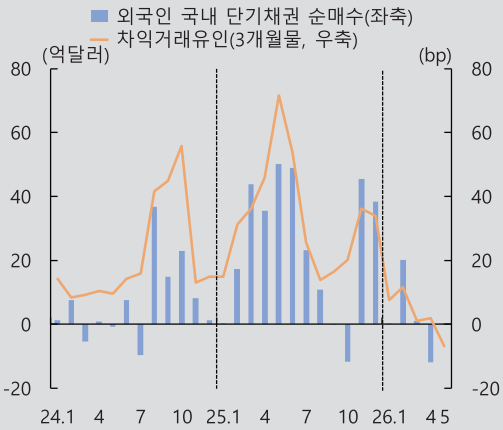
향후 전망 및 평가

향후 외국인 채권자금은 WGBI 추종자금 유입이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지겠으나, 여타 시장요인 등에 따라 전체 유입규모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단기 차익거래유인이 역전됨에 따라 단기채권 투자심리가 위축되었고, 대내외 시장금리도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어 WGBI 추종자금 이

174 iShares MSCI South Korea ETF(EWY), Franklin FTSE Korea UCITS ETF(FLKR) 등이 대표적이다.

외의 외국인 국내 채권투자는 당분간 완만한 유입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참고 6-9). 다만 WGBI 편입 이후 중장기 성향의 투자자 비중이 상승하고 신규투자자가 증가하는 등 외국인 투자 기반이 확대되고 있는 점은 향후 채권시장 약세 압력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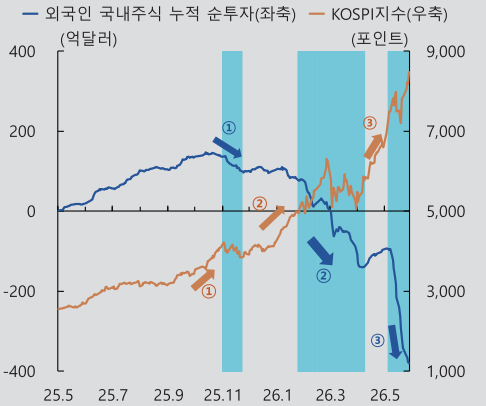
참고 6-9. 차익거래유인과 국내 단기[1] 채권자금



주: 1) 잔존만기 1년 미만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국자금중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반도체 업황 등 양호한 국내 실물경제 여건과 4월 이후 위험회피심리 안정 등에도 불구하고 최근 높아진 국내주가 수준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는 리밸런싱 목적의 자금 유출이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이후 국내주가와 외국인 주식자금 흐름을 비교하면 주가 상승 초기에는 자금 유입이 동반된 반면, 지난해 11월 이후에는 주식자금 유출이 주가 상승에 후행하는 리밸런싱·차익실현 성향이 반복적으로 관찰되고 있다(참고 6-10). 특히 연기금 등 자산별 투자 비중 조절이 중요한 투자자의 경우 국내주식 비중 확대폭이 내부적으로 정한 허용 범위(buffer)를 초과할 경우 추가적인 주가 상승에 따른 기계적인 매도는 이어질 수 있다.

참고 6-10. 외국인 국내 주식투자[1] 및 KOSPI지수



주: 1) 25년 5월 이후 누적 순투자 기준
자료: 한국은행 시산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은 외환수급 측면에서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만큼 신규 자금 유입경로를 발굴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최근 활성화되기 시작한 외국인 주식통합계좌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 및 지원이 긴요하다. 또한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통해 상대적으로 유출입 변동성이 낮은 선진국 투자 대상 패시브펀드의 국내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등 질적으로 투자자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외국인이 국내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밸류에이션 및 지배구조 측면에서 국내 기업의 매력도 제고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5. 금융제도 및 정책

(1) 주요 거시건전성정책 동향

부동산 시장 및 금융 부문 간 상호연계성 완화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금융당국은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안정화,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정책목표하에 가계대출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175]

우선 주요국 대비 높은 가계부채 수준, 최근 주택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2026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1.5%로 제한하는 한편,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낮추는 것을 중기 목표로 삼았다. 이에 따라 전년도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초과한 금융회사에 대해 초과분을 금년도 목표에서 차감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기타대출을 축소하는 대신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총량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또한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였다. 다만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 등 즉각적인 만기연장 제한이 임차인 보호나 시장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하였다(표 Ⅰ-5-1).

표 Ⅰ-5-1.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조치

기존	개선 방안	조치사항	시행 시기	비고
관행적 만기연장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주담대 만기연장 원칙적 불허	행정 지도	2026년 4월 17일	(예외) 임차인이 있는 경우, 법령상 의무 등 불가피한 경우

자료: 금융위원회

한편 가계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자대출을 활용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였다. 2021년 이후 취급된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용도외 유용 여부를 전면 점검하고, 사업자대출이 실제 사업목적이 아닌 주택 구입 등에 활용되는 사례를 차단하기로 하였다(표 Ⅰ-5-2).

표 Ⅰ-5-2.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적발시 조치사항

	기존	개선 방안	조치사항	시행 시기
신규여신 제한대상	해당 금융회사 사업자대출	전 금융권 모든 대출	금융업권별 준칙 등 개정	2026년 2/4분기
신규여신 제한기간	1차 적발1년, 2차 적발5년	1차 적발3년, 2차 적발10년		

자료: 금융위원회

아울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도 LTV 규제와 주택가격별 대출한도를 의무 적용함으로써 은행권 외 업권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제원칙을 적용하였다(표 Ⅰ-5-3).

표 Ⅰ-5-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대출규제 적용방안

	기존	개선 방안	조치 사항	시행 시기
LTV	없음	규제지역40% 비규제지역70%	행정 지도	2026년 4월 2일
주담대 대출한도	자율규제6억원	15억원 이하6억원 15~ 25억원4억원 25억원 초과2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이상의 방안들은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을 유도하고, 부동산 시장과 금융 부문 간 높은 상호연계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정책 운영과정에서 투기적·규제우회 차입수요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 간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175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26년 4월 1일)을 참고하기 바란다.

국내 외화 유입 촉진을 위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금융당국은 구조적인 외환시장 수급불균형 누적에 따른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상황에 맞춰 외환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176]

우선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177]와 관련된 감독상 조치 부담을 2026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178]하였다. 또한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경우 국내은행과 동일하게 75%의 선물환포지션[179] 한도 규제가 적용되었으나, 이들의 외국 본점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여 국내에서 운용하는 실질적인 영업구조를 반영하여 선물환포지션 규제를 200%로 완화하였다. 아울러 수출기업의 국내 시설자금 목적에 더해 운전자금 목적의 원화용도 외화대출도 추가적으로 허용하였다.[180]

한편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를 추진[181]하고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로서 외환파생상품 거래 시 위험회피대상 확인 절차가 필요 없다는 점도 명확히 하여 해외 투자자의 국내 투자 편의를 높였다. 이와 더불어 2026년 1~6월중 외환건전성부담금[182]도 한시적으로 면제하였으며, 1~12월중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183](표 I-5-4).

표 Ⅰ-5-4.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방안 주요 내용

조치 내역	주요 내용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감독상 부담 완화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른 유동성 확충계획 제출 등 감독상 조치를 한시적으로 완화
외국계은행 국내법인 선물환포지션 규제 조정	외은지점과 유사한 영업구조를 감안하여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 완화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수출기업에 대해 국내 시설자금뿐 아니라 국내 운전자금 목적의 외화대출도 허용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	외국인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통합계좌 이용 편의 개선
해외 상장 외국기업의 전문투자자 지위 명확화	해외 상장 외국기업의 외환파생상품 거래 관련 전문투자자 지위 및 절차 명확화
외환건전성부담금 한시 면제	2026년 1~6월중 금융기관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대한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
한시적 외화지준 부리 실시	2026년 1~12월중 금융기관의 외화예금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해 이자 지급

자료: 한국은행, 재정경제부

176 자세한 내용은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방안 마련」(25년 12월 18일), 한국은행 보도자료 「한시적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 조치 실시」(25년 12월 19일) 및 「한시적 외화지준 부리 실시」(25년 12월 19일)를 참고하기 바란다.

177 해당 스트레스 테스트는 위기 상황을 가정해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대응여력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감독당국에 유동성 확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178 금융기관들이 감독상 조치 부담을 우려해 평상시 영업에 필요한 수준보다 외화유동성을 과도하게 보유하는 측면이 있었다.

179 선물환포지션 제도는 과거 외국환은행을 통한 과도한 외화유입과 외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로, 은행별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순포지션(선물외화자산-선물외화부채) 비율의 상한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국내은행은 75%,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은 375%의 규제비율이 적용된다.

180 이는 수출기업의 외화조달 경로를 넓히고, 국내 외화자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181 이에 따라 해외 중소형 증권사 등도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해외 개인투자자의 국내 주식투자 확대를 통해 신규 외화자금 유입을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182 외환건전성부담금은 금융기관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부과되는 비용으로, 이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면 금융기관의 외화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외환시장에 외화를 공급할 유인이 확대될 수 있다.

183 외화지준 부리는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운용하던 외화자금을 국내에 예치할 유인을 높여 단기 외화자금의 국내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조치이다.

이를 통해 외화 유입을 촉진하고 금융기관의 외화공급 여력을 높임으로써 고환율·외화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외환건전성 규제의 구조적 완화라기보다는 시장불안 완화를 위한 한시적·탄력적 조치인 만큼, 향후 환율 및 외화유동성 여건을 보아가며 정상화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2) 기타 금융안정 정책 동향

업권별 자본규제 완화를 통한 생산적금융 공급여력 증가

금융당국은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은행과 보험업권의 자본부담을 완화하였다.[184]

먼저 은행권에서는 위험가중자산(RWA) 계산시 재발가능성이 낮은 대규모 손실사건을 3년 이상 운영리스크로 인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전제로 운영리스크 산출에서 제외하고, 구조적 외환포지션 승인 대상을 해외 장기 지분투자 및 해외점포 이익잉여금까지 확대하여 시장리스크 산출에서 제외하였다. 아울러 신용평가모형 변경 심사 기간을 단축하여 은행의 기업심사 역량을 제고하고, 자본여력 확충을 지원하는 한편,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시기[185]도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대내외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이다.[186]

보험업권에서는 K-ICS 비율 산출시 실질적인 위험수준에 비례하여 요구자본이 산출될 수 있도록 정책프로그램, 비상장주식·펀드 투자에 대한 위험계수를 하향 조정[187]하고, 인프라 특례 범위를 신재생에너지 및 AI 기반시설까지 확대하는 등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유인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고LTV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위

184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26년 4월 15일)를 참고하기 바란다.
185 스트레스 완충자본은 2024년말 도입 시행 예정이었으나, 금융안정을 위한 금융권의 건전성·유동성 여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로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안정 및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 24년 12월 19일).
186 위와 같은 자본규제 합리화 추진시 은행은 최대 74.5조원 규모의 기업대출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87 정책프로그램 투자(위험계수: 49% → 20%이하), 적격 벤처투자(위험계수: 49% → 35%)에 대한 조정 이외에도 비상장주식·펀드를 포함하여 정책프로그램에 10년 이상 투자계획 수립시 장기보유 특례(위험계수 20%)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험계수를 상향 조정[188]하고 은행권 및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하여 요구자본 산출시 내부모형 도입을 추진하여 투자여력 측정을 정교화할 계획이다[189](표 I-5-5).

표 Ⅰ-5-5. 업권별 자본규제 합리화 세부 내용

업권	세부 내용
은행업권	- 운영리스크 손실인식 합리화 - 구조적 외환포지션 확대 - 내부 신용평가모형 개선
보험업권	- K-ICS산출체계 정비 · 주식·지분투자의 주식위험액 감소 · 대출·채권의 신용위험액 감소 · 펀드 관련 주식·신용위험액 감소 ·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 상향 조정 - 요구자본 산출 보험사 내부모형 도입 - 유동성 프리미엄 산출기준 개선

자료: 금융위원회

이러한 자본규제 합리화는 은행·보험사의 자본 효율성을 높여 전략산업에 대한 직·간접투자, 대출, 인프라 투·융자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나아가 금융-실물 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증권회사 부동산 건전성 규제 강화를 통한 부동산금융 집중도 완화

금융당국은 부동산에 편중된 증권회사 자금을 모험자본 등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하고, 증권회사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동산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190]

우선 증권회사의 부동산 투자시 NCR(순자본비율) 위험값을 사업 진행단계, LTV 등 실질 위험수준에 부합하도록 차등하여 적용함으로써, 착공 전 단계이거나 담보여력이 낮은 고위험 사업장일수록 더 높은 자본부담을 지도록 할 계획이다[191](표 I-5-6). 또한 부실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는 위험값이 현행 수준(60%)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최저한도(60%)를 설정하기로 하였다.

표 Ⅰ-5-6. 증권회사 부동산 NCR 위험값 개선방안

	PF		Non-PF
	브릿지론	본PF	
고LTV (60% 이상)	90%	36%	18%
저LTV (60% 미만)	60%	24%	12%

자료: 금융위원회

아울러 증권회사의 부동산투자 한도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만 100% 이내로 관리했으나, 앞으로는 채무보증뿐만 아니라 대출·펀드 등을 포함한 부동산 총투자금액을 자기자본의 100% 한도 내에서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192]

---

188 LTV 60% 초과 80% 이하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위험계수를 3.5% → 4.0%로 인상하여 은행 위험가중치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정비한다.

189 위와 같은 제도 개선으로 보험업권은 추가 24.2조원 규모로 추가 자금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190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부동산 → 모험자본'으로의 전환 등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25년 12월 23일)를 참고하기 바란다.

191 기존 NCR체계에서는 동일한 부동산PF라도 대출(위험값 100%), 채무보증(18%), 펀드(60%) 등 투자형태에 따라 위험값이 달리 적용되어 실제 사업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특히 채무보증의 위험값이 낮게 적용되면서 증권회사의 부동산PF 리스크가 채무보증 형태로 축적될 유인이 존재하였다.

192 이에 따라 증권회사의 부동산 익스포저가 특정 투자형태를 통해 우회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업권 전반의 부동산 편중 리스크를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로 금리단층 해소

금융당국은 포용금융 확산을 위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193] 먼저 중신용자에게 더 낮은 금리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사잇돌대출의 적격 공급 요건을 중신용자 중심으로 개편[194]하고, 개인사업자 사잇돌대출을 신설하는 한편 판매채널을 여전업권[195](카드, 캐피탈)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기관의 자발적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고, 제2금융권 중금리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금리에 따라 차등화하는 한편, 업권별 규제 인센티브 신설·확대, 가계대출 규제 완화[196]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중금리대출 상품 구조 다변화와 금리 인하로 금리단층 해소, 중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및 이자 부담 완화[197]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향후 대외여건 변화 등에 따른 차주의 상환능력 저하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단일종목 ETF 출시 등 ETF 규제 완화

금년 5월 27일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로 하는 단일종목 ETF가 출시되었다.[198] 이는 그간 일부 해외상장 ETF에 비해 국내상장 ETF에 상대적으로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어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충족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금융당국은 국내 증시의 변동성, 투자자 보호 필요성, 거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가총액과 거래량이 풍부하고 파생상품 시장의 안정성이 검증된 우량주식[199]을 기초자산으로 우선 선정하였다. 또한 다양한 ETF 상품 개발 토대를 마련하고자 개별주식 및 ETF 위클리 옵션(Weekly Option) 상품 등도 출시할 예정이다[200](표 Ⅰ-5-7).

표 Ⅰ-5-7. 국내상장 ETF 규제 완화 내용

구분	규제 완화 전	규제 완화 후
최소 종목수	10종목 이상	최소종목수 적용 예외
단일종목 운영한도	자산총액의 30% 이내	동일종목 100% 한도
레버리지	지수 ETF 한정	특정 개별주도 가능
지수연동 의무	O (패시브: 0.9, 액티브: 0.7)	검토중

자료: 금융위원회

이번 제도 개선은 해외상장 ETF와의 규제 불균형 해소를 통해 국내 투자 자금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해외자금 유입을 확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일종목에 대한 고배

193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26년 4월 27일)을 참고하기 바란다.
194 사잇돌대출의 적격 공급요건을 '신용 하위 20~50%에 70%이상 공급'으로 개편하여 중신용자에게 집중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195 여전업권의 중신용자 고객 데이터 및 신용 평가 역량을 사잇돌대출 공급에 활용하여 8~12% 금리의 사잇돌대출을 공급함으로써 금리단층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96 금융회사 총량 관리실적 산정시 중금리대출 일부(최대 80%)를 제외하고, 중저신용자 생활안정자금(신규 출시)에 대해 신용대출 연소득 내 취급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197 중위 신용등급 보험료율 인하분만큼 사잇돌대출 금리가 감소하고 업권별 금리요건 인하분만큼 중금리대출 금리가 인하될 경우 최대 2,250억원 금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98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국내-해외상장 ETF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26년 4월 21일)을 참고하기 바란다.
199 직전 3개월 평균 시가총액 10% 이상, 거래대금 5%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는 우량주가 대상이며 2026년 상반기 기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선정되었다.
200 개별주식의 위클리옵션상품(6.29일) 및 ETF 위클리옵션상품(금년 하반기 중)을 출시하면서 옵션 대상상품을 확대하고,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위클리옵션상품의 거래개시일을 다양화(현행 월·목→개정 후 매일)할 예정(금년 하반기 중)이다.

율 투자수단이 제공됨에 따라 국내 우량주에 대한 고위험·고수익 수요가 흡수되고, 이는 국내 주식시장의 저변 확대, 가격 발견 기능 강화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기초자산의 시가총액 및 거래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다만 향후 관련 상품의 비중이 높아질 경우 레버리지 상품의 특성상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폭이 증가하면서 시장 전체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상품의 구조, 레버리지 특성, 음의 복리효과[201]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기 책임하에 투자결정을 내리는 한편, 금융당국은 매매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시적인 시장안정화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성능 AI 관련 금융권 보안 위협 대응 방안 마련

금융당국은 금년 4월 고성능 AI 발전으로 사이버 위협에 대한 우려가 급증함에 따라 업계 및 전문가와 다양한 논의를 진행[202]해 온 데 이어, 지난 5월 22일 간담회를 통해 고성능 AI로 인한 보안위협 상황 진단 및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203]

금융당국은 'AI는 AI로 방어하는' 보안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개선과 전문 조직 강화를 추진하고, 일정한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보안 목적에 한해 망분리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며, 나아가 고도의 역량을 갖춘 곳은 망분리 규제의 전면 해제까지 검토하고 있다. 또한, 민간 기술자문단과 금융권 협의체를 상시 운영하고, 금융보안원 조직을 개편하여 'AI 연구소' 및 'AI 지원센터'를 신설함으로써 연구 및 대응 기능을 대폭 고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실질적으로 보안 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및 가이드라인 마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AI 보안 위협 대비 가이드라인과 정보보안 체크리스트를 배포하여 취약점 점검을 지도하고, 긴급 보안 패치 시 발생하는 경미한 장애에 대해서는 임직원을 면책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세한 중소형 핀테크 기업의 보안점검 비용과 위험 관리체계 수립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러한 망분리 완화 조치 등을 포함한 주요 추진 과제는 올해 6월부터 순차적으로 실행될 예정이다.

---

201 음의 복리효과란 복리효과가 반대로 작용하여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경우 누적수익률이 저하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202 금융위원회는 2026년 4월 15일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은행·보험업권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등과 비상 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5월 11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재로 앤트로픽 사, 금융위원회,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과 함께 인공지능 분야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203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고성능 AI 관련 금융권 보안위협 대응 간담회 실시」(26년 5월 25일)를 참조하기 바란다.

(3) 지급결제시스템

결제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

2026년 1/4분기중 한은금융망 등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의 리스크 지표들은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보였다(그림 Ⅰ-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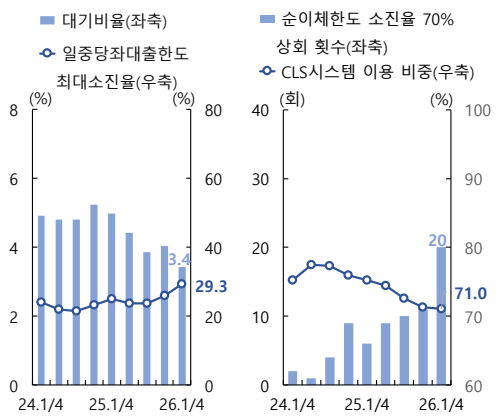
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에서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수준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였다. 대기[204] 비율은 3.4%로 전년동기(5.0%)에 비해 하락하였다. 일중당좌대출한도[205] 최대소진율은 29.3%로 전년동기(25.0%)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소액결제시스템(금융결제원 운영)의 경우 참가기관들의 순이체한도[206] 최대소진율은 14.0%로 전년동기(16.5%) 대비 하락하였다. 다만 순이체한도 소진율이 주의 수준(70%)을 상회한 횟수는 총 20회[207]로 전년동기(6회) 대비 증가하였다.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증권결제시스템은 장내결제가 주식과 채권 모두 기준시한(각각 16:00, 17:00) 이전에 완료되었으며, 장외결제 중에서는 주식기관투자자 거래의 기준시한(16:50) 이후 결제 사례가 2회 발생하였다.

외환결제의 경우 CLS 외환동시결제시스템[208]을 이용한 외환동시결제 비중은 71.0%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그림 Ⅰ-5-1. 지급결제시스템 리스크 지표



주: 1) 참가은행의 일별 '일중당좌대출 한도' 대비 '일중 순당좌대출 최고사용액'의 평균
2) 전체 대기금액이 총결제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결제유동성 절감을 위해 다자간 동시 처리되는 거래 제외)
3) 참가기관들의 일별 순이체한도 소진율 70% 상회 횟수
4)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의 외환거래 중 CLS시스템을 통해 결제된 비중

자료: 한국은행

204 한은금융망은 참가기관의 당좌예금 잔액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자금이체 신청을 대기열에 수록하였다가 자금 수취 등으로 당좌예금 잔액이 충분해지면 처리한다.

205 참가기관이 한국은행에 대출적격담보를 납입한 한도 내에서 당좌예금계좌에 예치된 금액을 초과한 지급 또는 결제요청이 있는 경우 일중당좌대출이 자동으로 실행된다.

206 전자금융공동망 등 소액결제시스템의 고객자금이체 순한도로서, 개별 참가기관이 시스템 전체에 초래할 수 있는 신용리스크 규모를 의미한다. 참가기관이 신규 고객자금이체를 신청하면 동 한도가 소진되며, 다른 참가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수취하면 동 한도가 복구된다. 한국은행은 참가기관으로 하여금 순이체한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담보를 사전 납입하도록 하는 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7 2020~2025년까지 분기중 평균은 18.8회다.

208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은행은 외환결제리스크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시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통결제시간대(중부유럽시간 기준 07:00~12:00)에 집중하여 거래를 동시결제로 처리한다. 현재 미 달러화, 유로화, 엔화, 원화 등 18개 CLS 결제통화의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한은금융망 등)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참고 7.

ESG 공시 제도화 동향 및 금융안정에 대한 시사점 [209]

최근 기업의 지속가능성(ESG) 공시는 전 세계적으로 선택적 보고가 아닌 법적 의무로 전환[210]되는 추세이다. 이는 기후변화 등 비재무적 요소가 기업의 재무 성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 기인한다. ESG 공시 제도화는 공시 정보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함으로써, ESG 분야의 자금조달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ESG 공시 제도화의 동향과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함의를 살펴보았다.

주요국의 ESG 공시제도 동향

현재 주요국의 ESG 공시기준은 대부분 IFRS 재단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2023년 6월 발표한 IFRS S1, S2[211]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각국은 ISSB 기준을 자국 법제, 거래소 규정, 산업 여건 등에 맞게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다.

주요국의 도입 현황을 보면, EU[212]는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 및 은행·보험사에 대해 환경·사회·지배구조 전반에 걸친 공시를 의무화하였다. 다만 최근 들어 적용 대상 범위와 시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미국[213]의 경우 연방 차원의 ESG 공시 도입은 유예되거나 조정 중이나, 일부 주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등을 제도화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 국가들은 주로 대기업의 기후정보를 중심으로 ESG 공시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싱가포르·홍콩·호주 [214] 는 2026년부터 상장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후정보 중심의 ESG 공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일본[215]도 2027년부터 시가총액 3조엔 이상 상장기업에 대해 기후정보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참고 7-1).

참고 7-1. 주요국의 ESG 공시제도 동향

국가	적용시점	공시대상	공시내용
EU	2025년	NFRD 적용 기업[1)]	ESG 정보
미국 캘리포니아	2026년	매출 10억 달러 초과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싱가포르 홍콩	2026년	상장기업	기후 정보
호주	2026년	매출 등 일정 규모[2)] 초과 기업	기후 정보
일본	2027년	시가총액 3조엔 이상 상장기업	기후 정보

주: 1) 자산총액 2,500만유로 또는 순매출 5,000만유로를 초과하고 임직원 수가 500명을 초과하는 상장기업 및 은행·보험사
2) 매출 5억달러, 자산 10억달러 또는 임직원 500명
자료: 각국 ESG 공시 감독당국

---

209 본고는 김재영 · 이연주(지속가능성장기획팀)가 작성, 민준기(지속가능성장기획팀장)가 검토하였다.

210 IFRS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전 세계 GDP의 약 57%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ISSB 기준을 법·규제 체계에 도입하기로 결정했거나 도입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들 국가는 전 세계 시가총액의 4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211 IFRS S1은 기업가치와 투자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일반 기준이며, IFRS S2는 기후 관련 위험·기회와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기준이다.

212 EU는 2022년 12월 지속가능성정보공시지침(CSRD)을 채택하여, 2025년부터 비재무정보 공시지침(NFRD) 적용 기업에 대해 환경·사회·지배구조 전 영역의 공시를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최근 기업 부담과 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Stop-the-Clock(25년 4월, 신규 대기업·상장 중소기업), Quick Fix(25년 7월, 임직원 750명 초과), Omnibus I(25년 12월, 1,000명 이상·매출 4.5억유로 이상) 등을 통해 적용 대상 범위와 시행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

213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의 SEC 기후공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중단되었으나,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주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가 제도화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자체 법률에 따라 연매출 10억달러 초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Scope 1·2·3 배출량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214 싱가포르와 홍콩은 2026년부터 전 상장기업에 Scope 1·2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하였다. 아울러 싱가포르 STI 지수 편입 기업에 대해서는 ISSB 기반 기후 정보(26년)와 Scope 3 배출량(27년)을, 홍콩항셍지수 편입 기업은 Scope 3 배출량(27년)을 추가 공시하도록 요구하였다. 호주 역시 대기업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Scope 1·2 배출량 및 Scope 3 배출량을 각각 2026년과 2027년부터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215 일본은 2028년부터 시가총액 1조엔 이상, 2029년부터는 5천억엔 이상 상장기업에 대해 기후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ESG 공시 제도화 방안

우리나라도 국제적 흐름에 맞춰 올해 2월 ESG 공시 제도화 방안을 발표[216]하였다. 정부는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후정보 공시[217]를 먼저 의무화할 방침[218]이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응한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등을 수립하여 공시해야 한다(참고 7-2).

참고 7-2. 우리나라의 ESG 공시 제도화 방안

구분	주요 내용
공시 시기 및 대상	- 2028년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부터 단계적 공시 시행
Scope 3 유예	- 2031년부터 공시(3년 유예)
공시기준	- IFRS 기준 기반으로 제정 - 일부 기준 완화(톤당 내부탄소가격, 산업별 지표의 경우 선택공시 허용)
공시채널	- 거래소 공시 도입 후 법정 공시 전환
공시시기	- 연말 결산시점(3월말) 공시 - 온실가스 배출량은 8월 중순 공시 허용

자료: 금융위원회 「ESG 공시 제도화 방안」(26년 2월 25일)

다만 국내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톤당 내부탄소가격, 산업별 지표 등에 대해서는 기업이 선택적으로 공시하도록 허용하고, Scope 3 배출량[219]의 경우 2031년부터 공시하도록 하였다. 한편 공시채널과 관련해서는 우선 거래소 공시로 운영 후 법정 공시[220]로의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공시시기는 연말 결산시점인 3월말로 하되, 온실가스 배출량에 한해 반기 결산시점(8월 중순) 공시를 허용할 방침이다.

ESG 공시 제도화의 금융안정 영향

금융시스템의 효율성과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에 기여

ESG 공시 제도화는 기후정보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효율성과 복원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변화는 물리적 리스크와 전환 리스크를 통해 기업의 영업환경 및 자산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고탄소배출 기업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기후리스크 취약 기업에 대한 익스포저를 보유한 금융기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산건전성 저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 시 기후변화를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고려[221]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후리스크의 영향을 정밀하게 평가하고 가격 등에 반영할 수 있는 기후정보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어야 하나, 현재로서는 관련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다수의 투자자들은 기업의 불충분한 기후정보 공시를 재무적 의사결정의 주된 제약요인으로 지적[222]하고 있으며, 국제 공시기준을 전면 이행하는 기업 또한 아직 일부[223]에 불과하다.

216 금융위원회는 금년 2월 25일 「ESG 공시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217 한편 기후 외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사안에 대한 공시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218 정부는 2029년부터 기후공시 대상기관을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공시 첫해에 한해 자산·매출액이 연결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는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219 Scope 1 배출량은 기업이 직접 배출한 온실가스를, Scope 2 배출량은 전기·열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량을, Scope 3 배출량은 기업의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기타 간접배출량을 모두 합한 것을 의미한다.
220 거래소 공시는 거래소 규정에 따른 공시로 상장회사에 대해 적용되며 위반시 제재금 및 벌점이 부과되는 반면, 법정 공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시로 위반시 과징금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221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2021)의 「기후변화와 한국은행의 대응방향」, 금융감독원(2021)의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222 TCFD 「2023 Status Report」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산운용사의 71%, 자산보유기관의 76%가 기후 관련 투자 결정시 '정보부족'을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꼽았다.
223 IFRS의 「Progress on Corporate Climate-related Disclosures-2024 Report」에 따르면, 글로벌 상장기업 3,814개사 중 82%가 11개 권고 공시 항목 중 최소 1개 이상을 이행했으나, 11개 항목 모두를 충족한 기업은 약 2~3%에 불과했다.

ESG 공시 제도화는 이러한 정보 부족을 해소하여 자산가격에 기후리스크가 적절히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자본배분의 효율성을 제고[224]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이 보유 자산의 잠재 손실을 식별·측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개별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실효성도 높이게 될 것이다.

거시건전성 감독 역량 강화 기반으로 작용

이에 따라 ESG 공시 제도화는 금융당국의 거시건전성 감독 역량 강화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FSB[225]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일관되고 비교 가능한 양질의 공시 인프라 구축이 기후리스크 관리의 필수 전제조건이며, 금융안정 감독의 출발점임을 강조해 왔다. 특히 기업 수준의 공시 데이터는 금융당국이 시스템 차원의 기후리스크를 조기에 식별·평가하기 위한 핵심 입력변수(input)로 활용될 수 있다. 즉, ESG 공시 제도화는 개별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능력 강화를 넘어, 금융당국이 기후리스크 대응을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 기반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충격에 대한 금융시스템의 대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도 운영시 국제적 정합성 및 신뢰성 확보 중요

다만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제약요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각국이 국제기준을 자국 실정에 맞게 조정·적용하는 과정에서 공시 요건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FSB[226]는 이러한 규제 파편화(fragmentation)가 ESG 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저하시켜 글로벌 자본시장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공시 제도화 초기에는 정보의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투자자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시사점

ESG 공시 제도화, 특히 기후 관련 리스크와 기회에 대한 공시 확대 요구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는 단기적으로 기업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자본이 ESG 이슈에 보다 강건한 부문으로 배분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기후정보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관리와 금융당국의 거시건전성 정책 수행을 뒷받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은 ESG 공시 제도화가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제도 시행 초기 기업의 공시 부담이나 국가간 공시기준 차이 등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아울러 ESG 공시를 통해 축적되는 기후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등 기후리스크 분석의 정밀도를 높이고 평가모형도 개선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내 금융기관이 공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후리스크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정책 공조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

[224] IMF에 따르면, EU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SFDR)의 세부 이행요건이 강화된(23년 2월) 이후 이를 충족하지 못한 다수 펀드의 친환경 등급이 하향 조정된 바 있으며, 최고 등급 펀드는 일반 펀드 대비 높은 자금 유입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IMF GFSR (2023.10) 제3장 「Financial Sector Policies to Unlock Private Climate Finance」를 참고하기 바란다.

[225] 자세한 내용은 FSB(2021) 「FSB Roadmap for Addressing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s」 및 FSB(2024) 「Achieving Consistent and Comparable Climate-related Disclosures」를 참고하기 바란다.

[226] 자세한 내용은 FSB(2024)의 「Achieving Consistent and Comparable Climate-related Disclosures」를 참고하기 바란다.